2020
공기업 청렴경영 성공·실패 사례집

공기업 청렴사회협의회

Success and Failure Casebook

발간사

청렴 대한민국을 만드는 값진 자료

"깨끗하고 투명한 공기업을 만들어 국민과 사회로부터 신뢰받는 공기업이 되고, 나아가 사회 전역으로 청렴문화를 확산시켜 청렴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공기업 청렴사회협의회는 「공기업 청렴경영 성공·실패 사례집」 개정판을 올해 새롭게 발간합니다. 지난해 처음 펴낸 사례집이 실무적으로 큰 도움이 되었다는 여러 기업과 기관의 의견을 반영한 것입니다.

이번 개정판에는 39개 회원사가 전원 참여하였으며, 사례는 기존 59건에서 122건으로 크게 늘어났습니다. 더욱 다양하고 구체적인 사례들을 많이 담았으니, 앞으로 청렴정책을 새로 추진할 때 이 책을 길잡이로 삼으시면 좋겠습니다.

개정판 발간을 계기로 우리 협의회는 '청렴과 투명'의 중요성을 국민들께 한 번 더 알리고, 우리 모두의 역량을 결집하고자 합니다. 공익을 해치는 잘못된 행위가 발생하면 다함께 신속하게 대응하고, 회원사 모두가 문제를 해결해 나가도록 머리를 맞대겠습니다.

나아가 이번 개정판이 공기업은 물론 민간기업과 일반 국민들께도 널리 읽혀 청렴한 대한민국을 만들어가는 값진 자료로 유용하게 쓰이길 기대합니다. 바쁘신 중에도 사례를 모아주고 공유해주신 회원사 관계자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0년 7월

공기업 청렴사회협의회 의장 김 종 갑

공기업 청렴사회협의회

목차 Contents

제1장 | 성공사례

모니터링 강화 | 투명성 강화 | 청렴문화 확산

(1) 모니터링 강화

성공01	법인카드 상시모니터링 시스템 도입 및 개편	**P.12**	한국전력공사
성공02	내부 인허가시스템 대국민 전면공개	**P.13**	국립공원공단
성공03	법정부담금 반환금 지급 결정 심의위원회 도입	**P.14**	한국환경공단
성공04	국민참여 품질평가단 운영 및 정보공개 강화	**P.15**	한국도로공사
성공05	국립공원 예약시스템 실시간 공개	**P.16**	국립공원공단
성공06	연구논문 표절검증시스템 운영	**P.17**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성공07	봉사활동 증명서 발급 모니터링 강화	**P.18**	대한적십자사
성공08	사무장 병원 및 면허대여 약국 근절을 위한 전사적 대응	**P.19**	국민건강보험공단
성공09	계약업무 불공정 요소 사전차단을 위한 제도 정비	**P.20**	국민건강보험공단
성공10	감사부서의 독립성 강화를 통한 부패유발요인 차단	**P.21**	대한적십자사
성공11	준법감시활동 운영매뉴얼 제작	**P.22**	대한적십자사
성공12	첨단 주차관제시스템 도입으로 세입 누수차단	**P.23**	서울시설공단
성공13	임직원「겸업 관리 기준」선제적 수립	**P.24**	인천국제공항공사
성공14	불합리한 관행 개선으로 공정한 건설문화 조성	**P.25**	한국가스공사
성공15	사업용자동차 안전관리실태 모니터링 강화	**P.26**	한국교통안전공단
성공16	통합 고정자산관리시스템 구축	**P.27**	한국마사회
성공17	청구오류 예방 프로세스 도입 및 개선	**P.28**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성공18	ICT를 활용한 사각지대 없는 구매 프로세스 구축	**P.29**	한국수력원자력㈜
성공19	공정계약 모니터링 시스템 도입	**P.30**	한전원자력연료㈜
성공20	연구과제용 소모품 관리방안 정립	**P.31**	한전원자력연료㈜
성공21	자금세탁방지제도 강화를 통한 회사 공공성 제고	**P.32**	그랜드코리아레저㈜
성공22	카지노 부패방지를 위한 신보안기술 적용 칩스 도입	**P.33**	그랜드코리아레저㈜
성공23	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클린페이」도입	**P.34**	㈜에스알
성공24	고속철도 지하 대심도터널내 수직대피로 안전관리 개선	**P.35**	㈜에스알
성공25	사내동호회에 대한 특정감사	**P.36**	㈜에스알

(2) 투명성 강화 인사분야 | 계약분야 | 기타분야

【인사분야】

성공26	인사 옴부즈만 제도 시행	**P.40**	한국수력원자력㈜
성공27	인사채용비리 신고자 포상금 지급제도 도입	**P.41**	한국중부발전㈜

성공28	정규직 채용 공정성 확보 프로세스 강화	**P.42**	한국마사회
성공29	청렴시스템을 적용한 채용제도 확립	**P.43**	㈜강원랜드
성공30	채용 전 분야 개선 및 소통확대로 채용공정성 강화	**P.44**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성공31	채용의 투명성 · 공정성 확보를 위한 제도개선 시행	**P.45**	대한적십자사
성공32	면접시험 일반인 참관제 도입으로 채용공정성 강화	**P.46**	한국남동발전㈜
성공33	AI를 활용한 채용 프로세스 혁신으로 공정채용 실현	**P.47**	한국수자원공사
성공34	채용비리 원천봉쇄를 위한 채용시스템 투명성 강화	**P.48**	한국전력기술㈜
성공35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공동채용 도입	**P.49**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성공36	승격검증위원회를 통한 청렴 윤리성 검증 강화	**P.50**	한전KPS㈜
성공37	직장 내 괴롭힘 등 피해 신고 및 처리 지침 마련	**P.51**	한국조폐공사
성공38	강력한 비리 근절대책 추진	**P.52**	㈜한국가스기술공사

【계약분야】

성공39	면식관계 형성 방지를 위한 「공사감독 이력 시스템」 도입	**P.53**	서울시설공단
성공40	구매계약 체결정보 실시간 공개	**P.54**	한전KPS㈜
성공41	제안서 평가 시 시민참여단 참관제도 도입	**P.55**	한국교통안전공단
성공42	계약규정에 재검수 실시조항 신설로 검수 투명성 제고	**P.56**	한국남동발전㈜
성공43	감리인 비리 예방을 위한 계약조건 강화	**P.57**	인천국제공항공사
성공44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불공정 계약관행 개선	**P.58**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성공45	수의계약 품목의 경쟁입찰 전환 확대	**P.59**	한전원자력연료㈜
성공46	수의계약 편중 방지 기준 마련	**P.60**	국립공원공단
성공47	자재관리, 부패유발요인 제거 및 투명성 강화	**P.61**	한국동서발전㈜
성공48	갑질 근절을 위한 선도적 이행체계 구축	**P.62**	한국지역난방공사

【기타분야】

성공49	비위신고 활성화를 위한 「익명신고자 보상제도」 시행	**P.63**	한국동서발전㈜
성공50	「기술마켓」 제도 도입으로 신기술 채택 투명화	**P.64**	한국도로공사
성공51	법인형 「카셰어링(Car-Sharing)」 제도 도입	**P.65**	한국철도시설공단
성공52	홍보성 물품 관리시스템 도입	**P.66**	한국토지주택공사
성공53	교차감사제도 도입을 통한 감사의 투명성 강화	**P.67**	도로교통공단
성공54	체육시설 예약자 본인 확인 시스템 도입	**P.68**	서울시설공단
성공55	내부회계관리제도 강화로 재무정보 투명성 확보	**P.69**	한국가스공사
성공56	회원제재 심의 시 대심 방식 심의제 전면 도입	**P.70**	한국거래소
성공57	서부청원(West Voice) 도입 및 운영	**P.71**	한국서부발전㈜
성공58	국민참여 예산제도 활성화로 예산편성의 투명성 강화	**P.72**	한국수자원공사
성공59	기술실시보상심의위원회 외부위원 참여 규정화	**P.73**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성공60	부패신고 위로금 제도 도입	**P.74**	한국철도공사
성공61	안심신고 변호사 제도 도입	**P.75**	한국철도공사
성공62	감사정보 게시판 신설 및 감사 지적사례 공유	**P.76**	한전KDN㈜

(3) 청렴문화 확산 대내분야 | 대외분야

【대내분야】

성공63	청렴소통전문가「클린마스터」제도 활성화	**P.80**	한국수자원공사
성공64	부패사건 재판참관제도 시행	**P.81**	한국남부발전㈜
성공65	「맞춤형 청렴체험 몰입교육」시행	**P.82**	한전KDN㈜
성공66	「청렴아이」선발 · 운영으로 청렴문화 확산	**P.83**	한국철도공사
성공67	사업소 청렴지킴이, 준(準)감사인 제도 시행	**P.84**	한국전기안전공사
성공68	감사준비금 지급제도 도입	**P.85**	도로교통공단
성공69	청렴자가진단 프로그램 운영	**P.86**	한국남부발전㈜
성공70	간부급 도덕성 검증 · 청렴사직 서약 실시	**P.87**	한국공항공사
성공71	지역별 청렴도 향상을 위한 특화사업 추진	**P.88**	국민건강보험공단
성공72	직원만족경영T/F 도입으로 주요 윤리이슈 해결	**P.89**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성공73	익명신고시스템 도입을 통해 내부신고 활성화	**P.90**	도로교통공단
성공74	내부직원 신고채널 신설, 내부신고 활성화	**P.91**	인천국제공항공사
성공75	신구 세대간 갈등관리 등을 위한 청렴콘텐츠 개발	**P.92**	한국남동발전㈜
성공76	CEO 참여 청렴선언 동영상 제작 및 공유	**P.93**	한국동서발전㈜
성공77	상사 갑질 근절을 위한「청렴인권 실천강령」선포	**P.94**	한국서부발전㈜
성공78	직원주도 청렴 BJ 방송 시행	**P.95**	한국서부발전㈜
성공79	청렴마일리지 운영	**P.96**	한국중부발전㈜
성공80	초지일관(初志一貫) 프로그램 도입	**P.97**	한국철도시설공단
성공81	내부신고에 대한 직원 인식개선으로 내부신고 활성화	**P.98**	한국조폐공사
성공82	부패방지경영시스템 국제표준 ISO37001 인증 획득	**P.99**	한국조폐공사
성공83	전사적 전문 청렴교육 시행('찾아가는 청렴교육')	**P.100**	㈜한국가스기술공사
성공84	우수협력사 선정 시 청렴성 평가 도입	**P.101**	한국전력공사

【대외분야】

성공85	협력회사 대상 부패방지경영시스템 구축 지원	**P.102**	한국동서발전㈜
성공86	반부패 청렴 ACADEMY 투어 운영	**P.103**	한국전력기술㈜
성공87	청렴콘텐츠 공모전 참여 확대로 청렴문화 확산	**P.104**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성공88	청렴문화 확산을 위한「청렴서약실」운영	**P.105**	한국지역난방공사
성공89	직무관련자 청렴식권 제도 운영	**P.106**	한국공항공사
성공90	협력사와의 윤리경영 상생협력 프로그램 운영	**P.107**	㈜강원랜드
성공91	미래세대 맞춤형 청렴교육	**P.108**	한국승강기안전공단
성공92	갑질 근절로 상생하기	**P.109**	한국승강기안전공단

제2장 | 실패사례

견제장치 미흡 | 모니터링 부실 | 제도 부작용 발생

(1) 견제장치 미흡

실패01	공공임대주택 임차권 양도 불법 승인	P.112
실패02	단기계약근로자 근태 허위기록 및 임금 과다지급	P.113
실패03	거래처에 회사 공인인증서 무단 유출	P.114
실패04	응급실 응급관리료 임의 취소 및 횡령 발생	P.115
실패05	사내 사회공헌활동 기금 횡령	P.116
실패06	소액물품 구매제도 악용 허위 물품 구매 및 횡령	P.117
실패07	정보시스템 관리자에 의한 데이터 위변조	P.118
실패08	익명성이 철저히 보장된 상담, 신고 채널 부재	P.119
실패09	자녀돌봄휴가 사용기준 미준수	P.120
실패10	검수업무 소홀로 인한 소모성 자재 허위 구매	P.121

(2) 모니터링 부실

실패11	안전관리비 증빙 확인절차 미흡	P.124
실패12	승진시험 자격 서류 위변조	P.125
실패13	단시간 근로 무기계약직 채용기준 부재	P.126
실패14	업무 세부기준 부재로 위험수당 부당 수령	P.127
실패15	해외출자회사 비용집행 규정 및 관리 미흡	P.128
실패16	휴면계좌 모니터링 시스템 부재에 따른 예치잔액 미회수	P.129
실패17	발명 기여율 임의 기재로 보상금 부당 수령	P.130
실패18	인터넷상에서의 법인카드 부정사용 사례 발생	P.131
실패19	가족수당 지급 확인절차 미흡	P.132
실패20	터널 특수 공법 관리 부재로 공사비 부당 지급	P.133

(3) 제도 부작용 발생

실패21	기관 자체 청렴도 내부평가 경쟁 과열	**P.136**
실패22	건설현장 식당 선정 시 발주처 이권 개입	**P.137**
실패23	직무관련자 접촉 자율신고제 운영 미흡	**P.138**
실패24	반부패 시민감시단 제도 폐지	**P.139**
실패25	폐광지역 제한경쟁 대상 입찰 제도 악용	**P.140**
실패26	민간분야 청렴문화 확산을 위한 윤리모니터링 추진	**P.141**
실패27	적극행정 면책제도 활성화를 위한 노력과 실패	**P.142**
실패28	청렴활동 마일리지 제도 운영의 직원 관심도 저조	**P.143**
실패29	예산집행 통제 제도 도입 효과 저조	**P.144**
실패30	부서(지사)별 청렴활동 과열 경쟁 유도	**P.145**

【참고자료】

참고01	공기업 청렴사회협의회 회원사 명단	**P.148**
참고02	공기업 청렴사회협약(전문)	**P.150**

공기업 청렴사회협의회

공기업 청렴경영 성공 · 실패 사례집

Successful Case

제1장 | 성공사례

모니터링 강화

법인카드 상시모니터링 시스템 도입 및 개편

부서별 법인카드 집행실적을 정기적으로 안내하고, 부적정 사용 소명 건에 대해 사용부서에 실시간 으로 소명 요청하는 시스템

◉ 추진 배경

- 지능형 감사기법 도입을 통한 체계적 감사업무 수행 권고(2008년 정부경영평가)

◉ 추진 경과

- 2010. 3. 법인카드 등 상시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및 시범운영
- 2010. 7. 법인카드 등 상시모니터링 시스템 전사 확대 운영
- 2019.10. 법인카드 상시모니터링 시스템 운영 개선

◉ 개선 내용

- **부서별 법인카드 집행내역 분기별 비교분석 및 분석결과 제공**
  - 전년/전분기 대비 증감내역, 전사 집행금액 상위그룹 등

구 분	개선 전	개선 후
사용내역	• 당해연도 해당월만 제공	• 전년/전분기 비교자료 제공 • 전사 대비 순위(ranking) 제공
안내서비스 (자정기능 강화)	• 감사실 및 사업소 감사파트	• 감사실 및 사업소 감사파트 • 동일규모 사업소 · 부서별 사용 실적 상위부서장에게도 통보

- **법인카드 목적 외 부적정 사용 의심 건 자동추출 및 사용부서에 실시간 소명요청**
  - 목적 외 부적정 사용 의심 건 자동 추출(7개 시나리오)

① 근무시간 · 휴일 사용, ② 원거리 사용, ③ 50만 원 이상 사용, ④ 동일거래처 반복사용,
⑤ 음식점 사용 후 추가(2차) 사용, ⑥ 휴일 하이패스, ⑦ 18~19시에 20만 원 이상 사용

◉ 개선 효과

- 동일규모 사업소 및 부서별 사용수준 공개로 자정 기능 강화
- 법인카드 부적정 사용 경각심 제고로 올바른 법인카드 사용 문화 정착

내부 인허가시스템 대국민 전면공개

내부 인허가시스템 외부인 공개로 국민 알 권리 충족 및 업무처리 투명성 제고

◉ 추진 배경

- 인허가신청 불허 시 사유 미공개로 신청인의 의심 및 민원제기 지속

◉ 추진 경과

- 2018.11. 인허가 처리현황 공개를 위한 정보공개시스템 개발 완료
- 2019. 3. 인허가 처리현황 대국민 공개 서비스 제공

◉ 개선 내용

- 외부인이 신청한 인허가 처리 전 과정 공개
  - 민원처리 담당자, 민원처리 신청건 별 세부내용, 처리상태, 접수일
  - 국립공원 구역 및 용도지구, 용도지구 내 가능한 행위 등

민원인 인허가처리현황 공개시스템(국립공원 홈페이지)

◉ 개선 효과

- 업무처리 투명성 제고 및 모니터링 기능 강화(불허 건수 기존대비 53.8% 감소)
- 인허가 결과에 대한 수용성 제고 및 민원 감소(불허 관련 민원 39.1% 감소)

법정부담금 반환금 지급 결정 심의위원회 도입

법정부담금 이의신청 시 반환 여부를 담당자 1인의 검토에 의존하다가 심의위원회를 통해 결정하도록 개선

◉ 추진 배경

- 폐기물부담금 등 부담금 또는 부과금 부과 고지에 따른 납부 의무자의 이의신청, 착오 납부 등에 따른 반환금 지급이 빈번하게 발생
  ※ 2017년도 이의신청 6건, 과오납 반환 268,341천원
  - 법정부담금 반환금 지급 결정시 담당자의 주관적 검토에 의해 결정

자원순환제도 운영에 따른 법정부담금(부과금)의 종류

구 분	폐기물부담금 (폐기물부담금 제도)	재활용부과금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환경성보장제도
법정부담금 또는 부과금	재활용이 어려운 제품 · 재료 · 용기를 제조 또는 수입하는 사업자에게 폐기물부담금 부과	제품 및 포장재 생산자에게 재활용의무 부여, 미이행시 재활용부과금 부과	전기전자제품 생산자에게 재활용의무 부여, 미이행시 재활용부과금 부과

◉ 개선 내용

- 2018년 반환금 지급결정을 위한 「반환금 지급 결정 심의위원회」 신규 설치 · 운영

구 분	개선 전		개선 후
이의신청	• 이의신청서 등 접수	▶	• 이의신청서 등 접수 • 심의위원회 안건 부의
검토	• 담당자 검토		• 이의신청 안건 심의(심의위원회)
반환통보	• 내부보고(부서장 전결)		• 심의결과 보고 및 결재

◉ 개선 효과

- 반환금 지급 타당성 및 적합성 등 심의의결 객관성 확보
- 부당반환 사전예방으로 국가재정 투명성 및 공정성 제고

국민참여 품질평가단 운영 및 정보공개 강화

고속도로 건설 시공품질 향상을 위해 국민참여 품질평가단 운영 및 정보공개 대상 확대

◉ 추진 배경

- 준공기한 준수를 위한 무리한 공정으로 시공품질 저하 및 부패개연성 상존

◉ 추진 경과

- 2018. 5. 고속도로 개통 및 준공 개선방안 검토
- 2018.11. 준공노선 대상 개정규정 적용 및 시행성과 점검

◉ 개선 내용

- **고속도로 준공년도 품질평가 절차 강화를 위한 "개통 전 사전평가" 신설**
  - (평가시행) 노선별 개통 6개월 전에 공사 주관부서의 장이 시행
  - (평가내용) 준공기한 내 개통 시 품질확보 가능여부 점검
- **고속도로 개통 시 자체평가 외 국민참여 품질평가단 운영제도 도입**
  - (평가시행) 노선별 개통 1개월 전에 공사 시행부서의 장이 시행
  - (평가단구성) 해당 노선 이용 시민, 운수업 종사자 등 이해관계자 20여명

시 기	개선 전	개선 후
D-6개월	-	• 개통 전 사전평가(신설)
D-3개월	• 예비준공검사	좌동
D-2개월	• 도로교통 안전점검, 포장주행시험 • 포장 조사, 구조물 초기점검	좌동
D-1개월	-	• 국민평가단 개통 전 평가(신설) • 언론사 기자단 정보공개(신설)
D-2주일	• 교통안전시설 합동점검	좌동
개통당일	• 개통	좌동

◉ 개선 효과

- 국민참여 품질평가단 최초 도입으로 고속도로 건설 시공품질 제고
- 정보공개 강화를 통한 행정 투명성 제고로 부실시공 및 부패 예방

국립공원 예약시스템 실시간 공개

성수기 국립공원 예약자 선정과정을 Social media를 통하여 실시간 생중계하고 예약부도자에 대해 국립공원 시설물 이용제한 기준 마련

◉ 추진 배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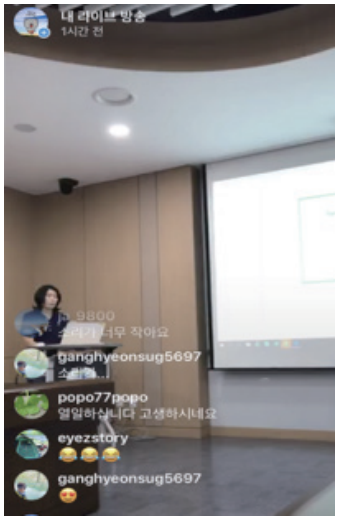
- 국립공원 이용 예약자 선정과정에 대한 불신·불만 민원 증가
- 예약부도(노쇼)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노쇼에 의한 피해자 발생

◉ 추진 경과

- 2018. 5. 국립공원 예약시스템 공정성 제고를 위한 대국민 의견 수렴
- 2018. 7. 랜덤방식 실시간 예약자 선정을 위한 시스템 개발 완료

◉ 개선 내용

- **성수기 국립공원 예약자 선정과정 공정성 도모를 위한 Facebook 실시간 생중계**
  - 국민대표 1명 선정(응모자 중)
  - 무작위프로그램을 국민대표가 클릭하여 선정
  - 추첨대상 : 대피소, 야영장
  - 추첨시기 : 여름성수기(7.15.~ 8.31.), 가을성수기(9.15.~10.31.)
- **예약부도자에 대한 국립공원 시설물 이용제한 기준 마련**
  - 1회 노쇼(예약 후 사전연락 없이 부도) 시 1개월 국립공원 시설 이용불가
  - 2회 노쇼 시 3개월간 시설 이용 불가



〈추첨제 생중계〉

◉ 개선 효과

- 예약자 선정과정 실시간 공개로 불신·불만 민원 기존 대비 93.8% 감소
- 예약부도자 이용 제한을 통한 노쇼 등 예약부도율 기존 대비 43.1% 감소

연구논문 표절검증시스템 운영

연구논문 및 최종 연구보고서에 대한 표절검사 절차 의무화

◉ 추진 배경

- 연구윤리 강화를 위해 논문표절에 대한 사전예방체제 구축 필요성 제기
- 조작이나 표절 등과 같은 '연구 진실성'을 검증하기 위한 관리시스템 구체화 요구

◉ 추진 경과

- 2016. 7. 「연구문서관리요령」 개정
  - 원고심의 의뢰 시 논문 주 저자가 자체 표절검사 결과확인서 첨부 의무화
- 표절검사 대상자료의 범위를 국제논문(영어)을 시작으로 국내논문(한글)과 기획보고서로 확대
- 2019.10. 「연구문서관리요령」 개정
  - 최종 연구보고서에 대한 표절검사 절차 의무화

◉ 개선 내용

- **연구논문 심사 시 논문 주 저자의 표절검사 결과확인서 첨부 의무화**
- **표절검사 결과확인서 내 표절검사 프로그램 실행 결과 첨부**
  - 영어논문 : iThenticate 프로그램* 활용
  - 한글논문 : Copy killer 프로그램* 활용

  * 연구논문 표절 여부 판정이 가능한 상용 소프트웨어
- **표절검사 절차 의무화 대상을 최종 연구보고서까지 확대**(2019.10.)

◉ 개선 효과

- 연구논문 표절 사전 예방체계 구축을 통한 연구자 윤리의식 강화
- 책임있는 연구수행을 유도하고 건전한 연구문화 조성을 통해 국민신뢰 회복

봉사활동 증명서 발급 모니터링 강화

봉사활동 증명서 허위발급을 방지하기 위해 증명서 발급 전산시스템을 구축하고, 봉사자의 봉사활동 인정 시 3중 확인 절차 신설

◉ 추진 배경

- 헌혈 등 봉사활동에 참여한 인원은 2017년 기준 연인원 190만명에 달하며 지속적 증가 추세이고, 학점 이수, 취업 시 봉사활동 증명서 제출 사례 증가
- 자원봉사활동의 참여자는 계속 증가하나 증명서 관리는 소홀(수기 처리)

◉ 추진 경과

- 2018. 3. 봉사활동 증명서 발급 전산시스템 구축

◉ 개선 내용

- **기존 수기로 운영하던 봉사활동 증명서 발급대장을 폐지하고 전산시스템 구축**
  - 봉사활동 증명서 발급 방식 변경 : 수기 대장 기록 ▶ 전산 기록
- **봉사활동 증명서 발급 시 3중 확인 절차 마련**

현장 근무자		현장 책임자		담당 부서장
• 자원봉사자 인적사항 및 활동내역 확인	▶	• 봉사활동의 진위 확인 • 봉사활동 실적서 확인	▶	• 봉사활동 실적서 확인 • 봉사활동 증명서 발급

- **자원봉사자에 대한 봉사활동 현장점검 강화**
  - 특정감사, 청렴시민감사관 등을 활용한 현장점검 강화 시행
- **「봉사활동 인정시스템」 관리를 위하여 외부위원에 대한 권한 강화**

◉ 개선 효과

- 봉사활동 신청, 승인, 확인 절차 등 프로세스 개선을 통한 부패행위 원천차단

사무장 병원 및 면허대여 약국 근절을 위한 전사적 대응

사무장 병원 사전예방 대응 방향과 전 주기별 관리대책으로 전사적 반부패·청렴정책 추진 견인

◉ 추진 배경

- 사무장 병원 등 영리추구 목적 개설기관은 국민 건강권 위협 등 사회적 이슈로 부각

◉ 추진 경과

- 사무장 병원 등 불법 개설 의료기관 근절을 위한 제도개선 중심의 사업 추진

◉ 개선 내용

- **의견수렴 및 공론화를 통한 정부 합동 종합대책 계획 수립 및 법률 개정**

기관장 의지		의견 수렴		공론화		대책 발표
• 이사장 취임 시 취임사 천명	▶	• 토론회 운영(3회) • 직원 · 기자 · 국민 참여	▶	• 국회정책 토론회 • 국회의원 · 교수 등	▶	• 정부 합동 종합 대책 계획 수립

- **사법경찰 권한 부여 등 10개 법안 시행 및 통과**

구 분	법률 조항
사법경찰 권한 부여	사법경찰직무법 제5조제8호 나.
면허대여 의료기관 개설 취소	의료법 제65조(개정)
의료인 면허대여 처벌조항 신설	의료법 제4조(개정), 제65조(개정), 제88조(개정)
의료법인 특수관계인 제한	의료법 제48조의2(신설), 제50조의2(신설)
행정조사 대상기관 확대	의료법 제61조(개정)
행정조사 거부기관 형사처벌 신설	의료법 제89조(개정), 제92조(개정)
면허대여 의료인 행정처분 강화	의료법 제65조(개정)
불법건축물 의료기관 개설 금지	의료법 제33조(개정), 제64조(개정)
의료법인 매매금지	의료법 제51조의2(신설), 제64조(개정), 제89조(개정)
사무장 형량 강화	의료법 제87조제1항(개정)

◉ 개선 효과

- 사무장 병원 개설 통로였던 의료생협 등 신규 개설 대폭감소(154개/'13년▶8개/'18년)
- 유관기관 공조 강화를 통한 단속강화로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 도모

계약업무 불공정 요소 사전차단을 위한 제도 정비

계약업무 부패 발생 가능성 사전예방 및 부패방지 장치를 통한 청렴의식 제고

◉ 추진 배경

- 계약업무 특성상 갑·을 관계가 발생할 여지에 따라 불공정 계약체결 등의 부패발생 가능성에 대한 규정개정 등 제도적 부패방지 장치 마련 필요

◉ 추진 경과

- 지속가능한 부패예방 장치 마련을 위한 규칙 개정 등 제도개선
- 계약업무 관련 비위 적발 및 예방을 위한 설문조사 및 의견수렴
- 계약의 공정성 제고를 위한 사전 예고제 실시 및 수의계약 건 공시

◉ 개선 내용

- **품질평가위원회 신설로 2단계 경쟁입찰을 통한 객관성·전문성 확보**
  - 계약은 계약부서에서 하되, 물품의 품질평가는 사업부서에서 실시하여, 계약 과정의 부패예방을 위한 견제장치 마련 및 계약의 객관성 확보
  - 청렴계약 이행서약서에 금품요구나 편의 제공 요청 시 공단 감사실에 신고할 수 있도록 연락처와 비밀보장 등을 안내
- **업무 관련 계약업체에 대한 만족도 조사 및 의견수렴을 통한 제도개선**
  - 100만원 초과 계약 건 400개 업체 담당자 대상 계약의 투명성·공정성· 청렴성, 청렴계약제 이행 여부 등 의견수렴
- **계약제도 발전을 위한 중소기업과의 상생협력 협의체 운영**
- **계약사업 사전 예고제 실시로 공정한 계약문화 정착 및 업체 참여 기회 보장**
  - 예산 5백만원 이상 계약 예정 현황 홈페이지 공개(479건, 2,516억 원)
  - 분기별 수의계약 건 통합공시(알리오) 공개

◉ 개선 효과

- 계약업체 의견수렴 및 부패신고 안내를 통한 계약업무 비리 예방
- 연간 계약 예정 내역의 공개로 계약업체의 예측 가능성 및 공정성 제고

감사부서의 독립성 강화를 통한 부패유발요인 차단

감사담당자의 소신 감사가 가능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인사 등 부패 잠재요인이 있는 사안에 대해 내부 통제장치를 마련함으로써 부패예방

◉ 추진 배경

- 감사부서 독립성 보장 근거 규정 부재
- 인사위원회 구성에서 감사부서의 장이 제외됨에 따라 부정 · 부패행위 취약 분야인 인사업무에 대한 사전 위험관리 기능 부재

◉ 추진 경과

- 2019. 1.「인사위원회 시행규칙」개정
- 2019. 4.「감사시행규칙」개정

◉ 개선 내용

- **감사부서의 독립성 보장 근거 규정 마련**
  - 감사담당자의 소신 감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 마련

사규명	개선 전	개선 후
감사 시행규칙	• 감사부서의 독립성 확보 조항 부재	• 감사부서의 독립성 보장 근거조항 신설
	• 적법한 감사활동에 따른 고소 · 고발 등에 대한 소송비용 지원 근거 조항 부재	• 감사활동 수행과정에서 형사 고소 · 고발 또는 손해배상 청구 등에 대해 변호사 조력 및 소송비용 등 지원 가능한 조항 신설

- **직원 인사제도에 대한 내부 통제장치 마련**
  - 감사부서의 장이 상시 관리·감독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 마련

사규명	개선 전	개선 후
인사관리지침	• 인사위원회 구성 시 감사부서의 장 제외 규정 명시	• 감사부서의 장 제외 규정 삭제

◉ 개선 효과

- 감사부서의 독립성 강화와 사전 위험관리 강화를 통한 부패유발요인 통제

준법감시활동 운영매뉴얼 제작

준법감시활동 체크리스트 계량화 및 업무매뉴얼 최초 제작

◉ 추진 배경

- 2015년 4월 비영리 공공기관 최초로 '준법감시활동'(일점검, 월점검, 분기점검) 제도를 운영 중이나, 다양한 업무환경, 준법감시 담당자 인사이동으로 인해 준법감시활동 곤란

◉ 추진 경과

- 2019. 7. 최근 3년간 감사사례를 바탕으로 내부통제 리스크 분석
- 2019. 10. 「대한적십자사 준법감시활동 운영매뉴얼」 제작

◉ 개선 내용

- **내부통제 리스크 분석 : 최근 3년간(2017~2019년 상반기) 감사 사례분석**

감사 사례분석		리스크 분석체계	리스크 도출 내용
3년간 총 1,167건	↘	잔여위험도 평가 = 고유위험 (목표중요도 × 발생가능성 × 영향도)	① **공통 리스크** 법인카드 모니터링, 회계증빙서류 등
회계별	일반: 424건 혈액: 584건 병원: 159건 →		② **회계별 리스트** • 일반 : 안전강사 관리, 봉사원 봉사기간 등 • 혈액 : 부적격 혈액 출고, 혈액봉사회 관리 • 병원 : 의약품 관리, 진료비청구, 심사 업무
감사 종별	종합: 837건 특정: 180건 복무: 150건 ↗	통제수준	

- **내부통제제도의 3S(Standardization, Simplification, Specialization) 실현**
  - 준법감시활동 체크리스트 계량화 및 업무매뉴얼 최초 제작

개선 전	개선 후
• 점검결과에 대해 O, X 표기	• 점검결과에 대해 전문화된 점수 배점
• 준법감시활동 업무매뉴얼 부재	• 준법감시활동 업무 표준 매뉴얼 제작

◉ 개선 효과

- 내부통제제도 업무 표준화 기틀 마련
- 준법 감시활동 체크리스트 계량화를 통한 부패위험 모니터링

첨단 주차관제시스템 도입으로 세입 누수차단

민간위탁주차장의 요금징수 대조 시스템 구축을 통하여, 투명한 주차료 징수 기반을 조성함으로써 민원 발생 감소 및 세입 누수차단

◉ 추진 배경

- 위탁업체가 수입금을 적게 보고하여 차기 운영업체 선정 시 예정가격이 낮게 설정되는 문제점 발생

◉ 추진 경과

- 2016.11. 요금징수 대조 시스템 구축 및 민간위탁주차장 요금징수 데이터 축적
- 2019. 7. 축적된 시스템 대조 결과 데이터를 통한 적정 원가조사 시행

◉ 개선 내용

- IOT를 활용한(검지기↔시스템↔운영실적) 요금징수 대조 시스템 구축
  - 주차장에 설치된 검지기를 통해 자동 수집되는 이용률과 민간위탁 주차장에서 보고하는 수입금 현황을 월별 대조, 확인 ▶향후 해당 공영주차장 실제 수입금 확인 및 추후 원가조사에 반영

점검계획도

	IOT 자동 수집 (주차장)		저장		주차장 제공데이터
처리과정	• 관제시스템(16개소) • 스마트폰(63개소) • 주차검지기(12개)	▶	TOPIS 센터	◀ ▶	● 위탁사별 운영실적 • 월별 총수입금 • 월별 급여현황
모니터링	• 월별 실적관리	▶	• 시스템 관리	◀ ▶	• 공단 데이터와 비교

- 스마트폰 주차 관제시스템 보급(실시간 모니터링)
  - 주차 정보 실시간 확인시스템 구축, 주차 시간 및 요금 자동 산정

◉ 개선 효과

- 투명한 주차료 징수의 기반 조성으로 민원 발생 및 현금결제 요구 감소
- 스마트한 주차 정책 수립을 위한 빅데이터 축적

임직원「겸업 관리 기준」선제적 수립

최근 임직원 온라인 활동 및 외부기관 강의 등 임직원 영리업무 및 겸업에 대한 관심이 증가함에 따라, 겸업 허가기준 관련 내부기준 수립

◉ 추진 배경

- 최근 임직원의 영리업무 및 겸업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는 반면, 기존 인사 규정의 영리업무 및 겸업 금지 조항을 복잡 다양한 겸업의 판단 기준으로 삼기에는 역부족
  ※ 사내 겸업허가 인원 : 2014년 3명▶2016년 4명▶2018년 5명▶2019년 41명
- 최근 사회적 이슈가 되는 유튜브 등 SNS 활동을 포함한 다양한 업종에 대해 공사 실정에 맞는 겸업 관련 자체 기준 수립 필요

◉ 추진 경과

- 2019. 6. 온라인 활동(유튜브) 및 겸업 허가 대상자 관련 감사실 특정감사 시행
- 2019. 8. 영리업무 및 겸업 허가 관련「겸업관리기준」수립 및 전 직원 공지

◉ 개선 내용

- **겸업 허가 판단기준 정립 및 업종별 세부 판단기준 수립 후 대내·외 전파**
  - 허가절차 : 직원 겸업 허가 신청▶겸업 허가 검토▶겸업 허가 통보
  - 판단기준 : "계속성" 및 "영리성"에 의거 겸업 승인 여부 판단

계속성		영리성
공사 업무 이외의 활동을 계속적으로 행할 경우, 금전적 이익에 상관없이 업무로 보며, 겸업 허가 신청대상	+	영리업무는 계속적으로 재산상 이득을 취하는 행위 • 영리업무는 원칙적 금지이나, 아래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겸업 허가를 받아 종사 가능 1) 직무 능률 감소, 2) 공사 업무에 부당한 영향, 3) 공사이익과 상반되는 이익, 4) 공사에 불명예 영향

- **겸업 허가 없이 대가성 강의 등 영리를 취하는 직원 제재를 위한 외부강의 횟수 제한**
  (겸업 허가자라도 월 4회, 연 12회 초과 금지 등 제한 기준 마련)

◉ 개선 효과

- 공무원의 유튜브 활동 등이 이슈가 되고 있음에도 이를 규제할 지침이 없는 상황에서 선제적 겸업 허가 관리기준 마련으로 공직사회 부패 예방에 기여

불합리한 관행 개선으로 공정한 건설문화 조성

민·관·공 협업 TFT 운영 및 불합리한 건설관행 의견수렴을 통한 집중 제도개선 시행

◉ 추진 배경

- 정부 국정과제인 '공정한 시장 질서 확립'의 선도적 이행 필요
- 건설 분야의 구조적 특성으로 인한 고착화된 불공정 관행 근절

◉ 추진 경과

- 2019. 1. 민·관·공 협업체계 확대[권익위, 공정위, 협력사(원도급, 하도급)]
- 2019. 3. 원·하도급자간 불합리한 관행 및 제도개선 의견수렴
- 2019. 5. 건설 분야 불공정 관행 제도개선 시행

◉ 개선 내용

- 건설 현장 불공정 관행 근절을 위한 「협력업체 상시제안 제도」 신설

상시 제안접수		개선방안 검토		개선방안 확정		처리결과 회신
협력업체 제안접수 (이메일 or 유선)	▶	본사 및 현장 담당자 (필요시 설계사 참여)	▶	경미 · 시급성 안건 장기 검토 필요사항	▶	제도 개선 내용 회신

- 건설 현장 불합리한 관행 근절을 위한 종합적 제도개선 시행
  - 제도개선 시행 : 총 41건(계약서, 관련규정 제·개정 등)
  - 기타개선 시행 : 총 35건(하도급사 교육 강화, 상생 워크숍 등)

구분	주요 개선내용
제도 개선	• 하도급 계약제도 개선(법적 하도급율 준수, 저가 하도급 방지 모니터링)
	• 불공정 행위 및 부당한 특약(부당 비용 전가) 금지
	• 원도급사 공기 연장 간접비 청구 시 각 하도급사분 포함 청구
	• 대금지급 투명성 제고를 위한 전자적 하도급 대금지급 시스템 도입
기타	• 하도급자 역량강화 교육 및 업무 처리절차 개선(상생워크숍 시 교육 시행)
	• 원·하도급사, 시공사 등 대상 갑질 연극 및 청렴결의대회(청렴서약) 시행

◉ 개선 효과

- 건설 분야 청렴도 점수 지속 상승(2017년: 7.97, 2018년: 9.60, 2019년: 9.76)

사업용자동차 안전관리실태 모니터링 강화

사업용자동차 안전관리 실태 및 자동차의 안전기준 위반 점검 등을 통한 교통 안전관리 강화

◉ 추진 배경

- 범정부 안전분야 반부패협의회 공공기관 분과 운영계획 및 기관별 중점과제통보(행정안전부 안전감찰담당관, 2019. 6.)

◉ 추진 경과

- 2019. 5. 범정부 안전분야 반부패협의회 공공기관 분과 운영계획 통보
- 2019. 6. 안전분야 반부패협의회 공공기관 분과 기관별 중점과제 통보
- 2019. 9. 사업용자동차 안전관리실태 모니터링 및 결과 보고

◉ 개선 내용

- **운수회사 교통수단 안전점검 및 안전기준 위반차량 현장 단속을 중심으로 특별합동점검반*을 구성하여 안전점검 실시**
  - (점검결과) 전국 116개 운수회사, 운행 중인 사업용자동차 점검·단속 결과 총 1,365건의 안전 미비사항 확인

구 분	개선 전	개선 후
운수회사 교통수단 안전점검	• 신설 (합동점검반 미운영)	• 운전자 및 사고관리, 운행관리, 교육관리, 자동차관리, 기타 위반 총 264건 확인
안전기준 위반차량 현장단속	• 신설 (합동점검반 미운영)	• 자동차 안전기준 위반, 불법 튜닝 및 등록 번호판 훼손 등 총 1,101건 확인

* 특별합동점검반 : 본사 10명, 지역본부 55명(교통수단 안전점검 42, 현장단속 13) 등 총 65명 운영

◉ 개선 효과

- 자동차 안전기준 위반 등에 대한 상시점검체계 구축으로 행정처분 강화 등 점검·단속의 실효성 확보
  - 경찰고발(경찰 합동점검) 47건, 교통행정기관 통보 1,268건, 현장시정 50건

통합 고정자산관리시스템 구축

RFID(Radio Frequency Identification : 무선인식) 기반 인프라 도입을 통한 통합 고정자산관리시스템 구축으로 효율적이고 투명한 자산관리 실시

◉ 추진 배경

- 공공기관 보유자산의 명확한 관리체계·시스템 구축으로 업무 투명성 제고
- 기존 수기 재물조사 방식의 문제점 보완으로 물적자원 보호 강화

◉ 추진 경과

- 2019.11.「고정자산관리규정」등 개정
- 2019.12. 고정자산관리시스템 구축 완료
- 2020. 2. 자산 DB정비 및 RFID 태그부착용역 완료
- 2020. 3. 新 고정자산관리시스템 오픈

◉ 개선 내용

- 통합자산관리(Total Asset Management) 체계 구축

구 분	개선 전	개선 후
관리단위	• 자산의 취득, 이동, 불용 등 업무 단계 마다 관리 담당자 상이	• 관리부서 및 시스템 일원화
관리방법	• 자산의 이동, 불용 등 변동 발생 시 관리부서 서면보고	• 全 관리업무 시스템화
이력관리	• 일반 물품으로 제한	• 미술품, 마필 등 중요자산 포함 확대

- RFID(Radio Frequency Identification : 무선인식) 도입으로 3m 내외 자산의 원격인식 구현

◉ 개선 효과

- 자산관리 전체 프로세스 전산화로 투명한 자산관리 가능
- 기존 수기 재물조사 대비 조사 시간 단축을 통한 업무 효율성 극대화

청구오류 예방 프로세스 도입 및 개선

「효율성, 자율점검 기능」을 강화한 청구오류 예방 프로세스 마련으로 의료 서비스 분야의 비정상적 관행 개선

◉ 추진 배경

- 보훈병원 영상의학과 전문의 판독 가산료 청구 위반으로 환수 및 언론보도

◉ 추진 경과

- 진료비 가산 청구 특정감사(6개 보훈병원) 실시
- 영상판독료 관리실태 자율 점검 실시
- EMR* 프로그램 개발 및 의료영상정보시스템(PACS)** 성능 개선

  * EMR(Electronic Medical Record ; 전자의무기록) : 모든 의료기록을 전자문서로 기록·보존하는 것

  ** PACS(Picture Archiving and Communication System ; 의료영상정보시스템) : X선, CT, MRI 등에 의해 촬영된 의료용 영상정보의 저장, 판독 및 검색 기능 등의 수행을 통합적으로 처리하는 시스템

◉ 개선 내용

- **진료비 가산 청구 특정감사 실시**
  - 영상진단료 판독가산 착오 정산 국비보상금 등 1,114백만원 환급 조치
  - 영상진단료 청구를 포함한 청구업무 전반에 대해 자율점검 및 개선 요구
- **부당청구 개연성 사전방지를 위한 영상판독료 관리실태 자율점검 실시**
- **시스템 개선을 통하여 소견서 미작성 등 위험 요소 원천차단**
  - 착오 청구 사전방지를 위한 EMR 프로그램 개발 및 PACS 성능 개선

구 분	개선 전	개선 후
EMR프로그램	• 미판독하거나 판독 소견서를 작성하지 못하는 위험요소 발생	• 미판독 점검 프로그램 개발 • 경과기록지 하단에 판독 전문의 소견 작성 서식지 신규 적용
의료영상정보시스템 (PACS)	• PACS SW의 기술지원 종료 및 성능 저하	• EMR DB 업그레이드 및 메모리 증설 • 서버 교체(진료정보교류영상)

◉ 개선 효과

- 자율점검 및 시스템 개선 이후 착오청구 사례 및 외부지적 사항 발생 없음
- 의료계의 고질적인 문제점 개선으로 급여청구 신뢰성 제고

ICT를 활용한 사각지대 없는 구매 프로세스 구축

구매프로세스-구매평가-구매통제 단계별로 ICT를 활용한 객관화된 정보제공 및 점검을 통해 국민들이 예측 가능하고, 국민의 눈높이에 부합하는 사각지대 없는 부패방지 프로세스 구축

◉ 추진 배경

- 객관화된 정보제공 기능 부재에 따른 자의적인 업무수행 및 외부의 불신 우려

◉ 추진 경과

- 2017. 9. 전자상거래시스템(K-PRO) 프로세스 - 구매평가 분야 요구사항 분석
- 2018. 9. 인터페이스 등 설계, 개발을 거쳐 K-PRO 오픈 및 해당 ICT기능 활성화
- 2018.10. 담합징후포착시스템 평가지표에 따른 시뮬레이션 후 정규버전 사용개시

◉ 개선 내용

- (구매프로세스 분야) 주요 절차의 시스템화 및 공개로 투명성 확보
  - 계약의 주요 프로세스 공개 / 검색조건 다양화

구 분	개선 전	개선 후
공개 정보	입찰 결과	• 계약진행상태, 담당자 정보, 입찰제한 해당 시 사유 등
검색 조건	입찰진행상태	• 입찰진행상태 + 입찰서 제출상태, 입찰

- (구매평가분야) 적격심사, PQ심사, 제안평가 심사의 전산시스템 개발

구 분	개선 전	개선 후
진행상황	업체 조회 불가	• 업체 조회 가능(마감여부, 서류제출여부, 유찰 여부 등)
제출·심사방법	오프라인만 가능	• 온라인 서류 제출 가능 / 온라인 심사 시스템 구축

- (구매통제분야) 담합징후포착시스템* 개선

구 분	개선 전	개선 후
분석대상	보조기기	• 보조기기 + 예비품 / 일반자재 / 공사 · 용역
분석방법	단일 기준	• 대상 확대에 따른 분석 대상별 별도의 기준 신설
정성평가 심사	1인 평가/기준 없음	• 평가자 확대(복수 평가) 및 체크리스트 활용

* 담합징후포착시스템 : 공급자별 투찰 패턴 등 분석 후 담합 가능성을 계량화하여 평가하는 시스템

◉ 개선 효과

- 프로세스 공개, 실질적 검색 확대를 통한 투명성 확보
- 구매 프로세스의 평가, 통제에 대한 예측 가능한 관리시스템 신설

공정계약 모니터링 시스템 도입

계약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공정 사례와 갑질행위 여부를 확인하여 재발 방지 및 업무 개선을 위한 모니터링 시스템

◉ 추진 배경

- 맞춤형 시스템 운영을 통해 계약상대자에 대한 권익 보호 및 공정계약 실현

◉ 추진 경과

- 2019. 7. 공정계약 모니터링 시스템 설계 및 시범운영
- 2020. 1. 공정계약 모니터링 시스템 상시 운영

◉ 개선 내용

- **홈페이지를 활용하여 계약 단계별 모니터링 실시**
  - 계약체결 전, 계약이행 중, 계약종료 후 등 3단계로 나누어 체크리스트 운영

계약체결 전	▶	계약이행 중	▶	계약종료 후
계약 조건 등 10개 항목		갑질 여부 등 9개 항목		대금 지급 등 6개 항목

- **주요 점검 항목**
  - 계약시방 내용 임의 변경, 추가적인 과업지시, 부당한 책임 부여, 명시되지 않은 비용에 대한 부담 여부
  - 계약이행 중에 대금지급과 관련한 부당한 요구와 갑질 경험 및 사례
  - 비효율적 업무처리 경험, 부당한 대우 여부 등

- **계약상대자에 대한 업무처리 적정성 확인**
  - 모니터링 이용 안내문 발송, 불편 및 애로사항 접수

개선 전	개선 후
• 계약자 중심의 일방적 업무처리	• 계약상대자 의견 반영 및 후속조치

◉ 개선 효과

-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을 통한 계약 불공정 행위 예방으로 회사 청렴도 향상
-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동반성장 채널 활성화

연구과제용 소모품 관리방안 정립

회사에서 수행하는 연구개발과제에 필요한 사무·전산용 소모품의 관리방안을 규정화하여 청렴한 연구문화 조성

◉ 추진 배경

- 연구과제용 소모품 관리에 대한 업무 개선요구(2019년 자체감사)

◉ 추진 경과

- 2019. 6.「연구과제용 소모품 관리기준」수립 및 전 부서 배포
- 2019. 9. 연구과제용 소모품 관리대장 작성 의무화
- 2019.10. 연구과제용 소모품 집행실적 수집(분기별)

◉ 개선 내용

- **연구과제별 구매 방법 단일화 및 임의사용에 대한 내부통제 강화**
  - 품목별로 단가계약을 통해 구매하고 연구과제와 관련이 없는 소모품은 미지급

구 분	개선 전	개선 후
구매 방법	• 연구과제별 자체 구매	• 품목별 단가계약 구매
지급 방식	• 신청형 방식 (연구과제 관련 여부 미확인)	• 사전 허가형 방식 (연구과제와 관련이 없는 경우 지급 불가)

- **연구용 소모품에 대한 관리기간 설정 및 사용실태 점검**
  - 소모품은 무상보증 기간 + 1년간 관리하고, 유형자산성 물품은 4년간 관리
  - 수시 점검을 통해 연구용 소모품에 대한 윤리적 사용 유도

구 분	개선 전	개선 후
관리기간	• 별도 기준 없음	• 소모품* : 무상보증 기간 + 1년 • 유형자산성 물품: 4년
실태점검	• 미실시	• 수시 점검

* 사용 즉시 소멸되는 물품 등은 제외하며 무상보증기간이 없는 경우 1년간 관리

◉ 개선 효과

- 효율적 관리방안 정립으로 예산 절감 및 청렴한 연구문화 정착
- 연구용 소모품에 대한 관리책임 강화

자금세탁방지제도 강화를 통한 회사 공공성 제고

다양한 국적의 사람들이 각종 외화를 환전하는 외국인 전용 카지노인 만큼 자금세탁을 방지하기 위해 높은 수준의 자금세탁방지제도 운영

◉ 추진 배경

- 외국인 전용 카지노에서 발생하는 불법 자금세탁 및 의심 거래 차단 필요

◉ 추진 경과

- 2018.11. 금융정보분석원 카지노업 위험기반 접근평가 적용에 따른 업무기반 조성
- 2019. 6.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국가 간 상호평가 한국대표로 실사 대응

◉ 개선 내용

- **STR* 상세 분석 강화**
  - 의심거래 유형, 빈도 등 분석 범위를 확대해 금융정보분석원 심사분석 지원
- **CDD** 지속적 고객확인 강화**
  - CDD 입력 보완 부서별 협조 요청 및 정보 검증 이행 확대(1회▶3회)
  - 신규고객, CDD발생 고객 등을 분류해 재방문 시 고객확인 100% 달성
- **위험평가모델 관리 노력 지속**
  - FATF 국가위험평가결과를 내부위험평가모델 평가에 반영
  - FATF 권고사항 반영 이란 국적 고객 입장 시 거래 유형과 무관하게 EDD*** 즉시 이행

* STR(의심거래보고제도) : 불법재산 또는 자금세탁행위라고 의심되는 근거가 있는 경우 금융정보분석원에 보고하는 제도
** CDD(고객확인제도) : 고객과 금융거래시 고객의 신원, 실제소유자, 거래목적, 자금원천 등을 확인하는 제도
*** EDD(강화된 고객확인제도) : 기존 CDD 외에 주소, 연락처등 추가사항을 확인하는 제도

◉ 개선 효과

- 2018년도 자금세탁방지제도 정부종합이행평가 카지노업 종합 1위 달성

평가지표명	GKL 평가점수			업계평균		업계최대	
	2017년	2018년	전년대비	2017년	2018년	2017년	2018년
STR 내용 충실성	2.05	13.0	+10.95	1.61	2.14	15.00	16.00
지속적 고객확인 비율	1.23	4.00	+2.77	2.24	2.57	4.00	4.00
위험평가모델 관리 여부	3.00	5.00	+2.00	1.36	3.14	3.00	5.00

카지노 부패방지를 위한 신보안기술 적용 칩스 도입

한국조폐공사와의 협력을 통한 신보안기술 적용 칩스를 도입하여 능동적이고 선제적인 카지노 부패방지 실현

◉ 추진 배경

- 전 세계적으로 위조칩스와 관련한 사건 사고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으며, 이에 대해 능동적이고 선제적인 카지노 칩스 관련 부정사고 예방활동의 일환으로 칩스 보안 강화 필요

◉ 추진 경과

- 2018. 9. 한국조폐공사와 신보안기술 적용 칩스 생산 관련 MOU 체결
- 2019.10. 민관 협업을 통한 신보안기술 적용 칩스 제작
- 2019.12. 신보안기술적용 카지노 칩스 및 기기 도입

◉ 개선 내용

- **한국조폐공사와 협력적 파트너십 체결**
  - 위변조방지에 있어서 세계적인 기술력을 보유한 한국조폐공사와 협력적파트너십 체결을 통한 최신보안기술 게임칩스 제작
  - 외산기술의 국산화를 통한 보안 수준 제고
- **한국조폐공사 및 중소기업 협력을 통한 신보안기술 적용 카지노 칩스 및 기기 도입**
  - 게임칩스 519,000개, 칩스감응기 176대, RFID 리더기 31대 도입
  - 위변조 불가능한 추가보안 특허기술 도입으로 복사 및 위변조 실시간 확인
  - 데칼스티커 복사 불가, 특수감응물질 디텍터기로 위변조 실시간 확인 가능

◉ 개선 효과

- 신보안기술 적용 칩스 도입으로 능동적이고 선제적인 카지노 부정사고 예방
- 중소기업 기술이전 등 상생협력 기반 마련
- 외산기술의 카지노 물품 국산화

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클린페이」도입

금융기관과 연계하여 발주기관이 지급한 공사대금이 건설근로자, 장비/자재업체에게까지 적기에 적정하게 대금이 지급되도록 하고 실시간 지급확인이 가능한 공정거래시스템

◉ 추진 배경

- 공정거래 질서 확립과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한 상생 협력관계 구축
- 신속한 납품대금 결제지원으로 중소협력기업 경영환경 개선

◉ 추진 경과

- 2018.12. 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 도입
- 2019. 3. 건설 노무자 대금 직불 시행
- 2020. 3. 시스템 활용 조건부 계약발주 시행(3건)

◉ 개선 내용

- 금융기관과 연계한 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 도입

구 분	개선 전	개선 후
지급보장	• 대금 인출 통제 불가(체불발생) • 대금 지급여부 실시간 확인 불가	• 전용계좌를 통한 하위사업자 지급 보장 • 은행 연계를 통한 실시간 확인
적정성 검증	• 청구내역 적정성 검증방안 부재 • 대금수령 적정성 검증방안 부재 • 선금사용 적정성 검증방안 부재	• 청구내역 검증을 통한 모니터링 강화 • 대금수령 검증을 통한 체불방지 • 선금사용 검증을 통한 하위사업자 보호
편의기능	• 내부재정시스템 비연계로 불편 • 현장 민원 현황 파악 불가 • 대금지급 확인업무 가중	• 내부재정시스템 연계를 통한 효율성 증대 • 앱을 통한 체불, 민원신고 등 소통강화 • 대금지급 확인업무 경감 및 자동화

◉ 개선 효과

- 지급보장 및 적정성 검증을 통한 각종 대금 지급 투명성 확보
- 하도급 대상 계약에 적용하여 하도급 체불 원천봉쇄

고속철도 지하 대심도터널 내 수직대피로 안전관리 개선

㈜SR 전용선 수직구 내 이례사항 발생 시 이용자의 안전확보를 위해 수직구 피난 설비 및 비상용품 관리 상태에 대한 유관기관 합동 안전점검 시행

◉ 추진 배경

- 국내최장 대심도 고속철도 구간 내 열차 화재 등 재난사고 발생 시 유일한 옥외 대피설비(수직구)에 대한 운영사 관점의 안전성 확보

◉ 추진 경과

- 2019. 4. 행정안전부 범정부 안전분야 반부패협의회 개최
- 2019. 5. 행정안전부 범정부 안전분야 반부패협의회 운영계획 통보
- 2019. 8. 유관기관 합동 현장점검
- 2019.12. 수직구 안전관리 개선 관련 최종 현장점검

◉ 주요 내용

- **수직구 합동 안전감찰을 통한 「철도시설의 기술기준」에 따른 제반 규정 이행실태 점검**
  - 수서~지제역 간 수직구(13/17개소)에 대한 유관기관 합동 점검결과, 총 50건*의 안전시설 및 비상용구호품의 정상기능 미확보·유지보수 미흡사례 지적
    * 안전시설 하자 등 정상기능 미확보(47건), 비상구호품 관리 부실 사례(3건)
  - (안전시설) 대심도 수직구(지하 50m이상)의 구조적, 관리적 취약요인(보수지연)으로 비상E/L 운행불가 다수 지적(11건)
  - (대피동선) 수직구 횡갱 내 보수용품, 폐기물 등 적치로 인한 대피동선 지장사례 일부 지적(2건), 통신음영 다수 확인
  - (비상용품) 비상구호용품 관리 및 점검체계 부실 지적(3건)
  - (제도개선) 수직구 옥외대피시 항공사에 준한 비상매뉴얼 재정비 및 대국민 홍보 권고 (인명구조 최우선원칙 적용)

◉ 개선 효과

- 안전감찰 지적사항 관계기관/부서 통보(47건) 및 행정처분(3건) 요구
- 관계기관 유지보수 조치계획(완료) 및 자체 개선대책 마련

사내동호회에 대한 특정감사

사내동호회에 집행된 비용에 대한 적법성·타당성 등을 점검하여 부정·오류를 시정·예방하고, 불합리하고 비효율적인 제도개선

◉ 추진 배경

- 사내동호회 운영 전반에 대한 적법성·타당성 등 점검 후 개선책 마련

◉ 추진 경과

- 2019.11. 사내동호회 특정감사 시행 계획
- 2019.11. 사내동호회 특정감사 시행 및 이의신청 접수
- 2020.12. 사내동호회 특정감사 이의신청에 대한 검토 및 처분요구

◉ 개선 내용

- **정부 및 타 기관 규정을 토대로 당사 제도의 미비점 발굴 및 개선책 마련**
  - 사내동호회비 집행 부적정

개선 전	개선 후
• 동호회비 규정 외 임의사용 • 이사회 의결 없이 동호회비 이월 사용	• 부적절한 동호회비 및 잔여 동호회비에 대한 환수조치 시행 및 관련자 처분

  - 사내동호회 운영·관리 미흡

개선 전	개선 후
• 관리부서 「사내동호회 운영기준 개정(안)」 미배포 및 동호회 심의위원회 미개최 • 동호회 관련 관리 소홀(서류, 명단 등)	• 동호회 신설 · 폐지, 평가, 활동비 지급 사항에 대해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토록 함 • 동호회비 부적절 사용 및 활동실적 없는 동호회에 대해 조치시행

  - 사내동호회 제도 미비

개선 전	개선 후
• 現 제도상 부적절 동호회 운영에 대한 제재 수단 없음	• 「사내동호회 운영기준」에 '동호회 활동지원금 집행 유의사항' 및 '환수' 조항 신설

◉ 개선 효과

- 「사내동호회 운영기준」 개정 및 신규 조항 추가로 철저한 운영 및 재발 방지

공기업 청렴사회협의회

공기업 청렴경영 성공 · 실패 사례집

Successful Case

제1장 | 성공사례

투명성 강화

인사분야 | 계약분야 | 기타분야

성공 26 | 한국수력원자력(주)

인사 옴부즈만 제도 시행

인사(人事)분야 비정상 사례 등을 직원으로부터 접수받아 독립적이고 공정하게 검토·판단하여, 필요한 제도개선 의견은 실무부서에 권고하고 처리 결과를 피드백하는 제도

◉ 추진 배경

- CEO 인사원칙 구현을 통한 공정 · 투명한 인사문화 조성, 조직 전반의 긍정적 변화유도 필요

◉ 추진 경과

- 2018. 8. 인사옴부즈만 제도 도입, 운영
- 2019. 1. 운영범위 확대(기존 인사분야 ▶ Credo 위반, 양성평등 분야 검토범위 확대)
- 2019. 3. 상시면담 프로세스 마련, 방문 면담 시행(아부다비지사, 한울/한빛/월성본부 등)

◉ 개선 내용

- 제도 개요
  - 위원 : 사외위원 3인(HR/법률 전문가, 양성평등 전문가, 다양한 근무경험 있는 퇴직직원 등)
  - 절차 : 제보접수 ▶ 사실관계 확인 ▶ 검토 ▶ 후속조치* 및 제보자 피드백

  * 관련부서에 개선 권고, 인사비리 등 중대사안은 감사실 조사 의뢰
- 운영 현황
  - 제보접수 현황 : 총 65건 접수(60건 검토 및 피드백 완료, 5건 검토 중)

구분	이동	승격	보직	평가	기타	합계
2018년	5	2	-	1	1	9
2019년	12	2	3	2	10	29
2020년	15	1	-	-	11	27
합 계	32	5	3	3	22	65

  - 현장면담 시행 : 4개 사업소 약 150명[UAE(35),한울(23),한빛(49),월성(41)]
  - 제도개선 권고 : 총 23건 권고(완료 12건, 진행중 8건, 장기과제 3건)

  ※ 대표사례 : 직위해제 처분 개선, 배우자 출산휴가 개선, 관내발령 부적정 처리 감사의뢰 등

◉ 개선 효과

- 외부위원의 중립적 검토의견 피드백으로 불만 완화, 사내 유언비어 예방
- 인사·조직문화 저해요인 파악 및 제도개선을 통한 공정 기업문화 확산 기여

인사채용비리 신고자 포상금 지급제도 도입

인사 채용 비리 건으로 신고되어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처분에 이른 경우 신고자에게 포상금 500만원 지급

◉ 추진 배경

- 공공기관 채용비리에 대한 국민적 관심 증가
- 채용비리 적발을 위한 임직원 및 시민 참여 분위기 조성

◉ 추진 경과

- 2018. 4.「인사채용청탁 신고 포상금 지급 시행(안)」 수립·시행
  - 신고분야 : 상반기 4직급 공채 관련
  - 접수기간 : 4.18~7.18(3개월)
  - 언론매체, SNS를 통해 채용비리 신고 포상금 지급 홍보
- 2018. 7. 인사(승격·보직·이동)분야 비리신고 확대·연장 시행

  ☞ (결과) 인사채용비리 신고 및 대외지적 사례 없음

◉ 개선 내용

- 채용비리 관련 내외부 신고사례 중 청탁금지법 위반 등으로 처분 또는 판결된 건에 한하여 500만원 포상금 지급제도 마련
- 포상금 지급제도 시행내용 전 직원 교육, 인터넷 홍보 및 배너 설치

◉ 개선 효과

- 채용비리 신고제도 시행으로 자발적인 비리근절 활동 유도
- 공공기관의 채용 투명성 확보 노력 홍보로 국민의 기대수준 충족

성공 28 | 한국마사회

정규직 채용 공정성 확보 프로세스 강화

채용단계별 부패유발요인 사전차단 및 채용 내부통제 강화를 통한 채용공정성 강화

◉ 추진 배경

- 공공기관으로서 국민 눈높이에 맞는 공정한 채용문화 정착 추진
- 채용비리 발생 가능성 차단을 위한 제도 정비

◉ 추진 경과

- 2014.~2015. 서류 전형시 스펙(학점, 어학) 배제, 미션과제 부여
- 2016.~2017. 직무연관성 있는 스펙(자격, 경력)만 기재하여 평가
- 2018.~2019. 블라인드 미비점 보완으로 간접 노출되는 편견 요소 차단

◉ 개선 내용

- **채용단계별 위험요인 개선으로 더 공정한 블라인드 채용 운영**

구 분		개선 전	개선 후
적용대상		• 수시채용 직군은 블라인드 채용 사각지대	• (대상확대) 일반직, 청년인턴 + 전임직까지 확대
서류전형		• 주소기재로 지역 편견 발생 가능	• 원서접수 단계의 주소기재란 삭제
필기전형		• 본인확인 시 생년월일(6자리) 대조로 나이에 따른 편견 발생 가능	• 생월일(4자리) + 고유번호 대조방식 도입
면접 전형	외부위원 구성	• 2차 면접은 외부위원 과반수, 1차 면접은 외부위원 1명 구성	• 모든 전형 외부위원 과반수 구성
	외부위원 위촉기준	• 일관된 위촉기준 부재	• 위원 위촉 제한요건 규정화 - 이해관계자 배제, 연속 위촉 제한 등

- **다중의 채용 내부통제 프로세스 구축 및 운영**
  - 시험관리위원, 입회감사인, 공채전형위원회, 채용점검위원회 등 다중의 채용 단계별 통제주체 신설 및 크로스체크로 빈틈없는 채용 통제체계 구축

◉ 개선 효과

- 신입사원 채용 공정성 인식도 제고(2018년 91.9% ▶ 2019년 95.5%)
- 고용노동부 주관 신입사원 공채 블라인드 채용 모니터링 지적사항 ZERO
- 권익위 주관 인사 분야 청렴도 점수 향상(2018년 7.6점 ▶ 2019년 8.9점)

청렴시스템을 적용한 채용제도 확립

채용제도 전면 개선으로 공공기관의 대국민 이미지 개선

◉ 추진 배경

- 공공기관 인사채용에 대한 국민의 투명하고 공정한 제도 요구

◉ 추진 경과

- 2018. 채용 비리와 연루된 부정 합격자 채용 취소 및 피해자 구제 조치
- 2018. 청렴시스템을 적용한 부정방지 채용제도 구축
- 2019. 「채용업무처리지침」 사규 제정, 외부위탁 및 감사부서 입회

◉ 개선 내용

- **채용제도 전반에 걸쳐 청렴시스템 도입**

• 채용비리 피해자 구제를 위한 전용상담창구 개설 및 특별채용 실시
• 채용비리 원천 차단을 위한 채용제도 전면 개정 및 규정 강화
  - 채용전형 외부 전문기관 위탁 및 외부심사위원 참여 필수(50%이상)
• 채용비리 근절 대국민 아이디어 공모 및 우수 아이디어 제도화
  - 권익위, 국민생각함 홈페이지에 38건 접수(2018. 8.)
• 부정 입사 발견 즉시 채용 취소가 가능한 근거 제도 마련
  - 입사 지원자에게 필기전형 시 '채용취소 동의서' 징구 의무화

개선 효과

- 채용시 부정청탁 등 비리행위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청렴 인사제도 구축
- 공기업 채용비리 관련 선도적인 후속조치 시행(피해자 구제 및 제도개선)
  - 대통령 주재 공공기관 워크숍 및 산업부 산하 공공기관 감사관 회의 우수사례 발표

성공 30 |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채용 전 분야 개선 및 소통확대로 채용공정성 강화

채용 단계별 부패유발요인 사전 차단 및 채용 정보공개를 통한 채용 공정성 강화

◉ 추진 배경

- 지원자 중심의 공정한 채용문화 정착으로 채용비위 발생가능성 차단

◉ 추진 경과

- 2019. 4. 연봉계약직 이상 직원 채용 시 감사관·외부인 참관 의무화
- 2019.11. 정규직 채용 응시자 점수, 합격자 평균 등 채용정보 공개
- 2020. 1. 일용계약직 이상 전 직원 채용으로 감사관·외부인 참관 확대

◉ 개선 내용

- **채용 절차의 감사관 참관 의무화**
  - 채용 全 과정 감사관 참관 의무화로 채용 투명성 제고

  ※ 2019년 4월 도입(연봉계약직 이상 채용) ▶ 2020년 1월 확대(일용계약직 이상 채용)
- **사회형평 인력 채용 확대**
  - 비수도권 지역인재, 국가유공자, 장애인, 고졸 인재 등 사회형평적 채용 확대

구 분	청년인턴	청년채용	국가유공자	장애인	비수도권지역인재
2018년(기존)	35	23	0	2	8
2019년(개선)	46(▲11)	25(▲2)	1(▲1)	3(▲1)	10(▲2)

- **채용정보 공개 확대**
  - 2019년 정규직 채용부터 응시자 요청 시 필기 점수 및 합격자 평균 공개
- **뉴미디어(YouTube) 활용, 지원자와의 소통 강화**
  - 신입직원 합격 노하우 촬영, 뉴미디어를 활용하여 지원자와의 소통 강화

  ※ 총 3편 제작, 조회수 6,100회 기록

◉ 개선 효과

- 채용 단계별 부패유발 사전 차단으로 2019년 채용비위 Zero
- 채용 단계별 정보공개에 따른 채용절차 만족도 점수 상승(94.6▶95.8점)

채용의 투명성·공정성 확보를 위한 제도개선 시행

채용관련 부패유발요인 차단 가능하도록 시스템과 제도 보완

◉ 추진 배경

- 비정규직 기간 동안 허위로 받은 봉사활동 증명서로 정규직 합격
- 블라인드 채용 미준수로 투명한 채용질서 저해

◉ 추진 경과

- 2018.11. 채용실태 정기 전수조사 실시
- 2019. 2. 채용관련 특정감사
- 2019. 3. 「인사관리지침」 개정
- 2019. 8. 블라인드 채용 준수 자체 점검

◉ 개선 내용

- **인사관리지침 개정**
  - 서류전형에서 부패유발요인 제거를 위해 '자기개발실적 배점 축소 및 확대'

사규명	개선 전	개선 후
인사관리 지침	• 사회봉사활동시간에 따라 최소 25점~최대 50점 부여	• 사회봉사활동시간에 따라 최소 10점~30점으로 배점축소
	• 지원자가 의도적으로 부풀린 사회봉사활동시간에 대한 점수를 채용담당자가 검증하는 절차 부재	• 채용담당자 '봉사활동확인서 세부내역 확인 절차' 신설

- **채용투명성 확보를 위해 블라인드 채용 신설 및 소속기관에 확대**
  - 블라인드 채용 미준수 기관에 대해 지속적인 시정 및 소명자료 요구

주요내용	개선 전	개선 후
블라인드 채용	• 채용공고시 구직자에게 편견요소 요구	• 블라인드 채용 준수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모니터링

◉ 개선 효과

- 채용관련 부패유발요인 사전 제거를 통한 채용 투명성 강화

성공 32 | 한국남동발전(주)

면접시험 일반인 참관제 도입으로 채용공정성 강화

외부인을 채용면접과정 참관자로 지정하여 면접 참관기회를 부여하고 개선의견 조사하여 제도개선 시 반영

◉ 추진 배경

- 상대적으로 폐쇄된 면접과정을 개방함으로써 채용 전 과정에 대한 신뢰성 제고

◉ 추진 경과

- 2018. 6. 면접참관제 도입 검토
- 2018.10. 면접참관제 도입 및 시행
- 2019. 6. 면접참관제 확대 시행

◉ 개선 내용

- **시행 초기임을 고려 참관자 2인 이내로 운영**
  - 참관인에 대해 역량면접 1회, 토론면접 1회 참관기회 부여
  - 참관 후 면접과정 평가 및 개선의견 조사하여 제도개선 시 반영
- **참관자 선정 : 경남지역대학교 취업담당자를 복수 추천요청 후 선정**
  - 도내 취업담당자의 취업지도 역량 강화로 지역인재 취업률 제고 효과
  - 참관자와 면접 응시자간 이해관계자 배제에 활용

  ※ 면접응시자에 대한 사전정보는 지역인재 여부만 확인 가능하므로 지역인재가 포함된 면접시간은 참관대상에서 제외

◉ 개선 효과

- 공정채용에 대한 대내·외 긍정인식 제고
- 블라인드 면접제도에 대한 외부인 의구심 해소

AI를 활용한 채용 프로세스 혁신으로 공정채용 실현

채용 프로세스 전반에 인공지능·빅데이터 분석 등 혁신기술을 적용하여 불공정·차별적 요인을 원천 차단하는 채용기법 도입

◉ 추진 배경

- 정부 일자리 정책 등에 따라 채용 빈도·유형 다양화에 따른 응시자 증가
- 블라인드 채용 강화, 채용비리 근절 등 공정사회에 대한 국민요구 증대

◉ 추진 경과

- 2018. 3. 24시간 양방향 채용 상담용 '챗봇' 도입
- 2018.12. 채용형 청년인턴 대상 AI면접 평가시스템 시범 도입
- 2019. 3. 블라인드 검증·처리 및 표적검사 시스템 도입

◉ 개선 내용

- **(프로세스 혁신) 채용비리 등 사회적 이슈에 대응하여 채용 절차 전반에 AI·빅데이터 분석 등 혁신기술을 적용하여 공정채용 실현**
  - (AI기반 '챗봇') 채용정보를 실시간 쌍방향 소통방식으로 제공하여 채용정보취득의 형평성 · 편의성 및 투명성 제고

챗봇이란?

채팅하듯 질문을 입력하면 인공지능(AI)이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일상언어로 사람과 대화하며 해답을 주는 대화형 메신저

  - (채용비리 사전차단) 완벽한 블라인드 채용을 위한 입사지원 서류 자동 블라인드 처리 및 검증, 자동 표절검사 시스템 도입
  - (AI면접 도입) 인공지능 기반의 온라인 자동 면접시스템 도입으로, 면접관의 편견 · 취향 등 주관적 판단요소 최소화로 공정성 강화

◉ 개선 효과

- 채용관련 문의부터 채용면접까지 인공지능을 활용하여 휴먼에러 최소화
- 완벽한 블라인드 채용 실현, 면접평가의 객관성 제고 등 채용 공정성 강화

성공 34 | 한국전력기술(주)

채용비리 원천봉쇄를 위한 채용시스템 투명성 강화

높아지는 채용 투명성 요구에 대한 보완대책으로서 블라인드 채용제도 개선

◉ 추진 배경

- ‘평등한 기회, 공정한 과정’을 위한 고용노동부의 공공기관 채용과정 개선 요청

◉ 추진 경과

- 2018. 7.「채용업무 처리지침」제정
- 2018. 7. 고용노동부 공공기관 블라인드 채용 우수사례 선정

◉ 개선 내용

- **블라인드 채용의 투명성, 객관성 강화 제도 도입**
  - 채용 과정에서의 부패발생 요인 제거

구 분	개선 전	개선 후
사후 외부면접 위원 제척제도	• 외부면접위원과 면접자의 연관 관계 파악을 위해 면접자의 인적사항 일부 파악	• 면접위원과 면접자 사이에 사전에 인지하지 못한 연관관계 파악시 제척사유 확인서 징구 및 면접점수 산정시 제외
면접 종료 후 서류 징구 제도	• 입사지원 시 서류 징구 및 보관	• 면접종료 후 서류 징구 • 면접시에 사실관계만 확인

◉ 개선 효과

- 외부면접위원과 면접자 사이의 부패요인 제거 및 블라인드 제도 효과 강화
- 면접자의 인적사항을 면접 전반에 반영시키지 않는 블라인드 제도 효과 강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공동채용 도입

국가과학기술연구회가 주관하는 과학기술분야 25개 정부출연연구기관 공동채용제 도입을 통해 채용 공정성·투명성 제고

◉ 추진 배경

- 공정하고 투명한 공공기관 채용에 대한 사회적 요구 증대
- 채용 프로세스의 업무부담을 경감하고 전문성 있는 공동채용 도입 필요

◉ 추진 경과

- 2020. 1.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2020-1차 공동채용 시행
  ※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녹색기술센터(GTC), 한국표준과학연구원(KRISS)
- 2020. 2.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공동채용 통합필기전형 시행
  ※ 서울 및 대전 총 4개교에서 시행
- 2020. 3. ~ 4. 기관별 자율전형 시행(서류전형, 논술전형, 종합면접)

◉ 개선 내용

- **출연(연)별 채용시기 및 공고·지원서류 양식 일원화 및 출연(연) 공통 지원자격 및 서류 적격심사 기준 마련**
- **인재풀 관리에서 채용공고 및 입사지원 서류 접수, 최종 합격자 통보까지 포괄하는 온라인 통합 채용시스템을 통한 채용 진행**

◉ 개선 효과

- 정부출연연구기관 공동채용 시행으로 외부전문기관 위탁을 통해 채용과정의 공정성·투명성 확보
- NCS* 기반 블라인드 채용을 통해 역량 · 소양을 갖춘 우수인재 선발

* NCS : 국가직무능력표준(National Competency Standards)

성공 36 | 한전KPS(주)

승격검증위원회를 통한 청렴 윤리성 검증 강화

승격검증위원회 신설·운영을 통한 후보자 윤리성 심층 검증을 통한 공정인사 추진

◉ 추진 배경

- 징계절차가 진행 중인자와 징계 효력 중인자에 한해 승격 대상자에서 제외
- 승격심사 시 윤리성 검증 기구 부재로 심층적인 윤리성 검증 미흡

◉ 추진 경과

- 2019. 4.「인사규정」개정
  ※ 승격후보자에 대한 윤리성 등의 검증을 위해 승격검증위원회 제도 도입
- 2019.11. 승격검증위원회 시행

◉ 개선 내용

- **승격검증위원회 운영을 통한 윤리성 검증**
  - 주요절차 : 인사비리 모니터링 ▶ 관련자료 요청 ▶ 승격검증위원회 개최

승격심사위원회	▶	승격검증위원회	▶	승격자 결정
승격심사위원회 평가		윤리성 등 검증		사장 결정

  - 세부사항

구분	세부사항
〈1단계〉 인사비리 모니터링	• 공정인사 실천운동 추진을 통한 인사비리 모니터링 시행(11. 5.) (공정인사 행동수칙 운영 및 교육, 서약서 작성, 문자발송 등)
〈2단계〉 관련자료 요청	• 윤리성 검증을 위한 자료 요청(인사혁신실 ▶감사실) - 레드휘슬 등을 통한 인사비리 접수 내역 - 기타 조사중인 또는 접수된 중대비리 행위 등(금품수수, 갑질행위 등)
〈3단계〉 검증위원회 개최	• 인사비리 신고자료, 감사실 제출자료, 운전경력증명서, 상벌사항 등 활용하여 윤리성 검증 시행

◉ 개선 효과

- 승격시 높은 수준의 윤리성을 요구함에 따라 반부패문화 확산에 기여
- 능력 및 성과 위주의 승격자 선발에서 추가로 윤리성 검증 절차를 신설함에 따라 공정한 조직문화 확산에 기여

직장 내 괴롭힘 등 피해 신고 및 처리 지침 마련

직장 내 괴롭힘 및 갑질 신고 사항에 대한 투명하고 체계적인 처리 절차 마련

◉ 추진 배경

- 직장 내 괴롭힘 및 갑질 신고 사항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정부 가이드라인 외 내부 처리 절차가 없어 신고자 신분 노출 등 피해 우려
  ※ 갑질 신고 등은 일반적인 감사절차 외 상담, 조정, 합의, 신고자 보호 등의 절차 필요

◉ 추진 경과

- 2019. 7.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취업규칙」 개정
- 2019.12. 「직장 내 괴롭힘 및 갑질 피해 신고 및 처리 지침」 제정

◉ 개선 내용

- **직장 내 괴롭힘 및 갑질 피해 신고에 관한 처리절차 마련**
  - 신고방법 및 접수 : 신고가 접수된 경우 7일 이내 처리절차 등 통보
  - 신고자 및 피해자 상담 후 요구사항에 따른 조치사항
    - 행위자로부터 분리를 원할 경우 : 인사담당부서에 협조 요청
    - 행위자의 사과, 재발방지 약속 등 합의를 원하는 경우 : 중재 시도
    - 처벌 등 그 밖의 사항 : 정식조사 착수
  - 정식조사 방법
    - 복수감사인 배치, 피해자가 요청할 경우 조사기간 중 근무장소 변경 등
  - 조사결과의 처리
    - 조사결과는 감사자문위원회 등 외부위원으로 구성된 심의과정 필수
    - 피해자와 행위자의 분리를 포함한 배치전환 등 재발방지 대책 포함
    - 특정인을 음해하거나 불이익 등 허위신고일 경우 신고인 문책 가능
  - 신고인 등 보호
    - 모든 참여자(신고인, 피해자, 참고인, 조사자 등)에게 2차 피해 방지 서약서 징구

◉ 개선 효과

- 직장 내 괴롭힘 및 갑질 피해 신고에 대한 투명한 처리 절차 마련

성공 38 | ㈜한국가스기술공사

강력한 비리 근절대책 추진

비리행위 근절 및 청렴문화 구축을 위한 유례없는 강력한 비리 근절대책 추진

◉ 추진 배경

- 공사 내부 임직원 행동강령 위반 행위 발생 이후 재발 방지 및 비리 요인 원천 제거를 위한 시책 추진

◉ 추진 경과

- 2018. 4. 임직원 행동강령 위반 행위에 대한 상급기관 감사 결과 통보
- 2018. 6. 대내외 의견수렴을 통한 광역적 비리 근절대책 수립
- 2019. 1. 비리 근절대책 추진 완료

◉ 개선 내용

- **비리 연루자에 대한 One-Strike Out 등 무관용 원칙 적용**
  - 비리 연루 임직원에 대한 실질적 페널티 명문화

구 분	개선 전	개선 후
근무성적평정	• 무보직성 기간이 3개월 초과 시 해당 직급별 평정등급 내 최하 성적 적용	• 비리 연루자 근무성적평정 시 최하위 등급 부여 신설
평가상 페널티	• 성과급 지급 시 징계기간에 한하여 페널티 적용	• 징계기간 뿐만 아니라 평가연도 전체에 대해 페널티 적용(최하위 등급)

- **청렴한 조직문화 구축을 위한 혁신 및 상시 신고체계 구축**
  - 상임감사 주관 고위직 청렴교육 정기 시행
  - 적발된 부패행위에 대한 징계양정 강화 및 비리행위 대응 모의훈련 시행

◉ 개선 효과

- 국민권익위원회 종합청렴도 측정 결과 2등급 상승(5등급 ▶ 3등급)
- 비리근절 대책추진을 통한 부패행위 감점 ZERO 달성(0.47점 ▶ 0점)

성공 39 | 서울시설공단

면식관계 형성 방지를 위한「공사감독 이력 시스템」도입

공사감독 이력을 관리할 수 있는 DB시스템을 구축하여 공사감독자가 동일한 시공사 및 현장대리인과 면식관계가 형성되지 않도록 관리

◉ 추진 배경

- 공사감독 이력의 조직적·체계적 관리가 미흡하여 개인별 전문분야 특화 곤란
- 시공사와 감독자 간 면식관계 형성으로 부조리 발생 소지
  ※ 2000년 공사감독자가 시공사로부터 현금을 수령하는 사건 발생(중징계)

◉ 추진 경과

- 2013.12.「공사감독 이력제」시행을 위한 방침 수립
- 2014. 4.「공사감독 이력제」본격 시행
- 2016. 1.「공사감독 이력제」확대 추진(원도급 ▶ 원도급+하도급)

◉ 개선 내용

- **공사감독 현황 DB구축**
  - 대상 : 2010년대 이후 시행한 공사 일체
  - 내용 : 공사감독, 종류, 기간, 시공사, 공사내용, 현장대리인 등 전산화
- **공사감독 이력 추적 및 친분관계 형성 원천차단**
  - 공사감독(공직자)과 동일한 시공사(현장대리인)간 여러 건의 공사시행 지양
    - 특정인과 지속적인 업무처리로 면식관계가 형성될 소지 원천차단
- **공사감독자의 전문분야 특화**
  - 공종별 · 공법별 데이터 관리로 직원별로 특화된 전문분야 육성

◉ 개선 효과

- 사적 친분관계 형성에 따른 부패 유발요인 원천차단
- 공사감독 세부분야의 전문가 육성으로 업무역량 향상

성공 40 | 한전KPS(주)

구매계약 체결정보 실시간 공개

구매계약 체결정보를 소속사업장 전체에 실시간으로 공개하여 계약 투명성 제고

◉ 추진 배경

- 계약 방법·업체 등 계약체결 정보는 계약업무 담당 직원만 인지
  - 사업장 내에서의 예산 집행정보는 공개되어 있으나 계약 체결 정보가 계약 부서 外에는 공개되어 있지 않아 계약상대자 결정 과정의 투명성 · 공정성 결여
- 특정업체 일감 몰아주기, 수의계약, 특혜제공 등 계약분야 부패 상존

◉ 추진 경과

- 2018. 8. 계약체결 정보공개 등 구매계약 투명성 제고 방안 마련
- 2018.11. 구매계약 체결 정보공개 확대 시행

◉ 개선 내용

- **소속 사업장 내 전직원 대상으로 구매계약 체결정보 공개**
  - 사업장 전 구성원 대상 내부업무망(EP) 내 계약 체결정보 공개를 통한 계약 정보 관리 투명성 제고 및 사업장 내 견제장치 마련
  - 계약체결 초기부터 완료 시까지 전 과정에 대한 정보를 공개

개선 전		개선 후
ERP 내 예산집행내역서 공개	▶	• ERP 내 예산집행내역서 공개 • EP 내 계약체결 정보 추가 공개 - 공개경로 : EP > BW > 구매관리

◉ 개선 효과

- 사업장 전 구성원 대상 공개 확대를 통한 시공부서, 감사부서 등 계약부서 실시간 감시 효과로 계약체결 투명성 및 공정성 제고
- 계약 관련 부서에 의한 부패, 비위 등 감소

제안서 평가 시 시민참여단 참관제도 도입

일정규모 이상 용역의 제안서 평가위원회에 시민참여단 신청자를 참관인으로 배석시켜 제안서 평가의 투명성 및 공정성 강화

◉ 추진 배경

- 제안서 평가 업무의 부패위험 사전 제거를 통한 공정성 및 투명성 확보 필요
  ※ TS2022 혁신과제 중 11대 대표 브랜드 과제선정(2018. 8.)

◉ 추진 경과

- 2015. 4. 일정규모 이상의 용역사업 관련 제안서 평가위원회 감사인 참관
- 2015.10. 제안서 평가위원회의 위원수 구성방법(확대) 개선
- 2018.10. 일정규모 이상 용역사업의 제안서 평가위원회 시민참여단 참관

◉ 개선 내용

- 일정규모 이상의 용역 제안서 평가위원회 구성 시 외부위원의 참여 확대, 감사인 입회 및 시민참여단 참관제도 도입

구 분	개선 전	개선 후
위원 구성방법	• 일정규모 이상 외부위원 4명	• 일정규모 이상 외부위원 7명
참관대상 범위	• 감사인	• 감사인, 시민참여단

- 제안서 평가위원회 기록(녹취록, 동영상) 의무화 및 필요시 공개할 수 있도록 기록물 보관

구 분	개선 전	개선 후
보관방법	• 신설	• 일정규모 이상의 용역 제안서 평가 시 녹취, 녹화 의무화, 자체 보관(5년)

◉ 개선 효과

- 제안서 평가 업무 프로세스 개선으로 부정·부패 위험 선제적 차단
- 제안서 평가과정을 시민참여단이 참관함으로써 제안서 업무의 투명성 확보

성공 42 | 한국남동발전(주)

계약규정에 재검수 실시조항 신설로 검수 투명성 제고

불합격 판정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이의제기가 있을 경우, 최초 검수업무와 관련이 없는 직원을 검수책임자로 재임명하여 감사부서의 입회하에 재검수 실시하는 조항 신설

◉ 추진 배경

- 계약규정에 의거 재납품된 물품 검수에서 재차 불합격 시 관련부서는 재납품, 계약해제 등의 결정 가능 ▶계약상대자는 이의제기로 의견진술 기회만을 가짐
- 검수 과정에서의 담당자 갑질 여지 상존
- 검수 결과가 불합격으로 판정된 상태에서 이의제기는 감정적 대립 심화

◉ 추진 경과

- 2019. 3. 계약제도 개선위원회 구성 및 개최
- 2019. 4. 계약규정 및 계약업무처리기준 개정

◉ 개선 내용

- 제도개요
  - 이의제기 처리절차 개선
    - 불합격 판정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이의제기가 있을 경우, 최초 검수업무와 관련이 없는 직원을 검수 책임자로 재임명(감사부서 입회)
  - 계약규정 개정

개선 전	개선 후
〈계약규정 제77조(불합격품의 조치)〉 • 이의제기 시 계약상대자에게 의견 진술 기회를 부여할 수 있다.	〈계약규정 제77조(불합격품의 조치)〉 • 재검수 요청시 계약상대자에게 의견진술기회 부여 및 최초 검수업무와 관련 없는 직원을 검수책임자로 재임명하여 감사부서입회하에 재검수 실시할 수 있다.

- 시사점
  - 계약업무는 외부고객과의 최접점에 있는 업무로서 공정성 및 투명성 제고를 위해 지속적인 관심 요구

◉ 개선 효과

- 검수 공정성 강화 및 검수 갑질 우려 해소, 자재 검수 투명성 제고

감리인 비리 예방을 위한 계약조건 강화

감리인의 금품수수 등 비리 행위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감리용역 계약특수조건 개정

◉ 추진 배경

- 건설·전기·소방·정보·통신 등 공항운영 특성상 감리용역 발주가 많아 감리인의 비리행위 예방 조치 필요

◉ 추진 경과

- 2017. 4. 민원 관련 용역 관리실태에 대한 특정감사 시행
  ※ 하도급사의 민원 제기로 인한 사내 특정감사에서 감리인의 금품수수 정황 확인
- 2017.10. 「감리용역 계약특수조건」 개정

◉ 개선 내용

- **「감리용역 계약특수조건」 개정으로 감리인의 금품수수등 비리행위 원천차단**
  - (제29조 입찰참가 배제) 계약상대자가 뇌물을 수수하였을 경우 입찰참가 배제 단서조항 추가

개선 전	개선 후
"계약상대자가 공사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하였음이 판명된 경우에는...(중략) 입찰의 참가를 배제시킬 수 있다"	"계약상대자가 공사 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하였거나, 수행중인 용역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자로부터 뇌물을 수수하였음이 판명된 경우에는...(중략) 입찰의 참가를 배제시킬 수 있다"

  - (제30조 뇌물공여 등에 의한 계약의 해지 및 해제) 계약상대자가 뇌물을 수수하였을 경우 계약해지 단서 조항 추가

개선 전	개선 후
"계약상대자가 공사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함으로써...(중략) 본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한다"	"계약상대자가 공사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이해관계자로부터 뇌물을 수수함으로써...(중략) 본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한다"

◉ 개선 효과

- 감리용역 계약특수조건 개정(2017.10.) 후 부실감리 및 비위행위 Zero 달성

성공 44 |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불공정 계약관행 개선

용역계약서 내 경영·인사권 침해, 부당한 업무지시 금지 등 불공정한 계약관행 개선을 위한 가이드라인 마련

◉ 추진 배경

- 계약관계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는 계약관행 개선에 대한 요구 증대

◉ 추진 경과

- 2019. 9. 사업본부별 계약담당자 워크숍 개최로 계약관련 개선사항 도출
- 2019.11. 계약제도 개선위원회 개최 및 계약업무 처리기준 개선계획 수립
- 2019.12. 불공정 요소 차단을 위한 전 부서 사전 체크리스트 적용

◉ 개선 내용

- **용역계약서 내 갑질근절 가이드라인 마련**
  - 경영·인사권 침해, 부당 업무지시, 노동3권 제약, 과도한 복무규율 조항 개선

(개선 전) 부당 · 불공정 조항	(개선 후) 부당 · 불공정 조항 삭제
• 업무상태가 미비하다고 판단되어 시정조치를 명할 경우에는 시간, 횟수에 불구하고 조치를 실시하여야 한다.	• 업무상태가 미비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과업지시서에 따라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 과업지시서에 시정조치 요구 가능 사유 명시

- **청렴계약 이행 및 관리 강화**
  -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개정으로 부정당 업체 입찰참가 제한요건 강화
    - 부정당업체 지정기간을 2년 이내로 구체적 명시

- **공정계약 원칙 준수를 위한 제도 마련**
  - '공정계약실천사전체크리스트' 도입으로 계약의뢰 전 불공정요소 자가점검
  - 전문공사·소프트웨어 용역 등 하도급 발생 계약건의 하도급지킴이 사용의무화

◉ 개선 효과

- 2019년 권익위 청렴도 조사 '계약 청렴도' 지표 점수 상승(9.68▶9.76점)
- 계약 관련 부패 Zero, 민간업체로의 청렴문화 확산

수의계약 품목의 경쟁입찰 전환 확대

기존 수의계약 대상 품목 중 경쟁입찰이 가능한 품목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경쟁입찰로 전환

◉ 추진 배경

- 계약방식(경쟁수의계약)은 국가계약법에 의해 결정되나, 수의계약은 경쟁입찰에 비해 갑질 및 부정청탁 발생 가능성이 높아 수의계약 최소화 방안 강구 필요

◉ 추진 경과

- 2016.11. 수의계약 최소화 추진방안 수립
- 2017.12. 경쟁입찰 전환 이행실적 점검(매분기 실시)

◉ 개선 내용

- **불필요한 수의계약에 대해 경쟁입찰로 전환**
  - 관례에 따라 반복적으로 체결하는 수의계약 중 경쟁입찰 대상 적극 발굴
  - 상기 품목에 대하여 경쟁입찰로 전환함으로써 수의계약 최소화

구 분	2017년도	2018년도	2019년도
발굴 건수	77건	32건	32건

- **계약업무 투명성 제고를 위해 구매발주계획 사전공개**
  - 발주유형, 입찰명, 수량, 예산금액 등을 회사 홈페이지에 게시

구 분	개선 전	개선 후
사전공개	• 공개하지 않음	• 분기 시작 7일 전까지 공개

- **경쟁입찰 전환 가능 품목에 대해 수시 점검**
  - 전 부서를 대상으로 매분기 실적 점검 및 독려

◉ 개선 효과

- 경쟁입찰 확산을 통한 공정한 입찰 참여 기회 부여 및 계약의 공정성 확보
- 특정업체에 대한 일감 몰아주기 등 특혜 발생 가능성 차단

성공 46 | 국립공원공단

수의계약 편중 방지 기준 마련

2천만원 이하인 공사 및 5백만원 이하의 물품구매 사업에 대해 계약담당부서에서 자체적인 업체선정으로 수의계약 편중에 따른 대책 마련

◉ 추진 배경

- 일부 특정업체와의 수의계약 편중으로 기관 운영의 공정성, 투명성을 의심받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강화된 수의계약 편중방지 기준 마련 필요

◉ 추진 경과

- 2018.10. 수의계약 편중방지 기준 마련 및 의견조회
- 2018.12. 수의계약 편중방지 대책 시행

◉ 개선 내용

- **1차 수의계약 시(기존과 변경사항 없음)**
  - 별도 제한 없음
- **2차 수의계약 시(지역제한 강화)**
  - 특정업체와의 2차 중복 수의계약시 지역제한(사무소 소재지 기준)
  - 단, 지역 내 소재한 업체가 아님에도 특정업체와 2차 중복 수의계약을 해야 할 경우 자체 검증절차 이행
- **3차 수의계약 시(중복 수의계약 심의위원회 운영)**
  - 심의위원회 구성 : 감사실장(위원장)을 포함한 5인(외부전문가 활용 가능)
  - 심의대상 : 연 3회 이상 중복 수의계약을 체결하려는 사업, 구매 건 등
  - 심의결과 : 홈페이지 내 결과공개

중복 수의계약 심의 요청		심의위원회 개최		결과 통보
• 중복 수의계약 심의 요청서 제출(신청부서▶감사실)	▶	• 특정업체와의 중복 수의계약 적정성 여부 검토	▶	• 중복 수의계약 심의결과 통보(감사실▶신청부서)

◉ 개선 효과

- 수의계약 편중 방지기준 마련으로 공정성 및 투명성 확보(중복 수의계약 32% 감소)

자재관리, 부패유발요인 제거 및 투명성 강화

자재 검수 및 입출고 업무관련 부적합 사항에 대한 합격판정, 지체상금 미부과 등 부패유발요인을 예방하고자 모바일 자재 입고 시스템을 구축함

◉ 추진 배경

- 타 기관의 자재납품 관련 비리연루 사건 발생에 따른 사장 특별지시

◉ 추진 경과

- 2018. 3. 자재관리업무 개선계획 추진(안) 수립
- 2019. 3. 모바일 기반 자재관리시스템 시범운영
- 2019.11. 모바일 기반 자재관리시스템 구축 완료

◉ 개선 내용

- **(자재검수 업무절차 개선) 자재담당 단독검수 불가**
  - 입회자 확인시스템 구축
    - 검수 관련(검수자, 검수입회자, 품질입회자) 담당자 현장 지문인증 확인
  - 검수상황 CCTV 기록(검수시작 ~ 검수완료), 3년간 자료 보관
- **모바일 자재입고 시스템 구축**
  - 태블릿 PC를 활용하여 현장에서 자재입고 확인 및 결재 시행
    - (기안)자재담당▶(검토)자재차장▶(결재)자재부서장▶(협조)일상감사
  - 태블릿 PC로 입고 실시
    - 수량, 단위, 배치, 저장위치 지정
  - 현장에서 자재관리 태그 출력(휴대용 프린터) 후 저장위치에 즉시 부착
  - 자재 출고시에도 태블릿 PC를 활용하여 자재 출고
  - 현장에서 자재위치 이동 및 저장창고 수정 가능
  - 현장 자재 저장품에 대한 상시 재물조사 가능

◉ 개선 효과

- 비효율 업무절차 개선 및 검수업무 투명성 강화
- 현장 결재시스템 구축을 통한 행정, 인력낭비 요인 개선

성공 48 | 한국지역난방공사

갑질 근절을 위한 선도적 이행체계 구축

전문기관과 합동 모니터링을 통해 민간과의 계약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갑질 예방을 위한 규정 개정 및 공사 내의 갑질 행위 근절을 위한 선제적 대응 체계 구축 및 운영

◉ 추진 배경

- 우월적 지위·권한을 남용한 갑질이 공공·민간 구분 없이 지속적으로 발생
- 불공정거래 신고 절차의 부재 등 내·외부 갑질에 대한 적극적 대응 필요

◉ 추진 경과

- 2018. 불공정 거래행위 모니터링 및 공사 대응체계 구축

◉ 개선 내용

- **(민간) 대한건설협회와의 협업으로 불공정 거래행위 모니터링**
  - (대한건설협회) 공사 계약특수조건의 불공정거래 사례검토·개선의견 제시
    - 「소규모 영세사업자 보호를 위한 현장 대리인 보험료 정산 관련 규정」 개정 제안(2018. 6.)
  - 공사 계약특수조건 개선 및 결과 회원사 안내 및 상시 모니터링 시행
- **(민간) 불공정 갑질 방지를 위한 공사감독 책무 관련 규정 개정**

공사관리규정, 간이공사처리요령內 관련규정 신설	"공사감독원은 감독의 지위를 이용하여 감독업무의 적정범위를 넘어 계약상대자에게 지속적 · 반복적 부당 언동 등을 함으로써 신체적 · 정신적 · 정서적 고통을 주거나 계약 수행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 **(내부) 직원 간 갑질에 대한 대응체계 선도 구축**
  - 정부가이드라인 수립 전(국조실, 2019. 2.) 공사 대응체계 구축(2018. 5.~ 9.)

개선전	①갑질확인	②조사	-	-	-	③최종 결과

▼

개선후	①갑질확인	②조사	③1차 결과	④노사협의	⑤외부조사	⑥최종 결과
내용	인사담당 확인	감사실 조사	인사위원회 회부	고충청취·전문가 조사 합의	외부조사단 조사	인사위원회 최종 처분

◉ 개선 효과

- 불공정 거래에 대한 계약특수조건 및 관련 사규 개정으로 갑질 사전예방
- 내·외부의 갑질 원천 방지를 위한 선도적 모델 및 제도 마련

성공 49 | 한국동서발전(주)

비위신고 활성화를 위한「익명신고자 보상제도」시행

익명신고 시스템(레드휘슬)을 통해 신고한 자에게 익명을 보장한 상태에서 시스템을 통해 바코드 상품권을 지급하는 제도

◉ 추진 배경

- 청렴도 취약분야 개선 및 내부신고 시스템에 대한 불신 타파

◉ 추진 경과

- 2018. 2. 익명신고자 보상제도 도입
- 2019.12. 익명신고자 보상제도 운영 및 홍보 강화

◉ 개선 내용

- (제도화) 익명신고자 보상제도 운영기준 수립
- 익명신고 심사위원회 운영 : 청렴부장, 민원차장, 담당직원
- 신고대상 및 보상금 지급 기준

구분	신 고 대 상	보상금
1급	• 금품, 향응, 편의 수수 및 부정청탁 등 심각한 부패행위	20~50만원
2급	• 갑질 및 행동강령 위반 등 부적절 행위	10~20만원
3급	• 4대 폭력, 부당업무 지시, 예산 위법사용 등	8~10만원
4급	• 제도개선, 미담사례, 불합리한 점 지적 등	8만원
5급	• 추측, 특정인 비난, 루머 등	없음

※「익명신고자 보상제도 운영기준」개정(2019. 7. 8.) 최저 보상금 상향(4급 : 5만원▶8만원), 신고대상 추가(4대 폭력) 등

- 업무절차 : 신고접수 ▶ 신고내용 심사 ▶ 보상금 지급 ▶ 사후관리

◉ 개선 효과

- 익명신고자 보상제도 시행 이후 내부 익명신고 건수 증가

구 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신고 건수	5건	12건	10건	29건	27건
보상금 지급	없음	없음	없음	60만원/11명	64만원/7명

- 보상금 지급 최소금액 상향 조정에 따른 신고 활성화 기대

성공 50 | 한국도로공사

「기술마켓」 제도 도입으로 신기술 채택 투명화

공공부문 최초, 온라인을 통한 신기술 채택 접수로 건설 신기술 채택과정의 투명성 강화

◉ 추진 배경

- 신기술 도입 시 공식적 기준 없이 부서별 방침에 따라 폐쇄적으로 심의

◉ 추진 경과

- 2017.12.「기술마켓」 포털사이트 개설 등 시스템 구축
- 2017.12. 위원회 구성 등을 통한 신기술 평가 심의 강화

◉ 개선 내용

- **기술마켓 포털사이트 개설**
  - 접근이 용이한 공사 홈페이지에서 쉽게 전용포털로 접속하여 민간업체가 제안할 수 있도록 시스템 구축
- **신기술 평가 심의 강화 : 2단계 사전심의 절차 신설**

구 분	주요 내용
기술마켓평가단 (1단계)	• (평가) 고속도로 기적용 여부, 제안·응모자의 자격요건* 평가 * 신기술 권리, 재정건전성, 생산능력, 최근실적, 관련 도면 및 시방서 등 • (구성) 실무부서 담당자 70명, 연구원 10명으로 구성
신기술 심의위원회 (2단계)	• (평가) 신기술 도입여부 및 적용방안 결정 • (구성) 5인 이상(심의위원풀 400명) ※ 외부위원 과반구성

- **업무기준 제정 및 전담조직 신설**
  - 신기술 도입 및 적용 업무처리 기준 · 제정(2017. 5. 23.)
  - 신기술 도입, 심의기준 설계 및 시공 시 적용방안, 사후관리 등 규정

◉ 개선 효과

- 온라인 공식 접수창구 마련으로 부정청탁 등 부패유발요인 해소
- 심의 강화로 신기술 평가 과정의 투명성 확보

법인형 「카셰어링(Car-Sharing)」 제도 도입

협력사로부터 교통편의 제공을 받지 않기 위하여
'카셰어링 서비스'(렌트카 업체와 시간단위 렌트 계약 체결) 도입

◉ 추진 배경

- 업무 특성상 대중교통 소외지역이 많아 교통편의를 제공받을 가능성 상존
- 권익위 청렴도 조사결과 '편의제공빈도' 항목 점수 저조

◉ 추진 경과

- 2018. 6. 카셰어링 협약체결 및 지역본부 시범운영(2018. 2.~ 6.)
- 2018. 7. 「법인형 카셰어링 운용지침」 제정 및 카셰어링 시스템 정식 도입
- 2018. 8. 출장 및 복무 관련 인트라넷 시스템 개선

◉ 개선 내용

- **교통편의 근절을 위한 카셰어링 제도 도입 및 관련 지침 제정**
  - 협력사 교통편의 근절을 위한 시간 단위로 렌트 가능한 카셰어링 서비스 활용
  - 법인형 카셰어링 운용지침 제정
    - 출장시 공용차량 부족 및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경우 카셰어링 신청
    - 인트라넷 복무신청시스템을 통해 차량 사용 전에 부서장에게 승인
    - 법인형 카셰어링 시스템을 통해 차량 이용 및 반납
    - 임차비, 통행료 및 유류는 소속별로 발급한 카셰어링 법인카드로 지급
- **카셰어링 제도 전사적 운영 및 제반 시스템 구축**
  - 현업 부서에서 시범운영(2018. 2. ~ 6.)을 거쳐 전사적 확대(2018. 7.)
  - 인트라넷 카셰어링 출장 및 복무시스템 개선

◉ 개선 효과

- 교통편의 근절로 권익위 청렴도 조사결과 '편의제공빈도' 점수 지속 상승

구 분	2017년 (카셰어링 도입 이전)	2018년 (카셰어링 도입)	2019년 (카셰어링 정착)	3년간 증감
편의제공빈도	6.23	7.77	10.00	3.77↑

성공 52 | 한국토지주택공사

홍보성 물품 관리시스템 도입

홍보성 물품 관리시스템 마련으로 구입부터 사용까지 투명성 제고

◉ 추진 배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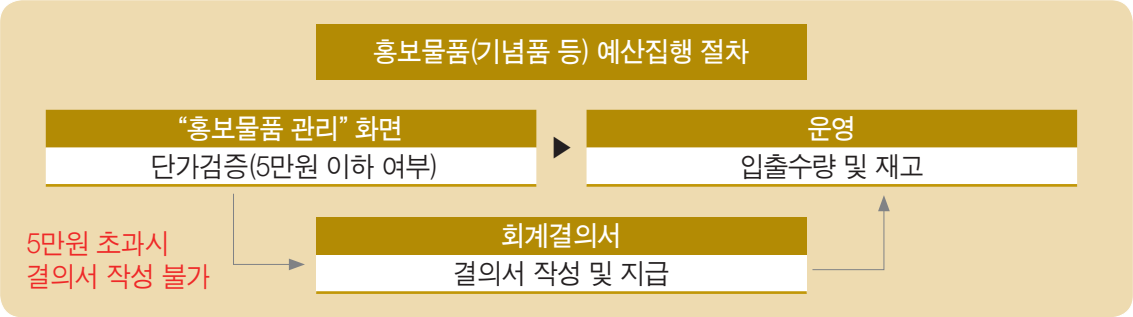
- 단가 5만원 초과 홍보물품 구입 시 청탁금지법 위반소지 존재
- 홍보성 물품 반출사항을 수기로 기록하여 대장관리 누락 발생 가능

◉ 추진 경과

- 2016.10. 홍보성 물품 관리시스템 개선 및 시범 운영
- 2016.11. 홍보성 물품 관리시스템 개선 시행

◉ 개선 내용

- 홍보성 물품 구입에 대한 예산집행 내부 통제절차 강화



- (구입단계) 홍보성 물품관리 화면에 구입목적, 단가 및 수량 등
  구입 관련 정보입력,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단가 5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결의서 작성 가능
  ☞ 부정청탁 금지법 위반 소지 원천차단
- (운영단계) 회계결의서 작성 및 지급 시 각 부별·품목별 대장 자동 생성 및 재고관리
  ☞ 체계적 전산관리, 업무 투명성 및 책임성 강화

◉ 개선 효과

- 청탁금지법에 부합하는 시스템 기반 마련으로 법 위반 소지 원천차단
- 투명한 홍보성 물품 관리 운영 절차 및 제도 확립으로 부패위험 사전예방

교차감사제도 도입을 통한 감사의 투명성 강화

공단의 부패취약분야 감사정보 교류 및 사전 교차감사로 청렴경영을 도모하고 지방 조직간 문제점 및 개선방안 교류를 통해 서로 배려하는 청렴문화 조성

◉ 추진 배경

- 감사 정책 및 선진감사 기법 등 감사정보 교류증진 확대로 전문성 확보
- 감사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부패취약분야 집중관리 및 업무교류 확대

◉ 추진 경과

- 2019. 4. "교차감사 시행계획 보고"를 통해 내·외부 전문 감사관 선발
  - 수감부서의 업무 전문성 및 관련성 등 주요 이슈사항 점검·개선 도출
- 2019. 9. 개선된 교차감사 시범운영 실시
  - 교차감사에 대한 이해도 부족 및 감사 권한(독립성) 부여 미흡
  - 동일업무 조직을 회전式, 상호교차式으로 이원화 운영

◉ 개선 내용

- **교차감사 전문가 인력풀 구성 및 실시**
  - 외부 : 교차감사가 가능한 공공기관의 감사업무 담당자
  - 내부 : 본부 및 지방조직 근무자 중 해당분야 3년 이상 경력자
- **교차감사 운영방식 개선**
  - 타 조직의 행정업무 처리의 장·단점 비교분석으로 업무 적정성 점검계기 마련
  - 교차감사를 통한 각 조직의 개선사항 교류 및 청렴경영 노하우 학습

구 분	개선 전	개선 후
감사관 지정	• 지방 조직의 감사, 회계 담당	• 지방 조직의 부서별 담당
운영 방법	• '회전형'과 '상호 교차'로 이원화	• 우수공유형 추가 및 공유로 역량 강화
감사 범위	• 공통(서무, 회계) 분야 한정	• 면허, 안전, 교육 전 분야로 확대

◉ 개선 효과

- 지방조직간 감사업무 우수사례 공유 및 내부견제시스템 강화
- 부패취약분야의 집중관리 및 예방감사를 통해 반부패·청렴문화 확산 기여

성공 54 | 서울시설공단

체육시설 예약자 본인 확인 시스템 도입

**체육시설 이용자에 대하여 무단양도 금지 안내 및 확인 절차를 강화하고,
불법 이용자에 대하여 불이익 조치를 함으로써 이용 투명성 제고**

◉ 추진 배경

- 체육시설 대관 이용자의 무단양도 민원 사례 지속 발생으로 대책 필요

◉ 추진 경과

- 2019. 4. 축구장·풋살구장 무단양도 방지대책 수립
- 2019. 4. 체육시설에 불법 양도 금지에 대한 안내문 고지
- 2019. 4. 공공서비스예약시스템 홈페이지 내 양도 금지 안내 배너 개설
- 2019.10. 양도거래 모니터링 및 무단 양도자 공공예약서비스 이용 제한

◉ 개선 내용

- **축구장·풋살구장 이용자에 대한 확인절차 강화**
  - 이용자에게 예약 확인증과 신분증 지참 안내 및 확인
    - 구장내 안내문 부착, SMS 안내, 공공예약서비스 홈페이지 안내
- **주요 불법적 양도거래 방지를 위한 인터넷 카페 모니터링 강화**
  - 상습 양도자 파악, 증거 확보 후 탈퇴 조치요구 및 법적조치 방안 강구
- **서울시 공공예약서비스 홈페이지 시스템 개선 협조 요청(공단▶市)**

현실태	개선 요청사항
• 홈페이지 가입시 비실명으로 가입 가능하여 시설예약 선점 후 무단 양도하는 사례 발생	• 예약 확인증에 본인 정보기재 등 확인 절차 강화하도록 시스템 개선 요청

◉ 개선 효과

- 부패유발요인 사전차단으로 무단양도 등에 대한 민원접수 감소
- 체육시설 업무처리 투명성 제고를 통해 시민에 대한 기관 신뢰도 증대

내부회계관리제도 강화로 재무정보 투명성 확보

회계오류 방지 및 재무정보 신뢰성 확보를 위한 내부회계관리제도 전면 개편

◉ 추진 배경

- 기존 업무 프로세스상 회계오류 및 불투명성을 야기하는 문제점 발생
- 상장 기업의 회계 투명성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등 사회적 요구 증대

◉ 추진 경과

- 2018. 4. 내부회계관리제도 강화를 위한 3개년 로드맵 수립
- 2018. 8. 내부회계관리제도 재구축을 위한 내부회계 TFT 운영
- 2019. 3. 2019년도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계획 수립

◉ 개선 내용

- **회계오류 시정 및 투명성 강화를 위한 '재무보고 내부통제 설계절차' 수립**

단계	주요 내용
(1단계) 업무범위 선정	• 재무제표에 영향을 미치는 프로세스를 관리범위로 선정 (12개부문, 94개 프로세스)
(2단계) 프로세스 분석	• 내부회계TF구성(65개부서), 관련 프로세스 분석으로 업무절차서 작성
(3단계) 위험 평가	• 회계부정 발생가능성 및 재무적 영향 검토 후 위험등급(5단계) 평가
(4단계) 통제설계	• 식별된 위험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관리방안(통제절차) 수립

- **내부통제 전면 재구축 및 통제항목 확대(656개▶1,754개)**
- **내부통제 운영실태 대내·외 점검 및 보고**
  - (보고) 매년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보고(감사위원회·이사회·주총)
  - (점검) 객관성 확보를 위해 외부회계법인의 통제절차 준수여부 확인

모집단 취합 ▶ 완전성 검증 ▶ 표본선정 ▶ 테스트 수행 ▶ 평가결과 시스템 등록 ▶ 평가결과 보고 ▶ 미비점 개선조치

- **내부회계관리제도 내재화를 위한 교육 강화**
  - 1급 이상 경영진(1회), 2급 통제 책임자(1회), 3~5급 실무자(12회)

◉ 개선 효과

- 내부회계관리제도 도입을 위한 벤치마킹 사례 제공(13개 공공기관)
- 제2회 대한민국 회계대상(매일경제) 최우수상 수상

성공 56 | 한국거래소

회원제재 심의 시 대심 방식 심의제 전면 도입

거래소규정 위반 행위에 대한 회원제재 심의·의결과 관련하여 제재심의에 대한 대심 방식 심의제(이하 대심제)를 전면 도입, 회원제재 조치의 공정성 및 투명성을 획기적으로 제고

◉ 추진 배경

- 최근 新매매기법 활성화 등으로 제재 안건이 복잡·다기화됨에 따라 제재 조치의 신뢰성 확보가 중요한 이슈로 부각
  - 순차진술 방식*의 심의 운영으로 제재대상 회원사의 소명 기회 다소 부족, 제재대상자의 실질적 방어권 취약

    *(거래소)제재안건 설명 ▶ (제재대상자)의견진술·문답 ▶ 제재대상자 퇴장 후 거래소가 의견 반박 ▶ 심의·의결 순으로 진행됨에 따라, 제재 조치 결정이 거래소(감리부) 설명에 크게 의존

◉ 개선 내용

- **'순차진술식 심의제(직권주의)'를 '대심제*(당사자주의)'로 전환하여 제재 대상자에 충분한 의견진술 및 반박 기회를 부여**

  * 대심제(對審制) : 회의장에 제재대상자와 거래소가 함께 참석하여 동등하게 진술·반박 사실관계 및 법률 적용 등에 대하여 상호 공방 기회를 갖고, 이를 토대로 위원들간 논의를 거쳐 최종 결정을 내리는 심의체제로 법원의 재판과 진행 과정이 유사

구 분	순차진술식 심의제(개선 전)	대심제(개선 후)
절차	안건설명(감리부) ▶ 의견진술(회원사) ▶ 위원질의/회원사 답변 ▶ 회원사 동석 ▶ 퇴장(회원사) ▶ 위원질의/감리부 답변 ▶ 심의/의결(위원회)	안건설명(감리부) ▶ 의견진술(회원사) ▶ 대심진행(위원회/감리부/회원사) ▶ 회원사 동석 ▶ 퇴장(회원사) ▶ 심의/의결(위원회)
장점	• 제재대상자와의 소모적 공방을 방지하여, 능률적이고 신속한 심의가 가능	• 위원회가 제3자의 입장에서 공정한 심결이 가능하게 되므로 실체적 진실 발견에 보다 적합 • 제재대상자에 대등한 당사자 지위를 인정함으로써 제재 대상자의 권익 보호 가능
단점	• 제재 쟁점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어려움	• 당사자간 연속된 공방으로 인한 회의 장기화 우려 • 제재대상자의 법률 비용 과다 소요 우려

◉ 개선 효과

- 제재대상자에게 다소 불리한 종전 방식과 달리 양측에 동등한 의견진술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제재 결정 절차의 투명성 및 공정성 강화
- 합리적이고 균형 있는 제재 수준 결정 및 제재 당사자의 수용성 제고

서부청원(West Voice) 도입 및 운영

전 직원이 업무추진 및 조직생활 등에서 느끼는 문제의식과 경영제언 등을 자유롭게 개진하고 일정 수 이상의 동의를 얻은 청원에 실무부서가 답변하는 게시판

◉ 추진 배경

- 태안 오지근무 등 직원 고충·불만 토로를 위한 회사의 공식 소통창구 부재
  - "직원이 제안하면 회사가 응답한다"라는 CEO의 소통철학 이행

◉ 추진 경과

- 2019. 3. 내부청렴도 향상을 위한 추진계획 및 청원게시판 운영(안) 수립
- 2019. 3. 청와대 국민청원을 벤치마킹한 청원게시판 구축 및 운영 개시
- 2020. 3. 청원 응답률과 신속성 제고를 위한 시스템 개편 추진

◉ 개선 내용

- 서부청원 게시 및 응답 프로세스

- 담당부서는 「팩트체크 작성」과 「답변하기」 중 택1하여 답변
  - 일반답변 : 고충해소 및 제도개선 등 청원내용 자체에 대한 답변
  - 팩트체크 : 미확인 사실과 오해 소지가 있는 청원에 대해 사실관계를 알리는 답변

◉ 개선 효과

- 현장의 제안에 실무자의 검토 및 정책 반영으로 선순환 제안문화 정착
- 회사정책 관련 허위정보 확대·재생산 방지 및 사내 양방향 열린소통 강화

성공 58 | 한국수자원공사

국민참여 예산제도 활성화로 예산편성의 투명성 강화

사업 제안에서부터 사업선정, 예산심의 등 예산 편성을 위한 의사결정 全 과정에 국민의 참여를 보장하는 국민참여 예산제도 운영

◉ 추진 배경

- 공공정책 결정 과정에 있어 국민의 주도적인 참여 요구 증대
- 기관의 정책 ·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국민의 의견을 반영하여 적정한 예산 편성 및 재정의 투명성 강화

◉ 추진 경과

- 2018. 8. 국민참여 예산제도 도입(11억원)
- 2019. 3. 국민참여 예산제도 예산규모 확대(75억원) 및 국민참여 절차 강화

◉ 개선 내용

- **국민참여 예산제도 개요**
  - (사업제안) 물정책(물환경, 물문제), 국민제안(생활밀착, 사회적가치)으로 구분
    ※ 2019년 대국민 사업 · 아이디어 제안 36건 접수
  - (사업심의) 공모를 통해 일반국민과 외부전문가로 심의위원회(10명) 구성
  - (사업선정) 대국민 온라인 투표를 통해 최우수과제 선정
  - (예산반영) 선정사업에 대한 감사 수감 및 예산 배정
    ※ 접수된 36건 중 우수과제 11건의 실행예산 75억원 반영(2020년)

국민참여예산제도 프로세스

국민참여 예산 플랫폼 구축(3월) ▶ 대국민 아이디어 공모(~6월) ▶ 국민참여 예산 심의 위원회 공모 · 구성(7월) ▶ 심의/대국민 투표(~10월)

◉ 개선 효과

- 국민의 니즈와 제안사항을 반영하여 국민이 원하는 다양한 사업 발굴 · 추진
- 예산편성 절차에 국민의 참여 기회를 보장하여 기관 운영의 투명성 강화

기술실시보상심의위원회 외부위원 참여 규정화

기술이전 기여자 대상 검증시 「내부위원 위주 온정적 심의 ▶ 외부위원 참여를 통한 객관적 검증 절차 운영」으로 투명성 제고

◉ 추진 배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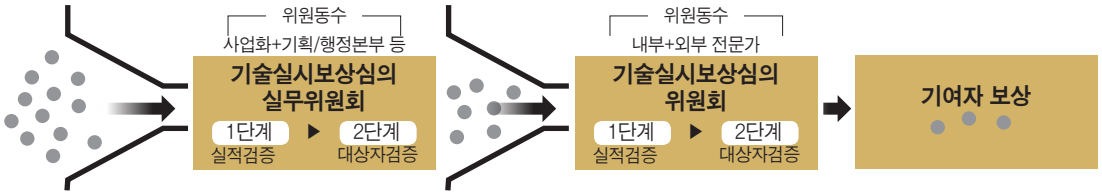
- 기술이전 기여자 보상에 대한 검증 절차 강화

◉ 추진 경과

- 2019.12. 기술이전 기여자 보상에 대한 내부 의견수렴
- 2020. 3. 기술이전 기여자 보상 심의 강화 추진계획(안) 마련 및 내부보고
- 2020. 4. 내부규정(기술이전 요령) 개정 및 시행

◉ 개선 내용

구분	개선 전		개선 후
주체	기술실시보상심의위원회	▶	• 검증주체 이중화 1차 : (신설) 기술실시보상심의실무위원회 2차 : 기술실시보상심의위원회
심의위원	내부	▶	• 심의위원 참여범위 확대 - (실무위원회) 내부위원 - (심의위원회) 내부위원 + 외부위원
검증체계	단계 검증 없고 설명 위주 형식적 검증	▶	• 검증단계의 이중화 - (1단계) 보상실적 대상 부합성 검증 - (2단계) 대상자 분장직무 초과 검증



◉ 개선 효과

- 기술실시 보상심의위원회 외부위원 참여 규정화로 기술이전 보상 투명성 제고

성공 60 | 한국철도공사

부패신고 위로금 제도 도입

내부 신고자의 정신적 피해 등에 대한 금전적 보상(부패행위 신고로 인하여 육체적, 정신적 치료 등에 소요된 실제 비용)을 주는 신고자 보호제도

◉ 추진 배경

- 부패신고자 보호와 신고제도 활성화를 위한 지원 · 보상체계 마련
- 신고자 따돌림 등 2차 피해에 대한 실질적 보상(신고로 인한 치료, 이사 등)으로 불이익 최소화

◉ 추진 경과

- 2019. 6. 공익신고 구조금에 대한 분석
- 2019. 7. 부패행위 신고접수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운영지침 개정

◉ 개선 내용

- **부패신고 위로금 제도 도입**
  - 대 상 : 부패신고(행동강령 위반 포함)로 인한 2차 피해 발생 건
  - 기 준 : 신고 후 2차 피해(정신과 치료, 전출로 인한 이사비용 등)에 대해 보상심의위원회에서 피해정도 및 지급규모를 고려하여 결정

신청서 제출	▶	사실관계확인 (피해규모 등)	▶	보상심위원회 구성 및 지급결정	▶	위로금 지급
대상자		감사실		감사실		대상자

※ 신고자 본인 신청이 원칙이나, 불가피한 경우 친족 또는 동거인 신청 가능

※ 지급 한도액은 최대 2천만 원 이하

◉ 개선 효과

- 신고자 2차 피해에 대한 보상을 제도화함에 따라 신고문화 활성화

안심신고 변호사 제도 도입

외부 변호사가 신고자를 대리하여 신고행위 일체를 처리하는 제도

◉ 추진 배경

- 부패행위, 행동강령 위반, 성범죄 등의 내 · 외부 신고 활성화를 위해 신고자의 익명성 보장, 신고 상담 지원, 신고 후 불이익 조치 방지

◉ 추진 경과

- 2018. 2. 서울시 공익제도 안심 변호사 제도 벤치마킹
- 2018. 3. 안심신고 변호사 제도 도입
- 2019. 7. 부패행위 신고접수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운영지침 개정

◉ 개선 내용

- **안심신고 변호사 제도 도입**
  - 신고대상 : 공사 및 계열사 직원의 비위 행위, 내부고발자 등 신고 후 불이익 행위
  - 신고방법 : 변호사 이메일로 직접 상담 신청
  - 역 할 : 직원의 비위행위 제보 관련 상담, 대리신고, 조사 참여, 제보자 불이익에 대한 보호 조치, 포상금 대리 수령 및 지급

◉ 개선 효과

- 신고자의 익명성 보장, 신고 상담 지원 등으로 신고문화 활성화

성공 62 | 한전KDN(주)

감사정보 게시판 신설 및 감사 지적사례 공유

감사 정보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지적사례를 정기적으로 공유하여, 유사사례 재발 방지에 힘쓰고 비위 근절과 직원 경각심 고취

◉ 추진 배경

- 감사 정보 효과적 관리 및 감사 지적사례 공유로 유사사례 재발 방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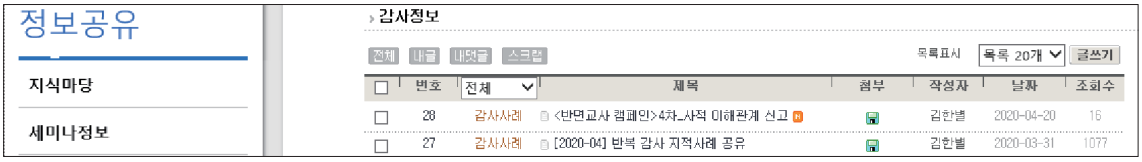
◉ 추진 경과

- 2019. 6. 사내포털에 감사정보 게시판 신설로 감사사례 DB화 등 관리
- 2019. 8. 사내포털 로그인 시 팝업창을 통한 감사 지적사례 단독 게시
- 2019.10. 반면교사(反面敎師) 캠페인(감사 지적사례 상세내용 이메일 발송)

◉ 개선 내용

- 사내포털에 감사정보 게시판 신설로 감사관련 자료 DB화 등 누적관리

구 분	내 용
감사사례	• 종합감사결과, 감사원 및 주무부처 지적사항, 반복 지적사례, 반면교사 캠페인
감사제도	• 감사관련 제도 안내자료 등



- 감사 지적사례 공유(반복 감사 지적사례 전파 및 반면교사 캠페인 시행)

구 분	반복 감사 지적사례 전파	반면교사 캠페인
대상/주기	전 직원 / 월 1회	
방 법	• 감사 지적사례 팝업창 게시	• 감사 지적사례(상세내용) 이메일 발송
내 용	• 반복 감사 지적사례	• (자체) 갑질 등 주요 이슈 사례 • (타사) 감사원, 타 공기업 등 전파 사례

◉ 개선 효과

- 감사정보 게시판 신설을 통한 감사정보 공개 · 활용 등 효과적 관리
- 내 · 외부 비위 적발사례, 반복 감사 지적사례 공유를 통한 유사사례 재발 방지

공기업 청렴사회협의회

공기업 청렴경영 성공 · 실패 사례집

Successful Case

제1장 | 성공사례

청렴문화 확산

대내분야 | 대외분야

성공 63 | 한국수자원공사

청렴소통전문가「클린마스터」제도 활성화

사내 청렴 교육·소통전문가「클린마스터」를 선발·양성하여 전국 124개 全부서를 찾아가는 청렴순회교육과 함께 청렴소통 활동 실시

◉ 추진 배경

- 전국에 산재하는 124개 사업소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청렴교육과 직원 의견수렴·소통의 효율성 제고
- 청렴교육·소통 전문가 양성과 활동을 통해 청렴한 조직문화 조성

◉ 추진 경과

- 2017. 3. 임금피크(정년 임박) 직원 중 클린마스터 선발·운영(7명)
- 2018. 3. 임금피크(정년 임박) 직원 중 클린마스터 선발·운영(24명)
- 2019. 3. 임금피크 직원포함 일반직원 중 클린마스터 선발·운영(26명)

◉ 개선 내용

- **클린마스터의 선발대상을 全직원으로 확대하여 다양한 직위·계층의 구성원과 소통을 활성화하고, 청렴정책·제도 등에 대한 직원들의 관심과 전문성 제고**

  ※ (당초) 임금피크(정년 임박) 직원을 대상으로 선발

• 클린마스터 임무 : 全 사업소를 대상으로 청렴 순회교육, 청렴정책·제도 등에 대한 직원의견 수렴 및 소통활동

• 클린마스터 양성 : 전문성 함양을 위한 워크숍 및 외부전문기관 교육 수강

클린마스터 활동 프로세스

클린마스터 선발 및 양성 ▶ 교육 콘텐츠 자체 개발 ▶ 순회 교육/ 소통 · 의견수렴 ▶ 설문조사/ 피드백

◉ 개선 효과

- 반부패 제도·청렴정책에 대한 높은 이해도를 바탕으로 청렴한 인재 양성 확대
- 124개 全사업소, 다양한 구성원들과의 청렴소통 활성화를 통해 청렴문화 확산
  - 클린마스터 청렴교육 만족도 설문조사 결과 : 응답자 87% '만족' 답변

부패사건 재판 참관제도 시행

부패사건 관련 재판에 회사 임직원을 참관시킴으로써 부패 경각심 제고 및 부패발생 동기 차단

◉ 추진 배경

- '부패=고통' 이라는 마인드 확립으로 부패발생 억제 및 경각심 제고

◉ 추진 경과

- 2016. 본사 및 신인천발전본부 부패사건 참관 시범운영(4회, 69명 참여)
- 2017. 본사 및 신인천발전본부 부패사건 참관 실적 저조(2회, 11명 참여)
- 2018. 전 사업소 부패사건 참관 확대 시행(14회, 171명)

◉ 개선 내용

- **2019년 직원 및 협력사 부패사건 공동 참관**
  - 공판체험 확대시행(15회)

  ※ 2018년(우리회사 직원만 참관) ▶ 2019년(협력사 포함 공동참관)

구 분	2019년 참관실적	비 고
임직원	• 본사 61명 144명	• 고위간부 및 고객접점부서 우선 참관
협력사	• 한전KPS 등 45명	• 협력사 9개 기관 참여

- 2019년 자체 외부청렴도 조사결과 : 부패위험지수 9.72점(전년대비 0.07점 향상)
- 부패사건 참관 후 체험수기 공모(전년대비 21건 증가)
  - 공모실적 : 「가족애가 공직자의 부패를 정당화 할 수 있는가?」 등 30건
  - 체험수기 주요내용 : 포탈넷 게시 등을 통해 전 직원 공유
- 부패공판체험 우수자에 대해 국내외 연수 및 포상 우선 수여
  - 2019.12. 사장상 3개, 포상금 지급 등

◉ 개선 효과

- 2016년 ~ 2018년 우리회사 부패행위자 발생 Zero화 기여
- 고위직의 솔선수범, 협력사와 공동 부패사건재판 참관으로 부패발생 억제

성공 65 | 한전KDN(주)

「맞춤형 청렴체험 몰입교육」 시행

청렴전문 외부연수원 활용, 전일제 교육프로그램 참여로 청렴교육 몰입도 향상

◉ 추진 배경

- 청렴문화 확산 및 윤리·인권인식 제고를 통한 청렴감수성 향상

◉ 추진 경과

- 2019. 5. 3직급 이하 맞춤형 청렴체험 교육 시행
- 2020. 6. 4직급(가) 이하 맞춤형 청렴체험 교육 확대

◉ 개선 내용

- **"소통과 공감"을 위한 직급별 이슈 공유 및 소통의 시간 확대**
  - 대상 : 3직급 이하
  - 장소 : 장성군 평생교육센터
- **청렴관련 전문 교육기관의 1박 2일 교육 프로그램으로 교육에 몰입할 수 있는 환경 조성**
- **다양한 체험형 청렴교육 콘텐츠 활용**
  - 청렴으로 가는 길(장성군 청렴전문강사)
  - 청백리 체험 및 청렴 유적지 탐방
  - 청백리 삶을 통한 성찰의 시간
  - 숲에서 청렴을 품다(숲해설사)
- **교육 효과성 평가 결과**
  - 교육 후 청렴인식 10.9% 상승, 교육만족도 98%
  - 정기적 시행 등 교육 확대 의견 제시

◉ 개선 효과

- 전 직원의 청렴수준 향상 및 청렴기업이미지 제고
- 청렴정책 의견수렴을 통한 '소통의 장' 마련으로 청렴 공감대 형성
- 체험형 양방향 교육으로 청렴교육에 대한 긍정적 인식 확산

「청렴아이」 선발·운영으로 청렴문화 확산

신입사원 중심으로 「청렴아이」 선발, 뮤지컬, 연극, 청렴웹툰 등 다양한 청렴교육 활동으로 청렴문화 확산

◉ 추진 배경

- 단방향·주입식 청렴교육으로 인한 직원의 관심도 하락
- 직원이 직접 참여하고 공감하는 교육 프로그램 개발 필요
- 기존의 틀을 벗어난 다양한 방식의 청렴 문화 활동 요구

◉ 추진 경과

- 2015. '코레일 청렴아이' 제1기 선발·운영(공연팀 7명)
- 2016. '코레일 청렴아이' 제2기 선발·운영(공연팀 7명, 웹툰팀 2명)
- 2018. '코레일 청렴아이' 제3기 선발·운영(공연팀 6명, 웹툰팀 3명)
- 2019. '코레일 청렴아이' 제4기 선발·운영(공연팀 5명)

◉ 개선 내용

- **입사 3년차 미만 신입사원 대상으로 「청렴아이」 선발·운영**
- **반부패·청렴문화 확산을 위한 사례위주 뮤지컬 및 역할극 공연**
  - (내부) 본사, 지역본부 등 16회 공연, (외부) 권익위 등 6회 공연
- **청탁금지법, 갑질사례, 행동강령위반 등 청렴 웹툰 제작**
  - 2016. ~ 현재, 총 45편 제작·배포
- **권익위 등 대외공모전 참가하여 대상(국민권익위원장 상) 등 다수 수상**
  - UCC·다큐멘터리·랩·수기 등 다양한 분야 총 15명 수상

◉ 개선 효과

- 뮤지컬, 역할극, 청렴웹툰 제작 및 공모전 참여 등 다양한 활동으로 청렴문화 확산
- 온라인 매체 홍보강화를 통한 대외 청렴이미지 제고

성공 67 | 한국전기안전공사

사업소 청렴지킴이, 준(準)감사인 제도 시행

본사와 사업소 간 준감사인 제도 운영으로 사업소의 상시적 자정 기능 (현장 상시 모니터링 시스템)을 강화하여 부패리스크 제거 선제 대응

◉ 추진 배경

- 적정한 자체감사 인력 확보의 애로사항 타개 및 감사기능 효율성 확보를 위해 사업소별 준감사인 위촉(감사원에서 자체감사 인력비율 상향 권고)

◉ 추진 경과

- 2011. 자율감사 활성화를 통한 리스크 선제적 대응을 위해 공공기관 최초 도입
- 2014. 감사원 자체감사활동 및 감사연구원 벤치마킹 우수사례 선정
- 2020. 감사방식 조정(처분 위주 ▶ 예방감사 위주)으로 감사 질적 개선 추구

◉ 개선 내용

- **전국사업소에 준감사인 60명(사업장별 1명) 위촉하여 준감사인 역할 수행**

※ 준감사인 임무
- 자율감사 : 사업소별 업무교차 확인감사 및 방만경영 예방 활동
- 청렴활동 : 청렴문화 확산을 위한 청렴정책 추진 등 청렴리더 역할 수행
- 가교역할 : 본사와 사업소간 현장의 소리 전달 등 가교 역할과 반부패 청렴제도에 대한 제도개선 건의 등 정책 제안자 역할 수행

  - 자율감사에 의한 온정주의 방지를 위해 사업소간 릴레이 감사 운영
  - 준감사인 주도로 사업장별 차별화된 청렴활동 전개
- **준감사인의 사기양양과 감사 역량 강화를 위해 매년 준감사인 대회 개최**
  - 우수 준감사인을 선정하여 사장 표창 및 인센티브 부여
  - 내부감사 스킬 향상 및 청렴 관련 교육을 통해 내부감사 역량 강화

◉ 개선 효과

- 사업소의 부조리 행위 사전예방 및 방만 경영 근절
- 적정 감사인력 확보의 한계를 극복하고 자체감사 성과 제고
- 사업소 맞춤형 청렴정책 입안 및 실행으로 사업소 자율 청렴문화 정착

감사준비금 지급제도 도입

수감부서에 종합감사 준비 비용을 지원하는 감사준비금 지급제도 도입으로 수감부서의 감사준비를 위한 인력·시간·예산투입 제로화 및 감사의 투명성 제고

◉ 추진 배경

- 종합감사 시 과도한 비품, 다과의 구입으로 청탁금지법 위반 우려
- 청탁금지법의 성실한 준수와 종합행정감사의 투명성 확보

◉ 추진 경과

- 수감부서의 비용집행 지원을 위한 감사준비금 지급제도 도입
  - 감사실 예산으로 편성된 준비금 지급(감사실▶수감부서)

구 분	내용	비 고
2016년	• 광주교통방송 등 3개 지방조직(150천원 지급)	
2017년	• 충북지부 등 14개 지방조직(700천원 지급)	
2018년	• 제주지부 등 10개 지방조직(500천원 지급)	
2019년	• 전남면허시험장 등 17개 지방조직(1,190천원 지급)	• 종합감사 주기변경(2019.01.31) 2년▶3년, 5만원▶7만원

◉ 개선 내용

- **종합감사 시 발생하는 비용을 사전에 지급(2016.10.)**
  - 청탁금지법 시행에 맞춰 감사실 예산에 "감사준비금" 예산 편성
  - 종합감사 1~2주전 감사대상 부서에 감사준비금(5만원) 지급
- **종합감사 감사업무 종합계획 수립(2019. 1.)**
  - 종합감사 주기변경을 통한 자체감사 내실화와 수감부담 경감
  - 종합감사 주기변경(2년▶3년), 감사준비금 상향(5만원▶7만원)
  - 익명신고시스템, 청렴Hot-Line 등 내부신고 활성화

◉ 개선 효과

- 감사관련 예산기준 마련으로 투명성 강화 및 청탁금지법 위반 예방
- 종합감사 수감부서의 예산부담 및 인력지원 경감을 통한 내부 만족도 제고

성공 69 | 한국남부발전(주)

청렴자가진단 프로그램 운영

매일 3회, 전 직원 참여형 자가진단 프로그램(청렴 하루) 운영, 갑질·괴롭힘 예방을 위한 직장 에티켓 민감도 자가진단

◉ 추진 배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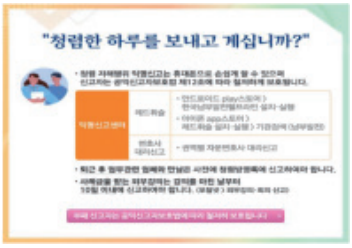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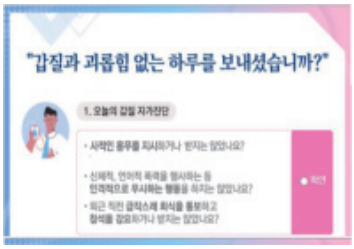
- 행동강령 철저 숙지 및 준수를 위한 참여형 프로그램 도입
- 갑질,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위험도 자가진단 시행

◉ 추진 경과

- 2018. 6. 청렴 하루 시행(프로그램 개선 : 2019. 2.)
- 2019.11. 갑질 자가진단 및 직장 에티켓 민감도 진단

◉ 개선 내용

- 매일 3회(출근, 중식, 퇴근), 전 직원 참여 청렴 자가진단 프로그램 운영

출근 직후	중식 시간	퇴근 직전
청렴한 하루 다짐	부패·공익신고 방법 안내	오늘의 갑질 자가진단
		

- 갑질·직장 내 괴롭힘 민감도 자가진단(반기 1회)

갑질 자가진단	직장 에티켓 자가진단
갑질 위험도 진단 및 실태조사	직장예절 및 에티켓 민감도 진단

◉ 개선 효과

- 전 직원이 참여하는 실효성 있는 프로그램 운영으로 반부패·청렴의식 제고
- 갑질 위험도 자가진단을 통한 갑질 예방 및 취약분야 발굴·개선

간부급 도덕성 검증·청렴사직 서약 실시

간부급 승진예정자를 대상으로 도덕성 검증을 실시하고, 간부 임직원에게는 청렴사직 서약제도를 운영

◉ 추진 배경

- 부패인식 및 경험 조사 결과 고위 임직원을 부패유발 주체로 지목
- 고위직 임직원은 주요 정책결정 과정에 참여함으로써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 재량과 권한이 많아 높은 잣대의 청렴 및 윤리성이 요구됨

◉ 추진 경과

- 2009. 5. 청렴사직 서약 도입
- 2012. 7. 간부급 도덕성 검증제도 도입

◉ 개선 내용

- **간부급 도덕성 검증제도 운영**
  - 간부급 승진대상자에 대해 승진심의 前 국세·지방세 납부확인 및 음주운전 등 교통법규 위반여부 검증 실시
  - 검증자료는 인사위원회 심의자료로 활용

〈1단계〉 승진예정 인원확정 ▶ 〈2단계〉 후보자명부 작성 (5배수) ▶ 〈3단계〉 인사위원회 심의 (2배수) ▶ 〈4단계〉 승진자 결정 (최종 인사권자)

〈도덕성 검증〉 감사부서

- **청렴사직 서약제도 운영**
  - 청렴사직 서약의 근거 규정 정비(반부패·청렴업무 지침)
  - CEO를 포함한 全 간부 임·직원이 청렴사직 서약서를 작성하여 감사실로 원본을 제출, 결의대회 등을 통해 청렴사직 서약 실시

◉ 기대 효과

- 간부들이 솔선수범하는 문화를 조성함으로써 그 영향력 및 파급력을 통해 전사적인 청렴 조직문화로 확산
- 간부급 승진예정자의 자기관리 및 내부통제 강화 효과 달성

성공 71 |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역별 청렴도 향상을 위한 특화사업 추진

지역별 특화사업 추진을 통해 전 직원의 자발적인 청렴마인드 확산

◉ 추진 배경

- 청렴도 향상을 위한 자발적 역량강화와 청렴실천 견인을 위한 추진동력 마련을 위해 지역특성을 고려한 지역본부 주관의 특화사업 추진

◉ 추진 경과

- 본인의 직간접 경험담을 통한 청렴메세지 전달
- 촬영한 영상물 중 우수작을 선정하여 지역본부 전 직원에게 매월 동시 상영

◉ 개선 내용

- **쌍방향 청렴소통 콘텐츠 '청렴방송' 제작**

프로그램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	청렴 현장을 찾아서
참가자	지사장	직원
내용	간부들이 솔선수범하여 직원들에게 전해 주고 싶은 청렴메시지를 담은 영상칼럼 형태의 제작물 • 나에게 청렴이란 ☐ 이다. • 청렴 관련 직 · 간접 경험담 • 성현 · 성인들이 남긴 청렴 교훈 • 그 외 자유 주제	지사 방방곡곡 우리들만의 진솔한 청렴 이야기를 지정이나 형식 없이 자유롭게 구성한 UCC 형태의 제작물 • 지사의 청렴 특화사업 소개 • 직원들의 청렴업무 실천 사례 • 청렴메시지가 담긴 상황극 • 그 외 청렴 관련 자유 주제

- 딱딱하기 쉬운 '청렴' 이라는 단어를 재미있고 즐기는 청렴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하여 청렴문화를 거부감 없이 수용

◉ 개선 효과

- 본부 ↔ 지역본부 ↔ 지사 청렴정책에 대한 공감대 형성 및 추진력 강화
- 위로부터의 변화와 아래로부터의 자발적 참여가 어우러진 청렴마인드 확산

직원만족경영T/F 도입으로 주요 윤리이슈 해결

신입직원부터 이사장까지 함께 공단 자체 윤리문제 해결 노력을 통해 즉시 개선 가능한 과제 해결로 내부 청렴성 강화

◉ 추진 배경

- 내부청렴도 취약항목(인사, 업무지시 공정성)의 근본적 문제 해결

◉ 추진 경과

- 2019. 5. 직원만족경영TF 구성(이사장부터 신입직원까지 총 30명으로 구성)
- 2019. 9. 워크숍 8회 개최, 조직문화 및 인사제도 개선방안 논의
- 2019.12. 다면진단 도입, 업무분장 합리화 등 즉시 개선 가능과제 해결

◉ 개선 내용

- **관리자 다면진단 도입 및 차기 보임에 반영**
  - 관리자(173명) 대상으로 최근 3년간 동일·유관부서 근무자가 진단 실시
  - 직위별 상·하위 10%를 기준으로 우수자와 부진자 선정
  - 다면진단 우수자 중 성과·역량평가 우수자는 발탁보임(3명) 실시, 다면진단 부진자 경고 및 최하위자는 심의를 거쳐 직위 미부여(3명)

- **업무량·난이도 감안, 직급(경력)에 맞는 업무분장 합리화**
  - 부서별 업무분장 점검 및 업무분장 내역 전직원 공유
  - 핵심업무 상위직급 담당 의무화 및 업무분장 공개회의 도입

- **직원 성과역량 향상제도 개선(안) 마련**
  - 직무능력 향상 및 업무태도 개선이 필요한 직원 지원체계 마련
  - 성과평가·역량평가·다면평가를 종합, 3단계 관리방안 제시

  ※ (1단계)경고·역량개발 ▶ (2단계)배치전환·역량개발 ▶ (3단계)직위 해제·역량개발

◉ 개선 효과

- 2018년 대비 2019년 인사관리 만족도 향상(82.7점▶84.1점)
- 2019년 권익위 청렴도 조사 '업무지시 공정성' 지표 점수 상승(6.43점▶6.90점)

성공 73 | 도로교통공단

익명신고시스템 도입을 통해 내부신고 활성화

외부 전문기관에 익명신고시스템을 위탁 운영하여 신고자의 익명성 보장을 강화하고 시간·장소 등 물리적 제약이 없는 신고환경 개선을 통해 내부신고 활성화 유도

◉ 추진 배경

- 부패행위에 대한 내부신고를 기반으로 조직내 부패행위 근절 도모
- 신고자 보호를 강화하고 사용자 편의 제고를 통해 내부신고 활성화

◉ 추진 경과

- 자체청렴도 조사결과(2018년)
  - 도입 후 5개월간 신고건수 4건, 어플리케이션 다운로드 50여명
  - 응답자의 63%가 내부 신고시스템에 대해 잘 모른다고 응답

- 도로교통공단 익명신고시스템 위탁운영(2019년)
  - 신고내용 확인결과 공익적 제보(62%), 타인 비방 및 허위 · 추측성 제보(38%)
  - 도입효과 확인(제보건의 50% 처분 요구) 및 비방 · 보복 · 추측성 제보의 문제점 발생

◉ 개선 내용

- **신고처리 절차개선**(2020년)
  - 개인 명예손상과 피감인의 업무 피로도 발생 및 건전한 조직문화 위축
  - 비방 및 추측성 제보 등 여부 판단을 위한 내부심의위원회 구성
  - 필요시 변호사 자문 및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자료요구(감사관▶제보자)
  - 7일 이내 피드백이 없을 경우 종결 및 허위제보 확인시 별건 조사 검토

◉ 개선 효과

- 익명신고시스템 도입으로 신고자 보호 및 제보의 편의성 확보(내부신고 활성화)
- 익명제보의 역효과(음해 · 비방 · 추측성 제보) 차단으로 건전한 청렴문화 조성

내부직원 신고채널 신설, 내부신고 활성화

기존 내외부 신고기능 구분 없이 운영되던 익명 신고채널을 분리, 내부직원 전용 신고채널 신설 및 홍보로 내부직원의 신고 활성화

◉ 추진 배경

- 내·외부 구분없이 운영해온 기존 익명신고 채널(레드휘슬) 및 사내 인트라넷 익명 게시판 등은 신분노출 우려 및 내부 홍보 부족으로 내부직원 신고 미흡
  - 연간 협력사/자회사 직원 등 외부 신고는 100건이 넘는 반면, 2018년까지내부직원 신고 건수는 전무

◉ 추진 경과

- 2016. 3. 레드휘슬에 위탁하여 내외부 신고 구분 없이 익명신고 채널 운영
- 2019.12. 기존 익명신고채널 분리, 내부 전용 신고채널 신설, QR코드 제작

◉ 개선 내용

- **기존 신고채널 분리, QR 코드 제작, 홍보 강화 등 내부신고 활성화 노력**
  - (채널 개설/접근성 강화) 내부직원 전용 익명신고 채널을 개설하고, QR 코드를 제작하여 1회 클릭만으로도 접속 가능하도록 접근절차 간소화
  - (홍보 강화) 내부직원 신고 활성화를 위한 사내 인트라넷에 홍보배너 게시(QR코드 노출) 및 신고채널 홍보/교육자료 배포
  - 2020년 내부 신고채널 집중신고 기간 운영 및 채널 익명성 홍보 등 사내 캠페인 시행을 통해 내부직원 신고 지속 독려

개선 전	개선 후
• 내외부 신고 구분 없이, 통합 운영되고 있으며 신고채널 접근 절차 복잡 • 익명신고임에도 신고자 신분 노출 등에 대한 막연한 우려로 내부직원 신고 기피	• 기존 신고채널 분리, 내부직원 채널 개설 • QR 코드 제작으로 채널 접근성 강화 • 공사직원 대상 홍보 강화, 인트라넷 배너 게시, 교육자료 배포 등 홍보 강화

◉ 개선 효과

- 내부직원 신고채널 활성화로 내부신고 실적 증가(2018년 0건▶2019년 13건)

성공 75 | 한국남동발전(주)

신구 세대간 갈등관리 등을 위한 청렴콘텐츠 개발

사내 홈페이지를 활용한 다양한 청렴윤리 및 갑질근절 콘텐츠 홍보로 전직원의 청렴한 업무환경 조성 및 공감대 형성

◉ 추진 배경

- 청렴윤리교육에 대한 직원들의 관심도 저하 및 피로도 증가로 효과감소
- 신세대 직원 증가에 따른 신·구세대간 이해도 차이로 갈등 심화
  ※ 부당한 업무지시 등에 대한 견해 차이 ▶ 내부청렴도 하락의 원인

◉ 추진 경과

- 2019. 6. 설문조사를 통한 청렴윤리 콘텐츠개발 의견수렴
- 2019. 8. 갑질근절 및 기업문화 개선 웹툰형식 콘텐츠 개발
- 2019.10. 웹툰 시리즈(13개 주제*) 사내 홈페이지 게시 및 홍보, 퀴즈대회 시행
  * 휴가·출장·회식문화, SNS 업무지시, 사적지시, 인사발령, 음주, 업무불이익, 협력기업 갑질 등

◉ 개선 내용

- **웹툰 형식 콘텐츠 개발**
  - 갑질근절·기업문화 개선 웹툰
    - 직장내 갑질, 괴롭힘 등 세대간 갈등분야 사례 조사
    - 불합리한 구체적 사례를 웹툰으로 제작·게시하여 세대간 이해의 장 조성
    - 직원 및 협력사 설문조사 결과 반영으로 직원의 관심도와 흥미 유발
- **사내 홈페이지를 활용한 청렴윤리문화 홍보 강화**
  - 직원의 관심도와 흥미를 유발하는 청렴윤리 콘텐츠 시리즈로 게시

청렴윤리 웹툰		마이크로러닝 청렴동영상	청렴퀴즈
갑질(휴가)	사적지시		

◉ 개선 효과

- 전직원 역지사지를 통한 공감대 향상 및 청렴경영에 대한 친근감 강화

CEO 참여 청렴선언 동영상 제작 및 공유

CEO 및 상임감사위원 등 경영진 10인의 청렴의지를 담은 청렴선언 동영상을 제작하여 전 직원 공유

◉ 추진 배경

- Top Down 솔선 청렴문화 확산 및 청렴도 1등급 달성 의지 전파

◉ 추진 경과

- 2018.12. 종합청렴도 향상을 위한 로드맵 수립 지시(CEO)
- 2019. 2. 2019년 청렴도 향상 추진계획 수립
- 2019. 4. "동서발전 경영진 10인의 청렴선언" 동영상 제작·공유

◉ 개선 내용

- **주관부서/제작방법** : 사회적가치추진실 윤리준법부/외부 전문업체 용역
- **시행방법**
  - CEO를 포함한 경영진 10인의 청렴선언 동영상 제작
  - 사내 인트라넷을 통한 전 직원 공유(2019. 5. 7. ~ 2019. 5.10. 게시)
- **세부내용**
  - 경영진 본인이 생각하는 "청렴은 무엇입니까?" 에 대한 응답
  - 본인의 청렴의지를 담아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선언
  - 청렴 슬로건 "나로부터! 우리함께!" 제창

구 분	청렴이란?	청렴선언(약속)
CEO	• 우리가 마시는 공기, 마시는 물과 같다 선택이 아니라 생존의 문제이다	• 공유, 공개, 공감의 3공을 바탕으로 솔선수범하는 리더가 되겠습니다
상임 감사위원	• 우리가 생산하는 전기와 같다 국민을 행복하게 하는 깨끗한 에너지 바로 청렴에서 만들어진다	• 부정과 반칙, 특권이 발붙이지 못하도록 저부터 실천하겠습니다

◉ 개선 효과

- CEO 및 경영진의 솔선수범을 통해 조직 구성원의 신뢰감 조성
- 건전하고 투명한 청렴문화 확산

성공 77 | 한국서부발전(주)

상사 갑질 근절을 위한 「청렴인권 실천강령」 선포

「상급자 솔선수범」과 「하급자 신고 활성화」가 조화된 청렴문화 정착으로 직장 내 빈번히 발생하는 고질적 상사 갑질 퇴출

◉ 추진 배경

- 신·구 세대 조직 구성원들 간 대립·갈등 심화로 청렴공동체 의식 약화
  - 과거 고위간부 위주의 비위사건 발생 등으로 직원들의 회사에 대한 신뢰 하락

◉ 추진 경과

- 2019.12.~2020. 1. 청렴문화 확산을 위한 전사 순회 워크숍 시행(5회)
- 2019. 3.~2020. 2. 서부청원과 외부 소통채널 분석으로 직원 불만사항 도출
- 2020. 3. 청렴·인권 10대 실천강령 선포 및 관련 신고채널 정비

◉ 개선 내용

- **상사갑질 근절 10대 실천강령 선포**

- 상사로서 절대 하지 말아야 하는 10가지 행동 -	
① 부서회식 강요 및 2차 연장	⑥ 출장 · 휴가원 등 근태행정 일방적 전가
② 술잔 돌리기 및 음주 강요	⑦ 일상적 · 지속적 사적 심부름
③ 점심 · 저녁 식사 당번제 운영	⑧ 모욕감을 유발하는 욕설, 폭언
④ 하급자 차량이용 반복적 출퇴근	⑨ 수치심을 유발하는 성적 농담, 행위
⑤ 휴가 · 유연근무 사용 무분별한 제한	⑩ 퇴근 후 하급자 사적 불시 호출

- **「CEO와의 대화」 신고채널 운영**
  - 10대 실천강령 위반 시 CEO(핫라인) 및 윤리주관부서 신고접수 가능
- **실천강령 위반 제재 시행**
  - 사실관계가 일치하는 경우
    - 단순 불합리·불공정 관행의 경우 : 행위자의 공개사과문 홈페이지 게재
    - 관련 법령·기준 위반사항인 경우 : 감사실 조치 의뢰
  - 사실관계가 상이한 경우 : 조사·상담결과를 윤리경영추진관이 직접 회신

◉ 개선 효과

- 고질적 상사 갑질 및 불합리한 관행 근절로 직원들의 회사에 대한 신뢰도 향상

직원주도 청렴 BJ 방송 시행

회사생활의 일상을 소재로 기획에서 편집까지 전 과정에 직원들이 직접 참여하여 '재미와 청렴이 함께하는 BJ영상 콘텐츠'를 제작, 사내에 방영하는 프로그램

◉ 추진 배경

- 뉴미디어 시대 새로운 방식의 임직원 청렴 감수성 자극 수단 도입 필요
- 기존 윤리·인권 교육에 대한 자발적 참여 및 지속적인 수강 유도에 한계

◉ 추진 경과

- 2020. 1. 윤리·인권경영 추진계획 및 직원주도 BJ 방송 계획 수립
- 2020. 1. 청렴문화 확산을 위한 BJ 방송 제작기반 구축 및 사내방송 시행

◉ 개선 내용

- **직원 주도의 청렴 BJ 영상 콘텐츠 제작**
  - 재미와 청렴이 함께하는 「아이스크림(I Scream) TV」
    - (공유) 조직문화 선도 우수부서 및 직원 일화 소개
    - (공감) 회사 맞춤형 사례 중심의 흥미로운 윤리·인권 관련 영상소개
    - (소통) 칭찬 대상 부서와 직원에 대한 제보 접수 등 각종 의견 수렴
  - 한큐에 알려주는 「한큐(HQ) TV」 제작·방송
    - V-Log 형태의 1인 진행과 인터뷰로 회사생활 관련 직원들의 궁금증 해소

- 사내 변호사 인터뷰 활용, 알기 쉬운 윤리 · 인권 준법 관련 정보 전달
- 직원 인터뷰를 통해 OH공사 현장 등 생생한 현장의 목소리 청취
- 코로나19 대응 재택 및 분리근무 요령 및 사례 소개 등

- **사내방송 시행 및 우수부서 포상**
  - 방송주기 : 매주 2회(화요일 본방송 및 목요일 재방송)
  - 참여유도 : 방송 참여자 및 우수부서·개인에 대한 포상 시행

◉ 개선 효과

- 직원 주도의 자생적 청렴문화 정착으로 임직원 청렴 감수성 제고
- 국민권익위원회 청렴도 향상 달성 및 기업 이미지 회복에 기여

성공 79 | 한국중부발전(주)

청렴마일리지 운영

청렴마일리지 : 개인 및 부서의 반부패 청렴활동 실적에 대한 평가수단으로서 청렴활동을 하는 개인에게 부여하는 점수

◉ 추진 배경

- 내부신고자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권고(2011년 반부패시책평가)

◉ 추진 경과

- 2012. 5. 청렴마일리지 운영지침 제정
- 2014. 4. 운영지침 개정(마일리지 부여기준 세분화 및 감점기준 구체화)
- 2019. 6. 운영지침 개정(마일리지 평가기간 및 부여기준 변경 등)

◉ 개선 내용

- 청렴마일리지 개정 내용

개정내용	개정사유
• 용어정의 및 관리기준 추가(운영·주관부서)	• 마일리지 관리책임 명확화 및 업무분장 세분화
• 마일리지 평가기간 변경 (전년도 12월~당해년도 11월▶전년도 1~12월)	• 승격 시 동일연도 가점 적용
• 마일리지 부여기준 변경 (배점 상향, 자발적 참여 활동 세분화 등)	• 청렴교육 및 활동 참여 독려
• 마일리지 감점기준 추가 (정당한 이유 없이 교육 취소)	
• 품질관련 직무 운영기준에 추가	• 검수 및 등록심사 업무 투명성 확보

◉ 개선 효과

- 조직 청렴도 향상을 위해 반부패 청렴활동에 직원의 자발적·능동적 참여 유도
- 반부패·청렴활동 실적에 따른 마일리지 부여로 청렴실천 의식 제고

초지일관(初志一貫) 프로그램 도입

입사 초기 청렴의식 함양 및 아래로부터의 청렴문화 확산을 위해 신입직원 대상으로 '초지일관(初志一貫) 프로그램'도입

◉ 추진 배경

- 신입직원 중심의 자체적 청렴활동을 통해 입사초기 청렴의식 함양 및 아래로부터의 청렴문화 확산

◉ 추진 경과

- 2017. 2. 초지일관 프로그램 구성 및 활동방향 수립
- 2020. 2. 제4기 청렴동아리(청아한 : 청렴하고 아름다운 한국철도시설공단) 선발

◉ 개선 내용

- **입사 1~4년차 직원 대상 집중 청렴교육 및 청렴활동 프로그램**
  - 초지일관 프로그램 구성 및 대상

단 계(대상)		프로그램 내용	목 표
초임단계(1년차)	▶	신입직원 청렴교육	기초 청렴의식 배양
지의단계(2년차)	▶	신청백리 체험교육	청렴의식 심화과정
일심단계(3년차)	▶	청렴동아리 활동	청렴문화 Boom-up
관철단계(4년차)	▶	1~3년차 청렴멘토 활동	청렴프로그램 활동 지원

  - 세부활동내용
    - 초임단계 : 1년차 신입직원 전원 임직원 행동강령 및 청렴소양교육
    - 지의단계 : 2년차 신입직원 전원 1박 2일 新청백리 현장체험 프로그램
    - 일심단계 : 3년차 희망자 대상 자율적 청렴동아리(청아한) 활동
      * 제3기 동아리 활동 : 청렴홍보물 제작·배포, 청렴캠페인, 부패개선 아이디어 개진 등
    - 관철단계 : 4년차 희망자 대상 1~3단계 청렴프로그램 활동 자문

◉ 개선 효과

- 초지일관 프로그램을 신입직원들의 통과의례로 정착하여 조직 내 청렴의식 확립
- 신입직원들의 자율적 청렴활동을 통해 소통과 공감의 청렴문화 확산

성공 81 | 한국조폐공사

내부신고에 대한 직원 인식개선으로 내부신고 활성화

내부신고 현황 분석을 통한 자체 개선방안 마련 및 실시로 내부신고 건수 확대 등 활성화

◉ 추진 배경

- 부패사건 및 내부신고 건수가 없음에도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 결과 내부청렴도 부문의 부정적 응답이 조사되어 이를 개선하고자 내부신고 활성화 추진

◉ 추진 경과

- 2018. 9. 내부신고 활성화 방안 수립
- 2018.10. 청렴동아리 및 청렴옴부즈만 회의를 통한 최종(안) 확정

◉ 개선 내용

- **익명성이 보장된 온라인 내부신고 채널 홍보를 위한 "클린스티커" 배부**
  - 내부신고제도 및 신고채널 등의 내용을 기재한 클린스티커를 공개된 장소에 부착
  - ※ 클린스티커에 포함된 QR코드를 휴대전화로 스캔 후 신고서 작성
- **신고채널 홍보를 위한 '클린신고 모의훈련' 실시**
  - 클린스티커를 활용한 모의훈련 실시 및 참가자를 대상으로 포상
  - 최초 실시(2018.10.) 후 분기별 1회 지속 실시
- **내부신고에 대한 직원의 부정적 인식 개선**
  - 내부신고자 보호 제도 안내 및 내부신고 인식개선을 위한 특강 실시
  - 신고채널 명칭 변경 : 내부신고 ▶클린신고
  - ※ '청렴동아리' 회의 결과 '내부신고'의 용어가 직원에게는 소위 '고발자' 등의 부정적 어감으로 느껴진다는 의견이 접수되어 명칭 변경
- **내부신고 채널 정비**
  - 직원 설문조사를 통해 실효성이 낮은 신고채널 폐지 등 정비

◉ 개선 효과

- 내부신고에 대한 인식개선 및 신고채널 홍보로 건전한 내부신고 문화 정착
  - 내부신고 건수 지속 증가 : 2017년 2건 ▶ 2018년 7건 ▶ 2019년 9건

부패방지경영시스템 국제표준 ISO37001 인증 획득

임직원의 청렴한 윤리관 확립과 실천을 통하여 공기업으로서 사회적 책임 완수

◉ 추진 배경

- 「정부 5개년 반부패 종합계획」에 따라 투명한 경영환경 구축 및 책임성 강화를 위하여 부패방지경영시스템(ISO 37001) 인증 획득 추진

◉ 추진 경과

- 2019.12. 부패방지경영시스템 국제표준 ISO 37001 인증 획득

◉ 개선 내용

- 5대 항목 기반 부패방지경영시스템 구축 용역 추진
  - ① 부패방지경영 수준 진단, ② 부패방지경영시스템 요구사항 및 내부심사원 교육, ③ 부패방지경영 문서화 시스템 구축, ④ 부패 리스크 평가, ⑤ 부패방지 경영시스템 이행 지원
- 업무별 부패방지경영 수준진단 및 부패리스크 평가를 위한 실무추진반 구성(9.27.)
  - 본사 각 부서별 1인(총 15명)으로 구성 및 워크숍 개최(3회)
  - 부패방지 성과관리지표 관리, 시스템 적정성 점검 등
- ISO 37001 인증에 노·사·감의 공감대 형성 및 추진력 제고를 위한 「노·사·감 반부패 청렴 실천 협약」 체결(9.30.)

- 감사부서 주도로 사장(집행부)과 노동조합이 함께 체결한 협약으로 실천협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3자간 협의를 통하여 부패방지경영시스템 구축 및 인증 협조 등 세부과제 도출
- 감사실 주관하는 ISO 37001 인증 추진 및 실무추진반 구성, 노동조합은 직원의 불만, 사기저하 등 노사갈등 사전 방지
- 감사실 주관 「2019년 사회적 가치 페스티벌」 개최 등

◉ 개선 효과

- 부패방지경영시스템(ISO 37001) 인증 획득을 통한 투명한 경영환경 구축

성공 83 | ㈜한국가스기술공사

전사적 전문 청렴교육 시행 ['찾아가는 청렴교육']

전 부서(지사) 대상 전문강사가 직접 찾아가는 전문교육 시행

◉ 추진 배경

- 전 부서·지사 대상 직접 전문교육 시행을 통한 교육 효과 극대화

◉ 추진 경과

- 2019. 7. 「찾아가는 청렴교육」 운영계획 수립
- 2019. 8. 부서·지사별 수요 파악 후 교육 진행 일정 확정
- 2019.11. 전 부서·지사 대상 「찾아가는 청렴교육」 시행

◉ 개선 내용

- **공사 윤리경영 최초 전문강사 자격 보유자 전사 순회 교육 시행**

구 분	개선 전	개선 후
전문강사 집합교육	• 청렴강사 자격 보유자는 있으나 교육 횟수는 극소	• 청렴강사 자격 보유자가 직접 방문하여 교육 시행
	• 강사 자격 검증 및 표준 교육자료 부재로 교육의 품질 미흡	• 권익위 청렴강사 양성과정 수료를 통한 공식 강사자격 보유자만 강사로 편성 • 표준 교육자료 제작으로 수준높고 일률적인 교육 시행 유도

- 각 부서 · 지사별 교육 일정 수립 ▶ 강사 매칭 ▶ 직접 방문교육 실시
- 15개 부서(지사)에 사내강사 교육 7건, 외부강사 교육 8건 시행

◉ 개선 효과

- 전문교육 이수 임직원 비율 대폭 상승(14.3% ▶ 57.1%)
- 권익위 부패방지교육 추진실적 중 교육방법 지표 점수 상승(18.7 ▶ 22.6)

우수협력사 선정 시 청렴성 평가 도입

우수협력사 선정 시 부정당업자 제재 이력 회사는 배제하고, 청렴교육을 이수한 경우 평가 가점 부여

◉ 추진 배경

- 전력사업 파트너인 협력업체의 청렴성 강화를 통한 상생·청렴문화 정착

◉ 추진 경과

- 2018. 7. 송배전 협력사「시공품질 우수기업」청렴성 강화 검토
- 2018. 8. 송배전 협력사「시공품질 우수기업」선정 평가기준 개선

◉ 개선 내용

- 송배전 협력사「시공품질 우수기업 선정제도」개요
  - 2014년부터 송배전 협력사에 대한 자주적인 품질관리 및 시공품질 경쟁력 확보를 위하여 시공품질이 우수한 협력사를 평가 및 선정하여 사장 명의의 인증서(패)를 수여하고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제도

구 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송변전 우수협력사	8개	9개	13개	8개	10개	10개
배 전 우수협력사	19개	14개	17개	18개	16개	12개

*(한전) 2년간 안전지적 시 최초1회 제재감면 / (전기공사협회) 시공능력평가「신인도」3년간 가점 부여

- 평가부문 : 품질경영관리(50점)+시공품질관리(170점)+기자재관리(80점)
  *(품질경영) 품질문서 관리 적정성 등/(시공품질) 자재관리 적정성 등/(기자재) 기기류 보관 적정성 등
- 「시공품질 우수기업 선정」시 청렴성 평가부문 도입
  - 청렴성이 결여된 송배전 협력사는 우수기업 원천 배제
    - 과거 5년간 부정당업자 제재 및 계약해지 이력 회사는 우수기업 선정 시 제외
  - 협력사 직원의 청렴교육 이수 실적 가점 부여

◉ 개선 효과

- 송배전 협력사에 대한 청렴성 강화를 통한 이해관계자의 청렴문화 정착
- 지속적인 '청렴' e-러닝 교육을 통한 송배전 협력사 직원 청렴의식 내재화

성공 85 | 한국동서발전(주)

협력회사 대상 부패방지경영시스템 구축 지원

국제표준 부패방지경영시스템(ISO 37001)의 협력회사 확산을 통해 청렴의식 제고 및 기업 경쟁력 제고

◉ 추진 배경

- 협력회사와의 동반성장을 통한 청렴 Win-Win Project 시행

◉ 추진 경과

- 2017. 8. 한국동서발전 부패방지경영시스템 인증
- 2018. 2. 협력회사 대상 부패방지경영시스템 인증 지원계획 수립
- 2018.10. 8개 협력회사 부패방지경영시스템 인증

◉ 개선 내용

- 한국동서발전 부패방지경영시스템 운영현황

구 분	추진내용	비 고
도입검토	• 2017년 반부패 청렴 추진계획 반영	
인증·도입	• 부패방지경영시스템 도입(발전회사 최초) - 인증일/인증기관 : 2017. 8.10./KSR 인증원	내부심사원 10명, 인증심사원 13명 보유
사후심사	• 2018년 정기 사후관리심사 완료 : 2018. 7.27 • 2019년 정기 사후관리심사 완료 : 2019. 7.24	매년 사후심사 및 3년마다 갱신심사
대외활용	• 경영평가, 감사평가, 부패방지시책평가 반영 • (언론보도)민간업체 8개 대상 지원 인증 획득	

- 추진내용
  - 동서발전 내부심사원 활용 설명회, 인증에 필요한 자료지원, 상담
  - 부패방지경영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매뉴얼 제정 지원 등
  - 협력업체 소속 내부심사원 양성 교육 및 부패방지경영시스템 인증심사 지원
- 인증기업 우대 제도화
  - (계약업무처리기준) 물품구매적격심사 시 가점 적용 : 0.75점

◉ 개선 효과

- 협력회사 청렴수준 및 의식 제고, 민간확산을 통해 청렴사회 실현에 기여

반부패 청렴 ACADEMY 투어 운영

소속직원, 협력회사, 지역사회, 유관기관 등 직무 및 이해관계자에게 반부패 청렴교육 시행

◉ 추진 배경

- 광역 이해관계자 초청을 통한 반부패 청렴교육 사각지대 해소
- 사회전반에 대한 사회적 책임 이행과 공공성 확보

◉ 추진 경과

- 2017.10. 혁신도시 공공기관 지역사회 청렴투어 프로그램 도입 및 시행
- 2018.10. 2018년도 KEPCO-ENC 청렴 ACADEMY 투어 실시
- 2019. 4. 2019년도 KEPCO-ENC 청렴 ACADEMY 투어 실시

◉ 개선 내용

- 지역사회 이해관계자 초청 청렴투어 프로그램 운영

구 분	투어 시행 전	투어 시행 후
민간부문 청렴 문화 확산	• 청렴문화에 대한 인식부재 • 민간부문 청렴교육 미실시	• 청렴문화 공유(이해도 제고) • 민간부문 청렴교육 활성화
지역사회와 소통의 장 형성	• 이전지역과 이전기관간 문화적 공감대 부족	• 사내 청렴윤리 시설물/청렴 활동 견학 등 청렴문화 소통 공감대 확산
사회적 책임 수행	• 각 사안별 이벤트 중심 시행	• 청렴 투어 프로그램과 연계한 사회적 책임이행으로 시너지 효과

◉ 개선 효과

- 정부/공공기관 반부패 청렴정책에 대한 이해와 이질 간극 해소
- 다양한 그룹을 대상으로 청렴활동을 시행하여 청렴문화 확산에 기여

성공 87 |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청렴콘텐츠 공모전 참여 확대로 청렴문화 확산

청렴콘텐츠 공모전을 내부 직원·가족에서 원주시 초등학생까지 확대하여 내부 구성원의 청렴의식 제고 및 지역사회 청렴문화 확산에 기여

◉ 추진 배경

- 임직원의 반부패 의식 함양 및 지역사회의 청렴문화 확산에 기여

◉ 추진 경과

- 2016. 직원 및 가족과 원주 혁신도시 초등학교 대상 공모전 실시
- 2017. 중·고등학생까지 확대하여 청렴콘텐츠 공모전 실시
- 2018. 원주 혁신도시에서 원주시 내 초등학교 49개소로 확대
- 2019. 강원 대표로 권익위 반부패 주간행사에 청렴콘텐츠 공모전 우수작 전시

◉ 개선 내용

- **청렴 문화 대·내외 확산 및 공유를 위한 청렴콘텐츠 공모전 확대 운영**
  - 공모 기간 : 매년 6월~8월
  - 공모 분야 : 청렴콘텐츠(포스터/카툰/표어/UCC)
  - 공모 대상 확대

내부 직원·가족 혁신도시 초등학교	▶	혁신도시 중·고등학생	▶	원주시 내 초등학교 49개소	▶	권익위 주관 반부패주간행사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 **청렴 콘텐츠 우수작품 시상 및 지역사회 전시로 청렴문화 확산**

• 청렴콘텐츠 공모전 우수작품 시상으로 참여 학생의 자긍심 고취
(국민권익위원장 상장 -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시상)
• 활용 : 청렴교육자료 활용, 언론 보도 및 2019년 권익위 반부패주간 행사에 청렴콘텐츠 공모작 전시

공모전 시상

◉ 개선 효과

- 청렴콘텐츠 공모참여 기회 제공 및 확대로 청렴의식 DNA 정착 유도
- 청렴콘텐츠 입상 작품 수상 및 전시를 통한 지역사회 청렴문화 확산 기여

청렴문화 확산을 위한 「청렴서약실」 운영

고객 접견실, 회의실 등에 청렴표어, 포스터, 자체 홍보콘텐츠 수상작 등을 게시하고 청렴서약실로 활용하여 청렴문화 확산

◉ 추진 배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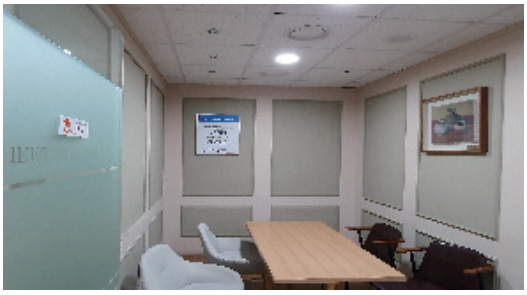
- 직원 및 일반 시민 대상 반부패·청렴정책 자율적 제도개선 아이디어를 공모(2016. 4.)하여 「청렴서약실」 제도 도입

◉ 추진 경과

- 2016. 4. 전 국민 대상 반부패·청렴정책 아이디어 공모 시행(1개월)
- 2016. 6. 반부패·청렴정책 제도개선 우수 아이디어 선정
- 2016.11. 전사 「청렴서약실」 도입

◉ 개선 내용

- **2016년 반부패·청렴제도 개선 아이디어 공모전 수상작 선정**
  - 청렴의무 준수 서약실 운영, 청렴명함 제작 등 8개 아이디어 선정 완료
- **청렴서약실 도입**
  - 전사 외부 고객접견실, 회의실 공간에 청탁금지법 등 청렴자료 게시



◉ 개선 효과

- 고객 접점 현장에 행동강령을 명시하여 내부직원에게는 청렴정책 준수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며 외부고객에게는 청렴문화 확산을 유도

성공 89 | 한국공항공사

직무관련자 청렴식권 제도 운영

직무관련자와의 부득이한 식사 시 구내식당을 이용할 수 있는 청렴식권 제도 운영

◉ 추진 배경

- 직무관련자와 업무수행 중 동행식사 시 식사비 대납 등 부패발생요인 상존
- 부패요인의 사전 분석·발굴을 통한 예방장치를 강구하고 자율적인 부패 통제 유도로 공정한 업무처리에 매진할 수 있는 환경 조성

◉ 추진 경과

- 2010. 4. 제주지역본부 청렴식권제도 도입
- 2010.10. 청렴식권제도 전사 확대 운영

◉ 개선 내용

- **청렴식권제도 도입**
  - 업무와 관련하여 방문한 직무관련자와 업무처리 중 불가피하게 식사가 필요할 때 사용
  - 본·지사 행동강령책임관이 식권 지급 및 관리업무 총괄
- **청렴식권제도 운영 현황**

(명, 천원)

구 분	2017년		2018년		2019년	
	인원	금액	인원	금액	인원	금액
사용실적	520	2,096	473	1,926	615	2,961

◉ 기대 효과

- 직무관련자와 동행식사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부패행위 원천 차단
- 구성원의 청렴 의식강화 및 공사의 청렴 이미지 제고

협력사와의 윤리경영 상생협력 프로그램 운영

특권과 불공정 문화를 근절하고 공정의 사회적 가치를 확대하기 위하여 지역사회 이해관계자인 협력사와의 윤리경영 상생협력프로그램 운영

◉ 추진 배경

- 청렴문화의 사회적 확산
  - 윤리경영 시스템이 부재한 협력사에 윤리경영, 청렴문화 전파
  - 협력사와의 상생협력 프로그램 운영으로 처우개선 및 고객 서비스 환경 향상

◉ 추진 경과

- 2013. 동반성장 및 상생협력 강화를 위한 윤리경영 상생협력 프로그램 운영
- 2020. 상생협력 운영 대상 및 처우 확대(33개사 및 복지 처우개선)

◉ 개선 내용

- **협력사와의 윤리경영, 지속적인 상호 소통 강화**
  - 협력사 클린리더 구성 및 SNS 밴드를 통한 상호 소통
  - 협력사와의 청렴간담회 확대 및 현장 애로사항 발굴, 해소 노력
  - 청렴교육 전문강사 수시지원, 청렴교육 자료공유, 공동캠페인 청렴활동
- **협력사와의 지역 상생 프로그램 확대**
  - 성과공유제 실효성 보완을 통한 실질적 성과보상 제도
  - 복지제도 지원 및 협력사 우수 직원 선발하여 해외연수 인센티브 실시

◉ 개선 효과

- 폐광지역 협력사와의 상생협력 정착 및 청렴문화 전파로 공정문화 확산
- 협력사 근로자의 사기 진작 및 동반자적 인식 강화 효과

성공 91 | 한국승강기안전공단

미래세대 맞춤형 청렴교육

국정기조에 발맞춰 생애주기 전반에 걸쳐 청렴교육이 실시될 수 있도록 지원

◉ 추진 배경

- 미래세대인 유아·초·중·고 및 대학생 대상 청렴교육 실시를 통해 준비된 청렴인으로 성장

◉ 추진 경과

- 2018. 6. 유아 대상 청렴교육 실시(전국 157개 국공립 어린이집 등)
- 2018. 6. 경상남도 교육청과 협업을 통한 청렴노트 제작 배포
- 2018.10. 중고교생 대상 시민단체 협업으로 오리엔티어링형 청렴교육
- 2018.10. 인근 경상대학교 방문 예비사회인 대상 원포인트 청렴교육

◉ 개선 내용

- **개선 체계**
  - 미래세대 청렴교육 추진체계

Plan	Do	Check	Act
• 단계별 대상 확정 • 눈높이에 맞춘 교육 콘텐츠 발굴	• 경남클러스터 및 인근 공공기관 협업 • 안전시민단체 협업	• 교육성과 분석 • 청렴추진단 점검	• 청렴교육의 민간 부분 확대 및 대상 개선

- **개선 내용**
  - 유 아 : 전국 157개의 국공립 어린이집 및 유치원 유아 10,129명 교육
  - 초 등 : 경상남도 소재 72개의 초등학교의 초등학생 4,000여명 교육
  - 중 고 : 총 7차에 걸쳐 1,475명 교육
  - 대학생 : 200여명 교육 1,500건의 교육자료 배포

◉ 개선 효과

- 공직자 대상으로 국한됐던 청렴교육을 민간부분으로 확대
- 세대별 눈높이에 맞춘 청렴교육을 통해 지역사회로부터 혁신적인 사례로 주목

갑질 근절로 상생하기

사회적 이슈인 갑질에 대한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무 등에 대한 자구 노력

◉ 추진 배경

- 5개년 반부패 계획 및 사회적 이슈, 언론보도 등 갑질 근절의 중요성 대두

◉ 추진 경과

- 실태 점검 및 성과

실태점검	활동노력	성과
• (내부) 언론보도 이후 내부갑질 관련 익명 설문조사 • (외부) 외부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공단의 부조리관행 개선 등 설문조사	• 갑질예방을 위한 제도 강화 • 계약업무 수행 시 불공정 거래 사전예방 방안 마련 • 고객불만 관리체계 개선 • 갑질근절 조직문화 구축	• 갑질근절서약서 징구제도 마련 • 계약업무 중점 교육 • 계약업무편람 제작·배포 • 고객불만 처리절차 강화 • 갑질피해 대응체계 마련

◉ 개선 내용

- **개선 체계**
  - 미래세대 청렴교육 추진체계

Plan	Do	Check	Act
• 단계별 대상 확정 • 눈높이 교육콘텐츠 발굴	• 인근 공공기관협업 및 안전시민단체협업	• 교육성과 분석 • 청렴추진단 점검	• 청렴교육의 민간 부분 확대 및 개선

- **개선 내용**
  - 전 직원 대상 갑질근절 아이디어 164건 도출
  - 불공정 사례 예방을 위해 계약실무편람 제작 및 관련 직원 교육
  - 전 임직원 대상 갑질 근절 서약서 징구
  - 고객의 불만이 갑질로 인식될 수 있는 상황에 대한 고객불만 관리체계 강화

◉ 개선 효과

- 사내 조직문화 개선 및 협력업체와 상생
- 공공기관 부패근절 사회적 책무 성실 이행

공기업 청렴경영 성공 · 실패 사례집

Case of Failure

제2장 — 실패사례

견제장치 미흡

공공임대주택 임차권 양도 불법 승인

공공임대주택 임차권 양도승인 권한이 한 명의 담당자에게 집중되어 있어 브로커로부터 금품을 받은 담당자가 불법으로 양도승인

◉ 제도 개요

- 관련법상 임대주택은 임차권 양도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며, 근무·생업 또는 질병치료 등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허용
  - (민간임대) 민법 제629조에 의거 양도·전대 불가하며 위반 시 계약해지 가능
  - (공공임대) 공공주택특별법 제49조의4에 의거 양도·전대 불가하며 동법 시행령 제48조에 의거 일부 사유에 한해서 예외적 허용

① 사전안내 ▶ ② 신청접수/시스템입력 ▶ ③ 1차 자격 검증 및 결과통보 ▶ ④ 2차 자격 검증 및 결과통보 ▶ ⑤ 승계 계약체결

◉ 실패 내용

- **임차권 양도 승인 제도상 문제점 상존**
  - (업무처리기준) 일반적·포괄적 원칙만 제시하고 있어 각 본부별로 세부 처리절차가 상이하게 운영하는 등 업무혼선 발생
  - (전산화) 임차권 양도 업무 전산시스템 미비로 현지실사 등 일부 업무의 투명성 결여 및 관련 정보 축적·관리·활용 미흡
  - (사후통제) 최근 5년간 양도승인 건수가 1,761건에 달하고 악용사례 유형도 다양화되고 있으나 양도승인 업무에 대한 사후통제 미흡
- **일부 임차인과 중개사들이 예외조항 악용하여 임차권 양도사례 발생**
  - 불법알선, 청약통장 매매 및 서류 위조 등 불법행위 성행
  - 2017. 5. 수사 결과 브로커, 양도인 등 91명 기소

◉ 개선 사항

- 업무처리 전 과정 전자결재 및 실태조사 정형화(업무담당자 이원화 등)
- 본사 차원에서 정기(반기 1회) 무작위 샘플조사 실시 등 사후통제 강화

단기계약근로자 근태 허위기록 및 임금 과다지급

수기 출근부에 의존한 근태관리로 인한 출근 일수 허위기록 및 임금 과다지급

◉ 제도 개요

- 현장직 단기계약근로자의 근태관리를 수기 출근부로 관리
  - 오지에 근무하고 있는 현장직 단기계약근로자는 출근부 수기 서명으로 근태를 관리하고 해당 출근 일수에 근거하여 급여 지급
  - 수기 출근부의 경우 근태관리담당자와 근로자가 유착할 경우 조작이 용이하여 부패 가능성 상존

◉ 실패 내용

- **수기 출근부로 단기계약근로자 근태관리 시행**
  - 송변전사업소 작업현장이 전국에 산재하여 단기계약근로자 관리 감독이 곤란하고 2017년 10월까지 출근부 자필서명을 급여 증빙자료로 사용
- **출근부 허위기록으로 임금 과다지급 발생**
  - 오지에 근무하는 현장직 단기계약근로자의 경우 저임금으로 인해 채용이 어렵다는 이유로 단기계약근로자의 출근부에 허위로 서명하는 등 출근 일수를 임의 조정하여 임금 과다지급
- **지문인식 근태관리시스템 도입**
  - 2017년 10월부터 지문인식 근태관리시스템을 도입·활용하였으나 지문 인식기의 경우 사무실 비치용으로 원거리 현장 상주 감시, 지문인식이 원활하지 않을 경우에는 적용 곤란 (사용률 57.6%에 불과)

◉ 개선 사항

- 지문인식 및 타임스탬프 시각 연동 카메라 App을 병행 활용한 근태관리
  - 현장 출·퇴근시 지문인식 시스템 활용이 어려울 경우 타임스탬프 카메라 앱 사진 촬영으로 대체하여 근태관리 시행(사용률 99.9% 상승)
  - 현장 상주 직원의 현재위치와 시간이 기록된 사진대장 정기점검(연2회)
- 근태관리 시스템화로 근무일수 임의조정 등 부패유발요인 사전차단

거래처에 회사 공인인증서 무단 유출

폐기물의 적정 배출 및 처리를 감시하기 위해 운영되는 올바로시스템(Allbaro SYS)에서 공인인증서 유출을 통한 허위 폐기물 처리 실적 작성 사례 발생

◉ 제도 개요

- 건설폐기물처리 올바로시스템 개요
  - (올바로시스템)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폐기물의 배출에서 수집·운반·최종처리까지의 전 과정을 관리하는 폐기물종합관리시스템
  - 올바로시스템 사용을 위한 인증서 발급 및 폐기물 처리량의 인수·인계 등과 관련된 시스템 전반의 운영·관리 업무를 수행 중

◉ 실패 내용

- **건설폐기물의 배출자·운반자·처리자의 상호 담합 방지 소홀**
  - 계량시설 측정값을 허위로 올바로시스템에 입력하는 등 임의조작 가능
- **실제 부적정 운영사례 발생**
  - 정부 조사 결과 2012년 1월부터 2015년까지의 기간 동안 다수의 공공기관이 건설폐기물을 처리하면서 약 9만 7천 건의 건설폐기물 처리 건이 유출된 공인인증서를 통해 처리
  - 건설폐기물 담당 공무원·공공기관 담당자가 직접 올바로시스템을 확인해 배출량을 입력해야 하나, 기관의 공인인증서를 폐기물업체에 넘겨주고 배출량 및 처리량을 폐기물처리업체가 대신 입력하는 사례 적발
  - 배출량 및 처리량의 입력을 담당자가 아닌 업체에 맡김으로써 해당기간 동안 폐기물 처리비용이 과다 지급되었을 가능성

◉ 개선 사항

- 2016년부터 공인인증서 불법 유출 방지를 위한 전자인계서 실명제 도입
  ※ 공인인증서 발급대상 구체화(기관명 ▶ 기관명+담당자 실명)
- 폐기물처리업체의 처리정보 임의조작 차단을 위한 올바로시스템 개선
- 전자인계서 대리 입력 방지를 위한 배출자·처리자 동일IP 인계서 입력차단

응급실 응급관리료 임의 취소 및 횡령 발생

응급실 야간 수납담당자가 환자로부터 받은 응급관리료를 임의로 취소한 후에 환불금을 횡령하는 사건이 발생함에 따라 수납금 횡령 부패 통제 프로그램 개발

◉ 제도 개요

- 응급의료관리료 : 응급실에서 응급환자 또는 내원한 환자에게 응급처치 및 응급진료를 행한 경우 응급의료관리료를 초일에 한하여 산정하는 비용으로 응급증상이 아닌 경우 전액 환자가 부담하는 진료비

◉ 실패 내용

- **야간 응급실 환자 내원 시 응급환자 여부에 따라 응급관리료 발생**
  - 응급환자 여부 및 응급관리료 부과 취소 여부를 수납담당자가 결정
  - 야간, 휴일 등 관리감독자가 없는 경우 응급관리료 횡령 가능성 상존
- **야간수납 담당자가 응급의료관리료를 조작한 수납금액 횡령사고 발생**
  - 응급실 수납담당자가 환자 귀가 후 최초 부과했던 응급관리료를 임의 취소하고 환불금을 발생시켜 500만원 상당의 금전 횡령

◉ 개선 사항

- 수납금 횡령 부패 통제 프로그램 개발
  - 응급관리료 판정 권한을 수납담당자가 아닌 의료진이 결정하는 프로그램 도입으로 수납담당자의 응급관리료 수납 부정 사전차단

구 분	환자	의사/간호사	수납자	비고
개선 전	① 응급실 내원	② 진료처방	③ 응급관리료 가감 여부 직접 판정 ④ 진료비 수납	• 수납자가 응급관리료 대상 여부 권한을 악용 • 진료비를 가감하여 환불금 횡령 가능 구조
개선 후	① 응급실 내원	② 진료처방 ③ 응급환자 판정 기능 프로그램	④ 의사 판정에 따른 응급관리료 부과 ⑤ 진료비 수납	• 수납자의 응급환자 판정 권한을 의사로 이관 분리 • 수납자 임의적 수납금액 조정 권한 통제

- IT시스템 개선을 통한 부패사각지대 및 부패 개연성 사전차단

사내 사회공헌활동 기금 횡령

기금집행 모니터링 부재 및 관리자 점검 미흡으로 인해 사회공헌활동 기금 횡령

◉ 제도 개요

- 매월 직원들의 급여공제(자율 신청)로 조성된 기금 활용 각종 사회공헌활동 실시
  - 기금조성
    - (해피펀드) 임직원의 가입 계좌수에 따라 급여에서 공제(1계좌당 1,000원)
    - (우수리) 임직원 급여 중 1,000원 미만의 금액을 자발적으로 공제
  - 기금활용 : 복지시설 후원 및 취약계층 교육비 지원 등 사용

◉ 실패 내용

- **사회공헌기금 관리체계 미흡**
  - 기금관리담당자와 결산담당자가 동일하게 지정되는 등 기금 관리체계 허술
  - 관리체계 미흡 및 점검 소홀로 인한 사회공헌 목적 외 기금사용 사례* 발생

    * 직원 사망 상조 위로금 지급 등 목적 외 사용
- **사회공헌기금 관련 담당자 부패(횡령) 발생**
  - 일부기관 담당자 개인통장을 통한 사회공헌기금 관리로 횡령 가능성 상존
  - 전 기관 전수조사 결과 3개 기관에서 기금관리 담당자가 기금을 무단인출하여 사적으로 사용하는 사례 발생

◉ 개선 사항

- 기금의 사용 목적, 지원대상 및 방법을 구체화하여 담당자 재량권 축소
- 기금의 관리 및 집행에 관한 사항을 명문화하여 지출사고 예방
- 기금운영 공개조항 신설 및 기금점검 강화를 통한 기금관리 투명성 제고

소액물품 구매제도 악용 허위 물품 구매 및 횡령

소액물품 사용부서 직접 구매제도 악용, 구매계획 대비 저가 물품구입 후 차액 횡령

◉ 제도 개요

- 건당 1,00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소액물품의 경우 계약부서를 경유하지 않고 사용부서에서 자체구매 가능
- 사용부서 구매에 대한 세부 업무처리기준이 없고, 사용부서장도 서류상으로만 물품을 확인·결재하는 등 관리 허술
- 공공기관의 납품비리는 주로 검사과정에서 발생하며, 특히 검사에 전문지식이 필요한 기술물품의 납품비리는 안전문제로까지 직결

◉ 실패 내용

- **구매계획 수립 ▶ 물품구매 ▶ 검사 · 검수 ▶ 대금지급 요청 등 물품취득의 모든 단계를 발주부서 1인 또는 2인에 의해 진행됨에 따라 허위 물품구매 및 횡령 발생**
  - 물품운용장(발주부서 팀장) 자체 취득에 대한 업무처리 세부기준 없음
- **구매계획 수립부터 검수까지 구매 全단계를 1~2인이 전담하는 점을 악용, 계획상의 물품과 상이한(저가) 물품 구입 후, 그 차액을 담당자가 부당 편취**
- **소요 예측가능 물품을 계약부서에 의뢰하지 않고 물품운용장 자체 취득방법으로 반복 구매**

◉ 개선 사항

- 발주/계약/검사·검수의 철저한 직무분리를 통한 상호견제 및 내부통제 강화
- 고가(1천만원 이상) 물품·장비 구매 시 복수 검사자 지정
- 취득물품 검사, 검수 절차 강화
  - 물품 구매(사용)자와 검사자·검수자 분리 지정
  - 100만원 이상 물품구매 시 물품 운용장 직접 입회 또는 입회자 지정
- 물품구매에 대한 내부통제 강화로 부패유발요인 선제적 제거 및 예산누수 방지

정보시스템 관리자에 의한 데이터 위변조

중요 데이터베이스 접근 권한 통제관리 소홀로 전자문서 위·변조 사례 발생

◉ 제도 개요

- 정보시스템의 개발, 도입 및 운영 등 정보화 추진에 필요한 기본사항을 규정화하여 정보시스템 관리부서에 운영·관리 권한을 부여
  - 정보시스템 예방점검 및 정비, 보안 및 안전관리, 자료의 백업 및 보호 등

◉ 실패 내용

- **정보시스템 관리부서 직원이 데이터베이스 접근이 용이한 점을 이용하여 본인의 사익을 위해 정보데이터를 위·변조한 사례 발생**
  - 정보시스템의 효율적인 통제·관리, 사고 발생 시 추적을 위해 데이터 접근 기록은 유지·관리되고 있으나, 데이터 수정 내역은 미 유지
  - 권한을 부여하는 기준과 절차, 부여된 권한에 대한 적절한 통제장치가 미흡하여 인사발령 등에 따른 권한 관리 등이 소홀
  - 또한, 중요 DB에 접근 시 정보시스템부의 부서장 등에게 경보(Alarm) 기능이 없어 중요 데이터 접근, 변경에 대한 통제장치 필요

◉ 개선 사항

-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규정 개정
  - 정보시스템 권한 부여에 대한 기준 및 절차 명시, 담당자 책임 명확화
  - 정기적인 정보시스템 권한 부여에 대한 타당성 점검
- 정보관리 시스템 개선
  - 중요 DB데이터 접근 시 관리자에게 경보 송출
  - 중요 데이터 변경 시 관리자 결재 시스템 도입 및 수정내용 기록 유지
    - 중요 데이터 수정 및 삭제 시 Back-Up 자료에도 내용 기록
  - 데이터 마감제도 도입
    - 과거의 데이터(마감된 데이터) 수정 시 관리자의 승인 必

익명성이 철저히 보장된 상담, 신고 채널 부재

기관 자체의 청렴수준 제고를 위한 익명성이 철저히 보장된 자체 상담·신고 채널 운영

◉ 제도 개요

- 공단 상담·신고채널 운영현황

구분	채 널	기 능	설치장소	사용자	담당자
상담	성희롱·성폭력 / 괴롭힘	성희롱·성폭력/괴롭힘 상담·신고 통합	인트라넷	직원	운영지원처
	행동강령-청탁금지법 상담	행동강령-청탁금지법 상담			감사처
	클린서포터즈 상담	외부위원(청렴옴부즈만) 상담			외부위원
신고	성희롱·성폭력 / 괴롭힘	성희롱·성폭력/괴롭힘 상담·신고 통합	인트라넷		운영지원처
	행동강령-청탁금지법 신고	행동강령-청탁금지법 위반 신고	인트라넷 홈페이지		감사처
	유리알에게(익명)	비위행위, 부당업무지시, 고충 등 신고			
	내부공익신고	임직원 부패행위 등 신고			
	클린서포터즈 신고	임직원 부패행위 등 외부위원에게 신고			외부위원
	사이버감사실	임직원 부조리, 청탁금지법 등 신고	홈페이지	국민	감사처

◉ 실패 내용

- **2019년 권익위 청렴도평가 결과, 내부청렴도가 전년 대비 하락(1등급▶2등급)**
  - 부패방지제도(부패행위·공익신고자 보호 실효성 등) 분야 점수가 낮게 나타남
- **현행 다양한 내부 상담·신고채널(익명 신고 포함)에 대한 직원 신뢰도 저하**
  - 청렴 상담·신고를 통한 조직문화 저해요인 발굴 및 개선에 어려움 발생

◉ 개선 사항

- **자체 상담·신고채널 등 개선을 통한 상담·신고 및 내부소통 활성화**
  - 외부 전문 플랫폼 채널을 활용한 익명 채널과 내부 기명 채널로 구분
  - 익명 게시판 신설 운영 및 홈페이지, QR코드 스캔 접속으로 이용

공기업 청렴사회협의회

자녀돌봄휴가 사용기준 미준수

규정을 위반하여 자녀돌봄휴가를 사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관련 규정 개정

◉ 제도 개요

- 회사 「취업규칙」 제34조(특별휴가) 제5호에 따라 유치원부터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자녀를 가진 직원은 1인당 연 2일의 돌봄휴가 사용 가능
-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은 영유아보육법에 의거하여 어린이집과 자녀 병원진료등과 같이 광범위하게 돌봄휴가를 부여하고 있는 반면 우리회사는 돌봄휴가를 국가공무원과 비교하여 소극적으로 운영

◉ 실패 내용

- **규정을 위반하여 허용되지 않는 기관의 증빙으로 자녀돌봄휴가 사용**
  - 어린이집, 영어유치원등 적용범위에 속하지 않은 기관에 재학 중인 자녀를 둔 직원들이 해당 기관의 증빙으로 자녀돌봄휴가를 사용
- **규정에 대한 구체적이고 명확한 안내 부족**
  - 대부분의 직원이 영업장에서 3교대 근무를 하여 규정에 대해 이해도가 현저히 낮은 상황에서 충분한 안내 없이 해당 휴가 사용

◉ 개선 사항

- 규정을 위반하여 사용된 휴가는 직원의 개인 연차로 변경
-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에 근거하여 자녀돌봄휴가 기준 개정

개정 전	개정 후
• 제34조(특별휴가) (생략) 1. ~ 4. (생략) 5. 자녀(유치원~고등학교 재학에 한함) 돌봄휴가 직원 1인당 연 2일	• 제34조(특별휴가) (생략) 1. ~ 4. (생략) 5.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0조 제13항에 의거 어린이집~고등학교까지 자녀 돌봄 휴가 직원 1인당 연 2일. 단, 자녀가 3인 이상일 경우 연 3일을 부여

검수업무 소홀로 인한 소모성 자재 허위 구매

수리 및 점검등의 수선비 집행은 검수절차 없이 작업완료 확인서로 회계처리하고 있어 검수 담당자에게 납품여부를 확인할 수 없어 해당 제도 개선

◉ 제도 개요

- 회사 「계약 및 검사검수규정」(이하 규정이라 함) 제28조에 따라 계약목적물이 손상 또는 훼손품이 없고 납품 서류상의 수량대로 납품되었는지 검수자가 확인하여야함
- 또한 규정 제29조에 따라 용역 중 완료보고서등 과업 완료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 자료로 제출이 가능한 경우에는 기본품의서 전결규정에 따른 결과보고로 검사 혹은 검수를 대체할 수 있음

◉ 실패 내용

- **수리 및 점검 등 수선비 집행에 대한 검수 절차 미비**
  - 수리 및 점검 등의 수선비 집행은 검수절차 없이 작업완료 확인서로 회계처리하고 있어 검수 담당자에게 납품여부를 확인할 수 없음
- **실제 관련 부패발생**
  - 회사 카지노 머신 관련 허위 구매 부정행위 발생
  - 부패행위자 중징계(면직)

◉ 개선 사항

- 검사·검수와 관련된 규정 개정

개정 전	개정 후
제27조(검수의뢰) 구매의뢰자는 계약상대자가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완료한 때에는 검사 후 검사 관계 증빙서류와 [별지 4]를 첨부하여 검수자에게 검수의뢰 하여야 한다.	제27조(검수의뢰) 구매의뢰자는 계약상대자가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완료한 때에는 검사 후 검사 관계 증빙서류와 검사·검수조서(물품)[별지 제6호 서식] 또는 작업완료확인서(용역)[별지 제7호 서식]을 첨부하여 검수자에게 검수의뢰 하여야 한다. 다만, 작업완료확인서의 작성이 불가한 용역의 경우는 결과보고서로 대체할 수 있다.

공기업 청렴경영 성공 · 실패 사례집

Case of Failure

제2장 — 실패사례

모니터링 부실

안전관리비 증빙 확인절차 미흡

안전관리비 지급 시 계약상대자의 세금계산서 진위여부 확인절차 부재로 안전관리비가 부당하게 청구되어 지급

◉ 제도 개요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지급
  - 근거 :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건설공사 등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등)
  - 목적 : 안전시설비, 안전용품 구입 등 작업현장에서 발생 가능한 재해 예방 및 근로자의 건강 증진을 위해 공사비 계상
  - 절차 : 공사 담당 직원이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안전관리비 증빙서류 검토 및 적정성 확인 후 대금 지급

◉ 실패 내용

- **안전관리비 증빙 검증 확인 미흡**
  - 계약상대자가 안전관리비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행 후 취소처리 또는 금액 변경에 의한 수정 발급 후 통보하지 않은 경우 검증 곤란
  - 세금계산서 정상 발급 후 취소처리 등 부당청구에 대한 검증 절차 부재
- **안전관리비 부당처리에 대한 리스크 발생**
  - 세금계산서 검증 미비에 따른 대금 과다청구로 인한 부당수령 위험
  - 복수 사업장에 대해 동일한 증빙으로 안전관리비 중복 수령 위험

◉ 개선 사항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집행 시 증빙 확인 절차 강화
  - 전자세금계산서 및 카드영수증만 증빙으로 인정하며, 국세청(홈택스) 제3자 발급사실 조회 결과를 활용한 진위여부 검토 강화
- 부당수령 방지를 위한 절차 강화 및 청렴서약서 징구
  - 구매물품 검수절차 및 세금계산서 표기 등 중복신청 방지를 위한 절차를 강화하고, 계약상대자 대상 청렴서약서 징구를 통한 부정사용에 대한 경각심 제고

승진시험 자격 서류 위변조

승진시험 부적격자가 문서를 위변조하여 승진시험에 응시하는 등 규정 위반

◉ 제도 개요

- 승진시험 응시자격은 공사에서 요구하는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인증등급 획득을 해당 요건으로 규정
- 승진시험에 응시하려는 자는 同 자격을 취득한 후에 승진 예고 시 정해진 기간 내 증빙서류를 제출
  ① 승진예고 ▶ ② 접수 ▶ ③ 현황 제출(응시 자격 서류 제출) ▶ ④ 시험·면접

◉ 실패 내용

- **응시자가 그림파일 편집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한국사 인증서를 위조하여 승진시험 증빙서류로 제출하고, 승진시험에 몇 차례 응시한 사례 발생**
  - 승진업무 주관부서는 승진시험 증빙서류를 사전에 검증하여 시험응시 권한을 부여하여야 하나, 최종 합격자에 한해 제출된 증빙서류의 진위 여부를 확인함에 따라 간부시험 응시 부적격자도 시험에 응시하는 사례가 발생
  - 시험을 통해 승진의 최종 목적에는 도달하지 못하였으나 문서 위조를 통해 시험에 응시한 행위는 형법상 공문서 위조 및 동 행사죄에 해당하며 결과적으로 승진 시험제도의 신뢰성을 심각히 저해

  ※ 「성적서」의 등급 및 점수를 변경하거나, 「인증서」의 합격등급 및 응시 회차 등을 변경하는 것은 공문서 위조에 해당

◉ 개선 사항

- 승진시험 응시자 전원을 대상으로 증빙서류 진위 여부를 확인하도록 절차를 개선하여 부패행위 사전 억제
  - 검증시기를 최종 합격자가 제출한 인증서 등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시험승진 응시단계로 조정하여 신뢰성 제고

단시간 근로 무기계약직 채용기준 부재

단시간 근로 무기계약직 채용 시 서류심사기준이 구체적이지 않고 면접심사 관련 서류 보관을 소홀히 하는 등 전반적인 채용 투명성 저조

◉ 제도 개요

- 단시간 비정규직 채용 시 사업장별 채용에 따른 심사기준 상이
- 지원신청 후 대기시간 차이 등 형평성 문제 소지 존재

◉ 실패 내용

- **농림축산식품부 주관 공공기관 인사채용 전수조사 및 처분**
  - 채용심사 기준 미흡, 퇴직직원 특혜조항 운영 등에 따른 개선 권고

◉ 개선 사항

- 서류 및 면접심사 과정에서 주관 및 재량 개입여지가 존재하여 심사기준의 체계화로 채용과정의 객관성·공정성 확보

구 분	개선 전	개선 후
채용방식	필요부서 개별채용	본부별 통합채용
심사방식	임의적 심사기준 활용	정형화된 심사기준 활용
심사기준	-	• (서류심사) 자기소개, 지원동기, 특기사항 • (면접심사) 품행, 기본자질 및 지원동기 적극성, 적격성, 의사소통 및 문제해결능력

업무 세부기준 부재로 위험수당 부당 수령

위험수당 등을 지급하면서 업무의 상시성·위험성 등을 제대로 검토할 근거와 시스템을 마련하지 않아 부적절한 수당 수급자 발생

◉ 제도 개요

- 한국환경공단은 「보수규정세칙」에 따라 "위험업무"와 "중장비 및 차량 운전·정비업무"에 종사하는 직원들에게 위험수당과 특수업무수당 지급

◉ 실패 내용

- **위험수당 등의 지급을 위한 세부기준 및 확인 절차가 부실하여 부당청구 개연성 상존**
  - 위험수당 수급자 해당 여부 확인 및 지속 관리할 수 있는 전산시스템 부재
- **실제 위험수당 및 특수업무수당의 부적절한 수급 사례 적발**
  - 위험수당 지급대상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에 있다는 이유로 월간 한 번도 출장을 가지 않았거나 2일/월 이하로 출장을 가고 사무실 등에서 사무처리 업무 등을 주로 수행하여 상시적으로 위험업무를 수행하지 않았음에도 위험수당을 부당하게 수령
  - 또한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연평균 37명의 직원이 중장비 및 차량운전 업무를 수행하지 않으면서 총 117백만원의 특수업무수당 수령

◉ 개선 사항

- 위험수당 지급을 위한 상시적·직접적 종사자 인정기준 규정화
  - '위험수당 지급 조견표'에 따라 평가하여 점수 부여 및 차등 지급
- 위험수당 관리를 위한 전산화로 수당지급 해당 여부 확인 절차개선
  - 각 부서에서 기초자료(출장일수, 업무분장, 직접수행 여부 등) 전산 입력하여 지속 관리

해외출자회사 비용집행 규정 및 관리 미흡

해외출자회사의 경우 대관업무 비용을 현금으로 지급하고, 기타 비용 지급 시에도 증빙 관리가 미흡하여 금전사고 발생 우려

◉ 제도 개요

- 해외 현지 출자회사의 경우, 국내와는 달리 재무관리에 자율성 부여 중
- 비용 집행 관련 비용 항목별 금액, 시간, 장소, 목적 등에 대한 세부 규정 및 지침 운영
- 부정위험 경감을 위한 승인체계 구축 등 내부승인 절차 운영

◉ 실패 내용

- 현지 인허가 업무 등 대관업무 수행 시 해당 비용을 현금 지급(사고 발생 우려)
- 해외출자회사 근무 직원에게 출장비, 회의비 및 업무추진비 지급 시 영수증 또는 수령확인 서류 등 적정 증빙서류 수취 없이 지급
- 일반비용 집행 시 과거에는 법인장의 최종 승인을 받고 해당 비용을 집행 하였으나 현재는 재무부장의 승인만을 받고 비용 집행 중

◉ 개선 사항

- 일반비용 집행 시 결재권자를 재무부장에서 법인장으로 상향
- 비용집행 내부통제 강화를 위한 세부규정 마련
- 해외출자회사 자금 집행 시 증빙관련 규정 마련 및 증빙수취 강화
- 현금 지급 시 현금집행대장 운영 및 세부내역 증빙자료 보관 철저

휴면계좌 모니터링 시스템 부재에 따른 예치잔액 미회수

조직·부서 통폐합 등의 이유로 부서 신규계좌 개설 시 기존 부서계좌의 폐기절차 수행으로 예치잔액 회사에 귀속

◉ 제도 개요

- 「부서계좌 관리지침」 제4조(계좌 신규개설 및 해지) 제2항 및 제3항에 따르면 부서 폐지, 계좌의 사용 목적 소멸 등의 사유 발생 시에는 집행부서장의 승인을 얻은 후, 사용 중인 부서계좌를 즉시 해지하여야 하며, 집행부서장은 부서계좌 신규개설 또는 해지, 변경 시 이를 즉시 출납담당부서로 통보하여야 함

◉ 실패 내용

- **프로세스 취약점**
  - 부서가 신규로 만들어지거나 명칭이 변경되었을 때 신규계좌를 개설할 뿐 기존 부서계좌의 폐기절차를 수행하지 않음
  - 또한 시스템 또는 업무 프로세스에 의해 검토가 되지 않음
- **결 과**
  - 본사 및 전 본부 법인명의 개설계좌 292개 중 조직·부서 통폐합 등의 사유로 76개의 휴면계좌에서 2,484천원의 예치잔액을 회사에 귀속시키지 않음
- **시사점**
  - 휴면계좌 방치 시 계좌를 이용한 횡령 및 유용 등 금전사고 유발의 잠재적 원인 제공 우려
  - 잡이익 처리 등 회계처리 누락으로 회계 투명성 저해 가능성 상존

◉ 개선 사항

- 휴면계좌 일괄 해지 처리 및 예치 잔액 회계처리
- 조직개편 및 인사이동 시 부서계좌 관리 및 인계인수 철저

발명 기여율 임의 기재로 보상금 부당 수령

실제 발명에 기여하지 않은 자가 명확한 근거없이 임의로 발명 기여율을 산정하여 보상금 수령

◉ 제도 개요

- 직무발명시 회사 명의로 특허출원을 하고 발명자에게 보상금 지급
- 특정 발명에 대해 발명자가 2인 이상일 경우 발명자별 기여내용을 기재하고 기여율에 따라 보상금 지급

◉ 실패 내용

- **발명자가 2인 이상일 경우 각 발명자별 기여한 부분을 상세히 기재하고 기여율을 작성하여 담당 부서장의 확인을 받는 프로세스**
  - 연구자의 지시로 단순히 데이터를 정리하거나 지시한 실험을 수행한 사람, 연구에 대하여 일상적 관리를 한 사람 등은 발명자에 해당되지않는다고 명시
- **발명에 기여하지 않은 상급자가 명확한 근거 없이 임의로 기여율을 기재하여 보상금 부당수령**
- **기여율 산정 시 주관적 판단이 개입될 여지가 큼**

◉ 개선 사항

- 각 발명자가 본인의 기여내용을 직접 기입하고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발명신고서 개선
- 허위 공동 발명자 출원 및 타인 발명 기여자의 지분을 소급 소멸규정 마련
- 발명 기여 상세내역 및 윤리서약서 등 공동발명자 기여내역 상세 기재 강조

인터넷상에서의 법인카드 부정사용 사례 발생

법인카드 온라인 결제상의 부정사용 방지 대처 미흡

◉ 제도 개요

- 법인카드 온라인 결제 제도
  - 기존 법인카드는 오프라인 뿐 아니라 온라인에서도 결제 가능
    - 외부기관 교육비, 등록비 등 ISP를 통한 온라인 결제 진행
    - 회사 필요 물품 구매 시 인터넷 쇼핑몰 등 이용 가능

◉ 실패 내용

- **법인카드 온라인 사용시의 구매물품 확인 한계 존재**
  - 법인카드 오프라인 사용시는 결제 허용업종을 한정하고 회계시스템상에서 정확한 구매처명이 확인됨으로써 부정한 물품구입에 대한 예방적 조치 가능
  - 법인카드 온라인 사용시는 온라인 종합쇼핑몰 등에서 법인카드 사용 후 사내 회계시스템을 통해 확인시 구매처명이 아닌 전자상거래 결제 대행사명* 으로 확인되는 경우가 존재

    * 전자상거래 결제대행사 : KCP, 이니시스 등
  - 정확한 구매처명 확인이 안될 시 어떤 물품을 구매하였는지에 대한 정보 부족으로 법인카드 온라인 부정 사용에 대한 관리/대처 어려움 존재

◉ 개선 사항

- 온라인 결제 필요시에는 개인카드 사용 후 정산방법 이용 또는 법인카드 주관부서와 협의 후 조치, 법인카드 온라인 결제 금지

가족수당 지급 확인절차 미흡

지급대상이 아닌 주민등록상 세대를 같이 하지 않는 직원이 가족수당 신청 시 담당 직원이 증빙서류를 확인하지 않고 가족수당을 지급하는 사례 발생

◉ 제도 개요

- 가족수당 지급규정 제2조(지급범위)
  - 직원이 장남 또는 장녀가 아닌 경우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 하는 본인의 직계존속 및 배우자의 부모(남자는 만 60세 이상, 여자는 만 55세 이상)에 한하여 가족수당을 지급
  - 비동거 부양가족에 대한 가족수당을 신청하는 직원은 동거여부를 증빙하기 위하여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표를 제출

◉ 실패 내용

- **가족수당 지급 부적정 사례**
  - 비동거 부양가족에 대한 가족수당을 신청하는 직원이 증빙자료 미제출
  - 가족수당 지급관리 담당 직원은 가족수당 신청 건에 대해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표를 요구하여 확인한 후 비동거 부양가족에 대한 가족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나 일부 부적정한 지급사례 발생

◉ 개선 사항

- 비동거 가족수당 신청직원에 대한 증빙서류 확인 철저
- 가족수당 지급 담당 직원에 대한 교육 철저

터널 특수 공법 관리 부재로 공사비 부당 지급

공사 중 임의 공법 변경을 통한 공사비 과다 수령 등의 부패 예방을 위한 「터널특수굴착공법 시공관리 절차서」 제정

◉ 제도 개요

- 터널굴착공사 특성상 계획과 달리 시공한 후 차액을 정산하는 경우 다수 발생
- 설계관리 업무담당자가 업체와 유착하거나 현장 확인이 소홀할 경우 설계변경에 따른 공사대금 차액 조작 가능성 상존

◉ 실패 내용

- **터널굴착공사 시공 중 현장 모니터링 관련 규정 미비**
  - 당초 설계보다 고가의 공법으로 변경하였으나 공사 중 변경된 설계의 적법·타당성에 대한 비용 재측정 관련규정 미비
  - 담당 공사관리관의 터널 시공 현장 모니터링 미흡
- **부당한 설계변경으로 시공사 등에 불법·부당한 이익이 제공되는 결과 초래**
  - 공사관리관, 시공사 및 설계사 관계자가 공모하여 저가의 공법으로 굴착이 기 완료된 구간에 대해 고가의 공법으로 설계변경 시행
  - 시공사에서 설계변경 구간에 대한 허위 서류 제출 및 기성금 청구
  - 시공사로 하여금 공사대금 차액을 부당하게 취득하게 함

◉ 개선 사항

- 「터널특수굴착공법 시공관리 절차서」 제정(2017. 1.)
  - 시공시점에 지장물 현황을 재조사하여 설계 당시 지장물 현황과 비교 검토
    - 시공 전에 터널특수굴착공법 공사비와 지장물 보상비를 비교 검토하여 고가의 특수공법 적용 최소화
  - 터널 시공관리 및 증빙서류 관리 강화로 부당수령 방지
    - 터널 굴착 시 주기적 현장 실측 의무화
    - 공사비 지급을 위한 기성검사 시 증빙서류 첨부 의무화
    - 공사 착수부터 완료 시까지 담당 부서장, 공사관리관 및 기술지원 감리의 정기·수시점검 실시 규정화

공기업 청렴경영 성공 · 실패 사례집

Case of Failure

제2장 — 실패사례

제도 부작용 발생

기관 자체 청렴도 내부평가 경쟁 과열

기관 자체의 청렴수준 측정 및 향상을 위해 시행하던 자체 청렴도 설문조사의 부작용이 발생됨에 따라 자체 설문조사 시행 폐지

◉ 제도 개요

- 기관 자체의 청렴수준 측정을 통해 부패취약분야를 도출하고 회사 전체의 청렴수준 향상을 위해 자체 청렴도 설문조사를 상·하반기 시행하여 회사 내부경영평가에 반영하는 제도를 2002년부터 운영하였음
  - 평가 시기 : 매년 6월, 12월
  - 평가 방법 : 회사 업무 관련 경험고객을 대상으로 자체 설문조사 시행
  - 결과 활용 : 내부경영평가에 반영

◉ 실패 내용

- **청렴도 내부경영평가 고득점 획득을 위한 사업소 간 과열 경쟁 발생**
  - 청렴활동을 위한 잦은 출장 등으로 내부 직원들의 불만 발생
  - 청렴도 조사대상 과다(약 23만 명)에 따라 고객관리 업무 과중
- **청렴도 평가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대내외 부작용 발생**
  - 청렴도 평가를 빌미로 업무처리의 공정성 등을 저해하는 악성 고객 발생
  - 일부 사업소에서 고득점 획득을 위한 신뢰도 저해 행위 발생 등
- **기관 자체 청렴도와 권익위「공공기관 청렴도 측정」간 상반되는 결과 초래**
  - 자체 청렴도는 계속 상승되는 반면, 권익위 청렴도는 지속적 하락

구 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5년간 증감 (2012년▶2016년)
자체 청렴도(점)	9.82	9.86	9.79	9.85	9.87	0.05↑
권익위 외부청렴도(점)	9.33	8.98	8.42	8.13	7.86	1.47↓

◉ 개선 사항

- 2017년부터 자체 설문조사 폐지 및 권익위 평가와 연계한 내부평가 반영
- 평가지표 개선(9.8점대▶8.5점대로 목표점수 조정)을 통한 기본업무 충실 환경 조성

건설현장 식당 선정 시 발주처 이권 개입

건설현장 식당업체 선정과정 중 발주처 임직원이 업체로부터 금품수수 사례 발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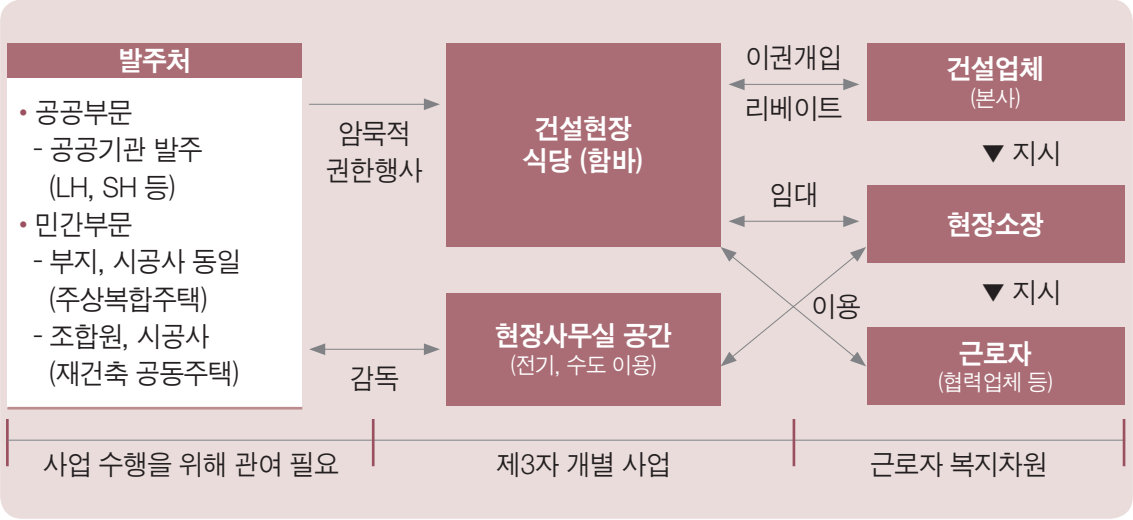
◉ 제도 개요

- 건설현장 식당업체는 시공사와 식당 업체 간 사적 계약을 통해 선정되며, 식당업체 선정 시 발주처 승인 필요

◉ 실패 내용

- 식당업체 선정 승인 시 발주처 임직원의 이권개입 가능성 상존
  - 현장식당은 독점운영으로 고수익이 발생하므로 운영권 획득 경쟁 치열

현행 건설현장 식당 부패 구조



- ○○○아파트 건설현장 식당업체 선정 시 식당 운영권 부여를 대가로 금품 등을 수수한 발주처와 시공사 간부 적발

◉ 개선 사항

- 건설현장 내 식당 운영 원칙적 금지 조치로 발주처 이권개입 원천 차단
- 건설현장 내 식당 운영이 필요한 경우, 시공사와 식당업체의 입찰을 동시에 시행함으로써 발주처 임직원의 이권개입 가능성 원천봉쇄

직무관련자 접촉 자율신고제 운영 미흡

일과 후 직무관련자와 접촉 시 자율적으로 신고하는 제도를 운영하였으나 실효성 미흡

◉ 제도 개요

- 국민권익위원회 외부청렴도 측정결과 최근 수년간 "향응수수 간접경험"이 발생하여 향응수수 방지를 위한 제도 모색 필요
- 일과 이후 협력사와 근무시간 외 접촉 시 사전신고 의무화를 위한 자율 청렴 방명록제 시행 (2015년 ~ 2018년)
- 임직원 행동강령 제13조(직무관련자와의 사적인 접촉 금지) 반영
  - (생략) ~ 특히 일과 이후 직무관련자 등과 사적 접촉 시 사전에 청렴방명록시스템에 자진신고 하여야 한다.(2017.10.31)

◉ 실패 내용

- **사전에 청렴방명록시스템에 신고함으로써 향응 제공 기회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제도였으나, 자율적으로 신고한 실적이 전사적으로 연간 2~3건에 불과해 제도운영의 실효성 부족**
- **전 직원 청렴방명록 시스템 입력 필요성 및 인식 부족으로 제도의 실효성 미흡**
- **2018년 권익위 청렴도 측정 결과 ○○발전본부 향응 경험 발생**
  - 협력업체로부터 5회에 걸쳐 총 250만원의 향응을 받은 것으로 파악
    ▶2018년 청렴도 하락(3등급)의 원인

◉ 개선 사항

- 청렴방명록제 운영을 자율신고에서 의무적 신고로 전환
- 미신고시 신분조치 제도화(공직기강 시 점검 등 모니터링 강화)

반부패 시민감시단 제도 폐지

지역인사로 구성된 반부패시민감시단을 구성하였으나 전문성 부족 및 유사성격의 기구와 중복으로 제도 폐지

◉ 제도 개요

- 기관 내 부패취약요소(부조리, 회계부정 등)를 외부의 시각에서 발굴 도출 하는 등 기관 운영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지역인사로 구성된 반부패 시민 감시단을 2012년부터 운영
  - 운영 시기 : 2015. 5. ~ 2018. 9. / 정기 2회 및 수시운영(필요시)
  - 활동 사항 : 부조리 제보 및 부패취약분야 발굴·개선 권고

◉ 실패 내용

- **반부패 시민감시단 위원들의 제도운영 관련 관심 및 전문성 부족**
  - 위원들의 활동 독려 등을 위해 우수제안에 대한 포상안을 운영하였지만 관심 부족에 따른 제안실적 저조
  - 감시 기능보다는 기관 현황설명 등의 간담회 수준으로 운영 취지 퇴색
- **유사 성격의 기존 기구들과 구성원 및 기능이 중복되어 실효성 미비**

◉ 개선 사항

- 반부패 시민감시단 제도 폐지
- 유사 성격의 기존 기구와 통합 후 기능 보완을 통한 제도개선
  - OO소통위원회로 통합운영(부패취약분야 여론수렴 및 공정성 감시 강화)
  - 2018.12. : OO소통위원회 운영지침 개정 등을 통해 운영강화

폐광지역 제한경쟁 대상 입찰 제도 악용

폐광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만들어진 제도의 취약점을 발견하여 악용하는 사례가 있어 현장실사제도를 보완하여 개선

◉ 제도 개요

- 제한경쟁 대상 입찰 제도 개요
  - 폐특법 및 회사 설립 취지에 따라 폐광지역 제한경쟁 입찰을 내부규정 (계약세칙 제21조)에 따라 운용
  - 폐광지역 업체 자격 여부를 법인 등기부등본 상의 본점 소재지로 확인
  - 실제 사무실 운영 여부를 확인하지 않는 점을 악용하여, 폐광지역 외의 업체가 서류상으로 폐광지역 진흥지구 내에 법인 설립 후 폐광지역 제한경쟁 입찰에 참가하는 사례 발생

◉ 실패 내용

- **제도상의 허점을 발견하여 실제 사무실 운영여부를 확인하지 않는 점 악용**
- **외지 업체가 서류상으로 폐광지역진흥지구 내에 법인 설립 후 폐광지역 제한경쟁 입찰에 참가하는 사례 발생**
- **폐광지역 내 소상공인의 피해 사례로 당초 취지에 반하는 불공정 사례 발생**

◉ 개선 사항

- 부당 공동행위 9개 입찰업체 수사 의뢰(사문서위조, 입찰방해) 조치
- 제한경쟁 입찰제도의 현장실사제도 도입으로 폐광지역 계약특례의 실효성 강화
- 현장실사 제도 도입으로 외지 위장업체의 폐광지역 제한경쟁 입찰 참가를 실질적으로 제한하여 폐광지역 소상공인 보호

민간분야 청렴문화 확산을 위한 윤리모니터링 추진

민간분야 청렴문화 확산을 위하여 용역업체를 대상으로 윤리성을 측정하고 그 결과에 따른 윤리성 증진 활동 지원

◉ 제도 개요

- 추진기간 : 2019.10. 1. ~ 10.31.
- 추진대상 : 공단과 3년 이상 장기계약을 맺고 있는 용역업체(무기명)
- 설문내용 : 회계 투명성 등 5개 분야 18개 항목
- 추진내용

사업담당자 및 용역직원 협의		윤리모니터링 설계		윤리모니터링 측정
• 사업담당자·용역업체 직원 미팅 - 윤리모니터링 목적, 취지 설명 - 결과에 대한 활용 방향 등	▶	• 청렴실무TF에 의한 윤리 모니터링 설계 - 측정 방식, 문항, 시기, 횟수, 측정 결과의 활용 등	▶	• 3개 업체 선정·무기명 추진 - 대표자 부패지수, 회계 투명성, 조직문화, 제도, 사규 등

◉ 실패 내용

- **용역업체 직원 대상 직접적인 설문조사 추진으로 신뢰도 저하**
  - 대부분의 설문조사 결과가 100점으로 측정(설문결과가 낮게 나올 경우 공단과의 관계가 나빠질 것을 우려하여, 설문을 제대로 수행하지 않음)
- **용역업체 평가라는 점에서 부작용 발생(설문조사 거부) 및 민간분야의 청렴 확산 기대 효과 저조**
  - 설문 결과, 윤리모니터링으로 인한 청렴의식 개선효과 저조
  - 또한, 일부 용역업체에서는 향후 계약 시 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하여 설문조사 자체를 거부하는 사례 발생

◉ 개선 사항

- 용역업체 윤리모니터링 설문조사를 없애고 청렴교육으로 변경 추진
  - 공단의 공익신고채널 안내(갑질, 과업 외 지시, 부정청탁 등)
  - 갑질신고센터 및 갑질대리신고제도 안내

적극행정 면책제도 활성화를 위한 노력과 실패

공직자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성실하고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한 결과에 대하여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이상 책임을 면제 또는 감경해 주는 제도

◉ 제도 개요

- 적극행정 활성화를 위한 홍보 추진
  - 자체 동영상 제작 및 공유(업무포털, 홍보관 등)
  - 리플릿을 제작하여 전 사무소 배부
- 전 직원 대상 적극행정 면책제도 교육 추진
- 감사규정 내 적극행정 면책제도 반영

◉ 실패 내용

- **적극행정 면책제도를 신청하였지만, 적극행정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오히려 감사대상으로 전환**
  - 적극행정 면책제도 관련 직원의견 수렴결과, 적극행정을 신청하였지만 적극행정 면책 대상이 아닐 경우 오히려 감사 대상이 되기 때문에 적극행정 신청이 꺼려진다는 의견이 다수 나타남
- **적극행정 면책제도 부작용에 따른 우려로 인하여 제도 도입 후 2019년까지 적극행정 면책제도 신청 사례 '없음'**

◉ 개선 사항

- 감사규정 내 적극행정 면책기준 완화
  - 적극행정 신청자의 신분을 공개하지 않더라도 신청 가능토록 변경
  - 고의나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없는 경우 적극행정 면책 적용
- 상담을 위한 업무포털 내 무기명 게시판 운영
- 적극행정 신청 건에 대해서는 '불문' 처리

청렴활동 마일리지 제도 운영의 직원 관심도 저조

임직원 청렴활동 제고 및 부패방지를 위해 운영 중인 청렴 마일리지 제도개선을 통한 임직원 관심도 및 실효성 제고

◉ 제도 개요

- 공사는 임직원의 자발적 청렴활동 참여 유도 및 이에 대한 공정한 평가를 통한 인센티브 제공을 목적으로 매년 '청렴 마일리지 제도' 운영 중
  - 평가 시기 : 1~10월 제도운영, 11월 부서별 청렴 마일리지 실적 평가
  - 평가 항목 : 개인평가(청렴교육 이수), 부서평가(처별 1과제 수행, 윤리활동 참여), 외부청렴도 평가 (권익위 외부청렴도 결과 반영) 등
    ※ 2019년 평가항목 비중(100%) : 개인평가 20%, 부서평가 40%, 외부청렴도 40%
  - 결과 활용 : 부서별 마일리지 평가 결과를 조직성과평가(KPI)에 반영(비중 7%)

◉ 실패 내용

- 개인평가 항목이 청렴 교육에만 한정되어 있으며, 각종 온라인 필수교육 증가로 청렴 온라인 교육(2회)에 대한 직원 피로도 증가
- 권익위 외부청렴도 평가 반영 비중(40%)이 높아 외부 민원 상대가 많은 청렴활동 참여에도 불구하고 외부청렴도 점수가 낮아 마일리지 결과 저조 및 사기 저하
- 가점부여 항목(청렴공모전 수상)의 경우 제한적 가능성으로 인해 임직원의 적극적 참여 유인을 위한 동기부여 부족
- 부서별 청렴윤리 활동 참여에 대한 점수 반영 비중이 낮고, 청렴 윤리활동 콘텐츠도 '윤리의 날 참여'에 한정 ▶ 활동 다양화로 흥미 유발 필요

◉ 개선 사항

- 2020년 청렴 마일리지 계획 수립 시, 외부 청렴도 평가 비중을 줄이고(40▶30%) 내부청렴도 향상을 위한 부서평가 비중 증대(40▶50%) 등 배점 조정
- 청렴 마일리지에 대한 직원 흥미 유발 및 참여율 제고를 위한 콘텐츠 등 제도개선
  - 사내 조직윤리문화 TF팀 구성, 다양한 청렴 콘텐츠 발굴 및 시행(2020년)
  - 온라인 청렴 필수교육을 줄여(2회→1회) 온라인 교육에 대한 직원 피로도 감소
  - 가점 항목인 청렴 공모전은 수상뿐 아니라, 참여시에도 일부 가점 부여

예산집행 통제 제도 도입 효과 저조

조직문화, 임직원 의식 등을 고려하지 않은 예산통제 강화로 인한 부작용 발생

◉ 제도 개요

〈잡비/회의비 남용 억제를 위한 예산집행지침 개정〉

- 잡비/회의비 목적 외 사용 금지
  - 업무 관련 회의 목적에 한하여 잡비/회의비 집행 가능
  - 잡비/회의비 사용 용도 구분 관리(부서 내부회의, 부서 간 회의, 외부회의)
- 집행 절차 및 증빙 강화
  - (부서 내부회의) 수기 서명록 첨부, 20만 원 이상 집행 시 사전품의 필수
  - (부서 간, 외부회의) 금액 무관 사전품의 필수, 회의 참석자 수기서명 등

  ※ 사전 품의 시 회의 주관부서의 직상위 결재권자(처, 실장) 승인 필수
- 회의비(부서 내) ↔ 회의비(부서 외) 상호전용 금지

◉ 실패 내용

- **까다로운 집행 절차 및 증빙 강화로 인한 내부직원 불만 증대**
  - 수기 서명, 회의록 작성, 사전품의 등 예산집행 소요 시간 증가
- **기존 예산집행 관행화로 부적절한 예산집행 증가**
  - 잡비 사용을 위한 타 부서와의 형식적 회의 정례화
  - 대리 수기서명, 사전품의 결재 회피를 위한 분할 결제 등 우회수단 사용
- **권익위 내부청렴도 평가항목 중 '예산집행' 항목 최하위 기록**
  - 제도시행 이전과 비교해 큰 폭의 점수 하락(2018년 : 7.89 ▶ 2019년 : 7.07)
  - 위법부당 예산집행 경험률 큰 폭 증가(2018년 : 4.42% ▶2019년 : 7.89%)

◉ 개선 사항

- 불투명한 예산집행 관행 제거를 위한 전 직원 대상 교육 시행
- 통제 위주의 예산정책에 대한 의견수렴을 통한 예산집행지침 개정 추진

부서[지사]별 청렴활동 과열 경쟁 유도

부서(지사)별 청렴수준 측정 및 향상을 위해 시행하던 부서(지사)별 인센티브가 제도 설계의 정밀성 부족으로 인해 부서(지사)별 과열경쟁 유도

◉ 제도 개요

- 윤리경영 주관부서를 포함한 각 부서(지사)별 윤리·청렴 활동 적극 참여 유도를 위한 '윤리신호등' 제도 운영
  - 평가 시기 : 매월
  - 평가 방법 : 연초 평가기준 설정 후 추진실적 매월 접수·집계
  - 결과 활용 : 홈페이지를 통한 전사 공표 및 우수부서 포상
    - 각 부서별 평가 점수를 온도계 혹은 신호등으로 표시하여 공표

◉ 실패 내용

- **월별 발표되는 부서(지사)별 결과에 대한 과열 경쟁 초래**
  - 인트라넷 로그인 동시 팝업 게시를 통한 발표 이후 다수 클레임 제기
  - 만점이 존재하지 않는 지표 운영으로 인해 부서별 무한경쟁 유도
- **과열 경쟁에 따른 업무처리 상의 부작용 발생**
  - 과다하게 많은 지표 운영 및 이에 수반하여 발생하는 실적 자료로 인해 주관부서 집계에 많은 어려움 초래
  - 검증이 불가능하거나 실적 인정 요건에 미비한 교육 건수 증가

◉ 개선 사항

- 부서별 윤리·청렴 활동 적극 참여 및 적정 수준의 경쟁을 유도할 수 있는 지수체계 도입 (윤리경영지수, 2018년부터 운영)

구 분	개선 전	개선 후
지수의 만점 존재 여부	• 만점 없음(무한대에 근접)	• 100점 만점으로 지수 운영 (일부 가감점이 있으나 최소화)
운영 지표	• 15개(2017년도)	• 9개(2019년도) (집계 방식 간소화)

- 공사 관련 지방자치단체 및 유관기관에 우수사례로 확산

공기업 청렴경영 성공 · 실패 사례집

Reference

참고자료

참고 01 | 「공기업 청렴사회협의회」 회원사 명단

[2020. 7월말 기준 / 가입일자 順 가나다 順]

연번	회원사명	기관장	본사 소재지	가입일자
1	㈜강원랜드	문태곤	강원 정선군	2018.10.11. 자격심사 2018.11.15. 가입승인
2	국립공원공단	권경업	강원 원주시	2018.10.11. 자격심사 2018.11.15. 가입승인
3	국민건강보험공단	김용익	강원 원주시	2018.10.11. 자격심사 2018.11.15. 가입승인
4	서울올림픽기념 국민체육진흥공단	조재기	서울 송파구	2018.10.11. 자격심사 2018.11.15. 가입승인
5	대한적십자사	박경서	서울 중 구	2018.10.11. 자격심사 2018.11.15. 가입승인
6	도로교통공단	윤종기	강원 원주시	2018.10.11. 자격심사 2018.11.15. 가입승인
7	서울시설공단	조성일	서울 성동구	2018.10.11. 자격심사 2018.11.15. 가입승인
8	인천국제공항공사	구본환	인천 중 구	2018.10.11. 자격심사 2018.11.15. 가입승인
9	한국가스공사	채희봉	대구 동 구	2018.10.11. 자격심사 2018.11.15. 가입승인
10	한국거래소	정지원	부산 남 구	2018.10.11. 자격심사 2018.11.15. 가입승인
11	한국공항공사	손창완	서울 강서구	2018.10.11. 자격심사 2018.11.15. 가입승인
12	한국교통안전공단	권병윤	경북 김천시	2018.10.11. 자격심사 2018.11.15. 가입승인
13	한국남동발전㈜	유향열	경남 진주시	2018.10.11. 자격심사 2018.11.15. 가입승인
14	한국남부발전㈜	신정식	부산 남 구	2018.10.11. 자격심사 2018.11.15. 가입승인
15	한국도로공사	김진숙	경북 김천시	2018.10.11. 자격심사 2018.11.15. 가입승인
16	한국동서발전㈜	박일준	울산 중 구	2018.10.11. 자격심사 2018.11.15. 가입승인
17	한국마사회	김낙순	경기 과천시	2018.10.11. 자격심사 2018.11.15. 가입승인
18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양봉민	강원 원주시	2018.10.11. 자격심사 2018.11.15. 가입승인
19	한국서부발전㈜	김병숙	충남 태안군	2018.10.11. 자격심사 2018.11.15. 가입승인

연번	회원사명	기관장	본사 소재지	가입일자
20	한국수력원자력㈜	정재훈	경북 경주시	2018.10.11. 자격심사 2018.11.15. 가입승인
21	한국수자원공사	이학수	대전 대덕구	2018.10.11. 자격심사 2018.11.15. 가입승인
22	한국승강기안전공단	김영기	경남 진주시	2018.10.11. 자격심사 2018.11.15. 가입승인
23	한국전력공사 **의장사**	김종갑	전남 나주시	2018.10.11. 자격심사 2018.11.15. 가입승인
24	한국전력기술㈜	이배수	경북 김천시	2018.10.11. 자격심사 2018.11.15. 가입승인
25	한국전자통신연구원	김명준	대전 유성구	2018.10.11. 자격심사 2018.11.15. 가입승인
26	한국중부발전㈜	박형구	충남 보령시	2018.10.11. 자격심사 2018.11.15. 가입승인
27	한국지역난방공사	황창화	경기 성남시	2018.10.11. 자격심사 2018.11.15. 가입승인
28	한국철도공사	손병석	대전 동 구	2018.10.11. 자격심사 2018.11.15. 가입승인
29	한국철도시설공단	김상균	대전 동 구	2018.10.11. 자격심사 2018.11.15. 가입승인
30	한국토지주택공사	변창흠	경남 진주시	2018.10.11. 자격심사 2018.11.15. 가입승인
31	한국환경공단	장준영	인천 서 구	2018.10.11. 자격심사 2018.11.15. 가입승인
32	한전KDN㈜	박성철	전남 나주시	2018.10.11. 자격심사 2018.11.15. 가입승인
33	한전KPS㈜	김범년	전남 나주시	2018.10.11. 자격심사 2018.11.15. 가입승인
34	한전원자력연료㈜	정상봉	대전 유성구	2018.10.11. 자격심사 2018.11.15. 가입승인
35	한국전기안전공사	조성완	전북 완주군	2018.11. 9. 자격심사 2018.11.15. 가입승인
36	그랜드코리아레저㈜	유태열	서울 강남구	2019. 3. 7. 자격심사 2019. 7.19. 가입승인
37	한국조폐공사	조용만	대전 유성구	2019. 8.16. 자격심사 2019.12.27. 가입승인
38	㈜에스알	권태명	서울 강남구	2019. 8.16. 자격심사 2019.12.27. 가입승인
39	㈜한국가스기술공사	고영태	대전 유성구	2019.12.13. 자격심사 2019.12.27. 가입승인

◉ 공기업 청렴사회협약

2019. 7.19. 체결

그동안 공기업은 국가전략산업 육성 및 사회기반시설을 구축하고 국민생활과 밀접한 재화와 서비스를 생산, 공급함으로써 국가경제 발전과 국민생활의 편익증진에 크게 기여하여 왔다.

그러나 공기업의 국가발전 기여에도 불구하고 업무수행과정에서 갑질, 채용비리, 금품수수, 청탁 등의 발생으로 인하여 국민들로부터 부패취약분야로 인식되고 있는 등 공기업의 청렴실천 강화 및 청렴문화 확산 노력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이에 우리 공기업은 공정과 신뢰가 사회를 유지하는 근본이며 관행적인 부정부패를 뿌리 뽑아야만 반칙과 특권이 없는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를 만들 수 있다는데 공감하며, 상호 신뢰와 존중을 바탕으로 공기업 공동의 청렴실천을 위하여 2018.11.15. 체결한 '공기업 청렴실천협약'을 구체화하여 '공기업 청렴사회협약'을 체결한다.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공기업 청렴사회 협약은 깨끗하고 투명한 공기업을 만들어 국민과 사회로부터 신뢰받는 공기업이 되고, 나아가 사회 전역으로 청렴문화를 확산하여 국가청렴도를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본 협약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1. "협의회"라 함은 청렴사회민관협의회 내 직능분야 협의회로 2018.11.15. 발족한 '공기업 청렴사회협의회'를 말한다.
2. "실무협의회"라 함은 공기업 청렴사회협의회 하위기구인 '공기업 청렴사회실무협의회'를 말한다.
3. "회원사"라 함은 공기업 청렴사회협의회 가입 회원사를 말한다.
4. "협약체결당사자"라 함은 본 협약을 체결하는 협의회 가입 회원사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본 협약의 적용범위는 협의회 가입 회원사로 한다.

제4조(협약체결당사자의 책무) 협약체결당사자는 본 협약의 내용을 성실히 준수하고 각 회원사 내에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제2장 윤리·청렴 경영

제5조(이해충돌 방지) 회원사는 공정한 업무수행을 통한 이해충돌 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한다.

1. 임직원이 수행하는 직무가 자신의 이해와 관련되어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해 직무를 회피 또는 제척하도록 한다.
2. 임직원이 직무관련자에 대해 노무, 조언, 자문을 제공 후 대가를 받거나, 직무와 관련된 다른 직위에 취임하는 등 이해충돌 유발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한다.
3. 임원 또는 해당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이 소속기관 또는 산하기관에 자신의 가족이 채용되도록 지시하거나, 소속기관 또는 산하기관과 본인, 가족 등이 수의계약을 체결하지 않도록 한다.
4. 기타 각 회원사의 업무특성을 반영하여 임직원의 이해충돌방지를 위한 사규를 제정하여 적극적으로 운영한다.

제6조(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 행위의 금지) 회원사는 임직원이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지위 · 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당한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한다.

1. 인가·허가 등을 담당하는 사람이 그 신청인에게 불이익을 주거나 제3자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주기 위하여 부당하게 그 신청의 접수를 지연하거나 거부하는 행위
2. 직무관련자에게 직무와 관련이 없거나 직무의 범위를 벗어나 부당한 지시·요구를 하는 행위
3. 자신이 소속된 기관이 체결하는 물품·용역·공사 등 계약에 관하여 직무관련자에게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의무 또는 부담의 이행을 부당하게 전가하거나 자신이 소속된 기관이 집행해야 할 업무를 부당하게 지연하는 행위
4.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소속 기관 또는 산하기관에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업무를 부당하게 전가하거나 그 업무에 관한 비용 · 인력을 부담하도록 부당하게 전가하는 행위
5. 그 밖에 직무관련자,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소속 기관 또는 산하기관의 권리·권한을 부당하게 제한하거나 의무가 없는 일을 부당하게 요구하는 행위

제7조(직원윤리 강화) 회원사는 직원의 윤리의식을 제고하기 위하여 부패발생 가능성을 예방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는 시책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시행한다.

1.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직무관련자로부터 금품, 향응 등을 요구하거나 받지 않도록 한다.
2.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부당한 지시나 알선, 청탁, 이권개입 등을 하지 않도록 한다.
3. 기타 각 회원사의 '행동강령'을 준수하여 청렴의무를 유지하도록 하고, 행동강령의 실효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지도, 점검 및 교육을 강화한다.

제8조(청렴교육 강화) 회원사는 직원 및 산하기관의 반부패 교육을 강화하기 위하여 청렴 교육을 체계적으로 추진한다.

제9조(사회적 책임) 회원사는 일자리 창출, 불우이웃돕기 등 소외계층지원, 재난구호 등 사회공헌 프로그램을 발굴 시행함으로써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한다.

제3장 투명경영

제10조(투명경영을 위한 노력) 회원사는 업무처리 기준·절차의 불투명성, 정보공개 거부, 잘못된 회계 관행 등이 공기업의 신뢰도를 떨어뜨릴 뿐만 아니라 시장의 건전성을 해치고 사회 안정을 저해하는 행위임을 인식하고 경영 투명성 제고를 위해 성실히 노력한다.

제11조(업무처리 과정 투명성 제고) 회원사는 업무처리과정에서 재량권이 부당하게 남용되어 부패행위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업무에 대해서 자체진단 및 제도개선을 실시하여 업무처리 기준 및 절차를 명확히 함으로써 업무처리과정의 투명성 제고에 노력한다.

제12조(투명한 정보공개) 회원사는 언론 및 일반국민의 경영정보 공시요구에 대하여 관련법령과 규정에 따라 성실하고 정직하게 응대하여 경영의 투명성 확보 및 대외관계의 신뢰성 구축에 노력한다.

제13조(투명한 회계처리) 회원사는 회계기록 기타 재무관리업무 수행 시 관련법령과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 등에 따라 사실에 근거하여 정확하고 투명하게 기록 관리한다.

제4장 부패방지 및 청렴도 제고

제14조(부패방지 체계 개선) 회원사는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부패방지 시스템 구축과 제도개선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한다.

1. 모든 업무수행 과정에서 부패유발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고 부패현상 발생시 즉시 개선할 수 있는 상시적 부패방지 추진 시스템을 운영한다.
2. 부패직원에 대하여는 징계기준을 강화하고 엄격하게 적용하여 처벌의 실효성을 확보하도록 노력한다.
3. 부패신고 및 공익신고 제도를 활성화하고 신고를 한 경우에는 실질적인 보상과 함께 어떠한 불이익도 받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4. 금품·향응 등을 제공한 협력업체에 대하여는 부정당업자 제재 등 실효성 있는 제재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한다.
5. 공공기관 채용비리 근절 등 사회적 이슈가 되는 부패예방을 위한 제도개선을 시행한다.

제15조(청렴도 제고) 회원사는 금품, 접대 안 받기, 청탁 안하고 안 받기, 경조사 검소하게 보내기 등을 실천함으로써 사회전반의 청렴도 제고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행한다.

1. 부패에 대해서는 징계기준을 강화하고 엄격하게 적용하여 회원사의 부패척결에 노력한다.
2. 회원사에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개인/단체에 대하여는 부정당업자제재 등 실효성 있는 제재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한다.

제16조(청렴정책 공유) 회원사는 각 사의 청렴정책에 대한 회원사간 공유를 강화하며 필요시 외부에 공개하여 국가 전체의 청렴문화 확산에 기여한다.

제5장 청렴협약 이행

제17조(협의회의 임무)

① 협의회는 협약체결당사자들 간의 협력수준을 높이고 협약이행과 관련한 주요 안건을 심의 의결한다.
② 협약이행과 관련된 점검·평가·확산 등의 세부사항은 실무협의회에 위임한다.
③ 협의회는 청렴사회민관협의회와 추진사항 등을 필요시 협의한다.

제6장 보 칙

제18조(신규회원사 협약체결) 공기업 청렴사회협의회에 신규로 가입하는 기관은 협의회 가입승인과 동시에 본 협약을 체결한 것으로 본다.

제19조(협약의 보완) 협약체결당사자는 협약 체결 후 협약에 대한 보완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협의회의 의결로 협약을 수정 보완한다.

부 칙 (2019. 7.19.)

(발효시기) 본 협약은 체결과 동시에 발효된다.
(공기업 청렴실천협약과의 관계) 본 협약 체결과 동시에 2018.11.15. 공기업 청렴사회협의회에서 체결한 '공기업 청렴실천협약'은 폐기된 것으로 본다.

공기업 청렴사회협의회